

# KIPF 재정동향

##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 송호신
- 직접지불제 개편 방향 / 임소영

## 주요국의 재정동향

- 미국, 프랑스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 계간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4호(통권 제8호)

2011년 12월

## [목차]

<b>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b> .....	5
<b>I. 재정정책 동향</b> .....	7
1.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	7
2.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	8
3. 최근 재정상황 .....	14
<b>II. 이슈 및 분석</b> .....	16
1.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	16
2. 직접지불제 개편 방향 .....	23
<b>III. 국내외 보고서</b> .....	39
1. 주요 보고서 요약 .....	39
2. 보고서 목록 .....	82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	105
I. 주요국 동향 .....	109
II. 미국 .....	111
III. 프랑스 .....	118
IV. 그리스 .....	125
V. 이탈리아 .....	133
VI. 아일랜드 .....	140
VII. 포르투갈 .....	151

#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 I 재정정책 동향\*

### 1.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 정부는 상반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 집행을 신중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 상반기 재정 집행률 : (2010년) 61.0%, (2011년) 56.8%
  - 정부는 11월부터 재정 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 실무회의 등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강화하고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여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금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10월 26일 결과 발표
  -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 (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
    - 254개 사업 선정기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보조사업 선별(11년 예산 5.9조원)
  - 2012년 예산안 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2011년 대비  $\Delta 1,268$ 억원 삭감( $\Delta 10.3\%$ )하였음
    - 국토부 화물차 개조 등 25개 사업폐지 · 통폐합( $\Delta 438$ 억원,  $\Delta 14.8\%$ )
    -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 감축( $\Delta 696$ 억원,  $\Delta 21.3\%$ )
    -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방식 변경( $\Delta 134$ 억원,  $\Delta 2.2\%$ )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hspark@kipf.re.kr)

## SECTION 1 >>

〈표 1-I-1〉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개, 억원, %)

		사업수	'11	'12안	증감	증가율
합 계		87	12,364	11,096	△1,268	△10.3
○ 폐지	소 계	25	2,953	2,515	△438	△14.8
	즉시 폐지	9	103	-	△103	△100.0
	단계적 폐지	7	245	112	△133	△53.5
	통폐합	9	2,605	2,403	△202	△7.8
○ 조건부 존치	소 계	62	9,411	8,581	△830	△8.8
	단계적 감축	17	3,270	2,574	△696	△21.3
	사업방식변경	45	6,141	6,007	△134	△2.2

- 이에 따라 2012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금년 대비 64개 감소하였음

	'10년	'11년	'12년(안)
■ 보조금 총계(조원)	42.7	43.7	45.3
■ 보조사업 수(개)	2,081	2,053	1,989

## 2.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 (국세세입 예산안) 9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
  -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5.9조원(2011년 전망 192.8조원 대비 +13.1조원)
    - 2011년 국세수입은 192.8조원(2011년 예산 187.6조원 대비 +5.2조원) 전망
  -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로 6.8%(13.1조원) 증가
  -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여 2015년 조세부담률은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이는 2011~20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

〈표 1-I-2〉 2012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세 목	2011년		2012년 예산	2011예산 대비		2011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876,361	1,928,405	2,059,250	182,889	(9.7)	130,844	(6.8)
○ 소득세	400,379	423,410	460,299	59,920	(15.0)	36,889	(8.7)
• 근로소득세	164,983	189,275	205,695	40,712	(24.7)	16,420	(8.7)
• 종합소득세	64,293	78,820	86,596	22,303	(34.7)	7,776	(9.9)
• 양도소득세	86,977	70,214	74,936	△12,041	(△13.8)	4,722	(6.7)
○ 법인세	413,001	441,825	444,578	31,577	(7.6)	2,753	(0.6)
○ 상속증여세	30,921	33,928	36,861	5,940	(19.2)	2,933	(8.6)
○ 부가가치세	529,373	521,006	568,039	38,667	(7.3)	47,033	(9.0)
○ 개별소비세	50,124	53,196	60,377	10,253	(20.5)	7,181	(13.5)
○ 증권거래세	39,207	40,771	42,480	3,273	(8.3)	1,709	(4.2)
○ 인지세	5,324	6,404	6,108	784	(14.7)	△296	(△4.6)
○ 과년도수입	45,303	42,488	44,437	△866	(△1.9)	1,949	(4.6)
◇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	111,155	136,863	13,195	(10.7)	25,708	(23.1)
◇ 관세	113,657	121,567	116,061	2,404	(2.1)	△5,506	(△4.5)
◇ 교육세	46,018	41,698	47,696	1,678	(3.6)	5,998	(14.4)
◇ 종합부동산세	10,681	10,870	10,631	△50	(△0.5)	△239	(△2.2)
◇ 주세	26,465	26,476	29,481	3,016	(11.4)	3,005	(11.3)
◇ 농어촌특별세	42,240	53,611	55,339	13,099	(31.0)	1,728	(3.2)

〈표 1-I-3〉 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국세수입	177.7	192.8	205.9	224.2	242.6	262.3
(증가율)		(8.5)	(6.8)	(8.9)	(8.2)	(8.1)
• 지방세수입	49.2	52.5	56.6	60.9	65.3	70.0
• 실질성장률	6.2	4.5	4.5	4.5	4.5	4.5
(경상성장률)	(10.1)	(8.2)	(7.6)	(7.6)	(7.3)	(7.1)
〈조세부담률〉	19.3	19.3	19.2	19.4	19.5	19.7

- (조세지출예산서) 9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2010년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

〈표 1-I-4〉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8(실적)	2009(실적)	2010(실적)	2011(잠정)	2012(전망)
○ 국세감면액(A)	287,827	310,621	299,997	306,194	319,871
○ 국세수입총액(B)	1,673,060	1,645,407	1,777,184	1,928,405	2,059,250
○ 국세감면율*(A/A+B)	14.7%	15.8%	14.4%	13.7%	13.4%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0%	14.8%	15.5%	15.1%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2011년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2010년도 29조 9,997억원 대비 6,197억원 (2.1%)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
  - 주요 증가요인 :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R&D비용세액공제(+4,535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원) 등
  - 주요 감소요인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4,202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938억원) 등
- 2012년 국세감면 전망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2011년도 30조 6,194억원 대비 1조 3,677억원(4.5%)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
  - 주요 증가요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 R&D비용세액공제(+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예정(+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
  - 주요 감소요인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817억원), 바이오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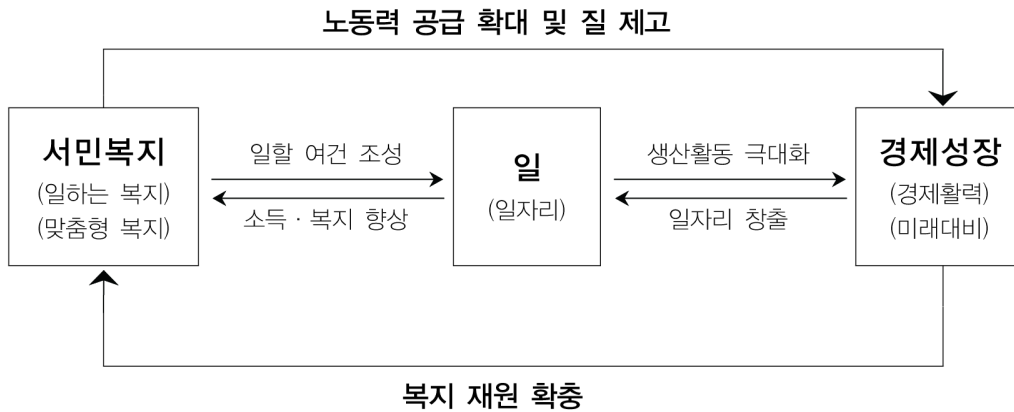
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 예정(△1,691억원) 등

□ **(정부예산안)** 정부는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

-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지출규모 326.1조원, 5.5% 증가
  - 2012년 예산(안)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
  - 내년도 재정지출은 금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재정수입은 금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 수준
  - 재정수지(GDP 대비)는 △1.0%로 2011년(△2.0%) 대비 1.0%p 개선되고, 국가채무(GDP 대비)도 32.8%로 2011년(35.1%)보다 2.3%p 감소

	2011예산		2012(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지 출	309.1조원	5.5%	326.1조원	5.5%
◇ 총 수 입	314.4조원	8.1%	344.1조원	9.5%

-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
  -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
    -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0.2조원), 3단계(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지원(0.5→0.6조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0.1→0.2조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6.7→17.5만명)
    -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 :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670억원) 등



-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2011년 20.8 → 2012년 25.2조원, +4.4조원, 21.0% 증)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지 포폴리즘과 차별화하여,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2011년 56.4 → 2012년 61.0조원, +4.5조원, 8.1% 증)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
    -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과 함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
- 재정수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13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 관리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
    -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
      - 성장률 전망 : 2011~2015년 4.5% 수준
      -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은 연평균 7.2%, 총지출은 4.8% 증가

- 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에 흑자(GDP 대비 0% 수준) 전환, 20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2015년 GDP 대비 0.3%)
  - 국가채무 : 2013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 미래대비 투자 :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
  -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 자연재해 예방,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공적개발 원조 등 국격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중기재정계획 달성을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노력
  - 성과 미흡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사업 정비, 예산급증·낭비 우려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지출효율화 추진
  - 아울러,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관리시스템 정비
- (성과계획서) 정부는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과 함께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제출
- 2012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대상은 49개 정부부처로 전년에 비해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가되었음
  - 49개 부처의 성과목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 SECTION 1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sup>주)</sup>	성과지표
189	479	694	2,156	5,068

주: 일반재정(1,673개), 정보화(243개), R&D(240개)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사업수행 실적, 성과달성 여부 등을 토대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
- (2012년 예산집행) 정부는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방침을 발표
  - 내년도 재정은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
    - 상반기 재정집행률(%) : (2004~2008년) 54.6% (2009년) 64.8% (2010년) 61.0% (2011년) 56.8%
  - 일자리, SOC, 환경투자 등 주요 예산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 투자도 유도

### 3. 최근 재정상황

- 지난 9월까지 집행된 재정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입은 세입을 크게 초과달성했던 지난해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출진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듦 전망
  - 재정수입의 경우 9월까지의 누적진도율이 80.2%로 세입예산 목표를 8.7조원이나 초과달성했던 지난해(79.8%)보다 높고 지난 5년평균(78.5%)보다도 높아 금년에도 전년에도 이어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지출은 9월 누적진도율이 75.7%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조했던 지난해(76.5%)보다 낮은 것은 물론 지난 5년평균(77.1%)보다도 낮은 수준

- 이에 9월까지의 누적 관리대상수지는 8.3조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전년(16.5조원 적자)의 절반수준에 그쳐, 금년도 적자목표 25조원보다 훨씬 작은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표 1-I-5〉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소계	경상수입	자본수입	소계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2004년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년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년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년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년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년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43,250	
2010년	270,923	268,540	2,383	254,231	216,937	34,209	3,084	16,692	-13,015	
2011년	분예산	284,812	281,065	3,747	279,513	238,689	36,240	4,585	5,299	-25,000
	1월	32,936	32,807	129	27,300	24,333	2,573	394	5,636	3,795
	2월	47,653	47,392	261	48,746	41,156	6,043	1,548	-1,094	-4,852
	3월	78,692	78,298	394	83,125	71,205	10,004	1,917	-4,433	-13,286
	4월	103,561	103,032	530	106,821	90,917	13,258	2,646	-3,259	-14,832
	5월	136,321	135,073	1,247	127,525	108,702	16,419	2,405	8,795	-5,501
	6월	154,325	152,845	1,480	156,670	133,171	20,986	2,513	-2,345	-19,194
	7월	180,680	179,115	1,565	173,251	148,556	22,146	2,549	7,430	-11,873
	8월	204,594	202,921	1,673	189,370	163,260	23,532	2,577	15,224	-6,385
9월	228,495	226,742	1,752	211,706	184,426	25,490	1,790	16,789	-8,272	
9월까지의 누적진도비	80.2%	80.7%	46.8%	75.7%	77.3%	70.3%	39.0%	-	-	
(전년도)	(79.8%)	(80.1%)	(54.5%)	(76.5%)	(81.2%)	(57.2%)	(57.7%)	-	-	
(5년 평균)	(78.5%)	(78.6%)	(77.3%)	(77.1%)	(79.7%)	(67.4%)	(67.7%)	-	-	

## II 이슈 및 분석

### 1.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 가. 재정위험과 공적신용보증

- 효과적인 재정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직접채무뿐 아니라 그 규모가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발채무의 대표적인 예가 공적신용보증임
  
- 재정위험의 유형은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 그리고 직접적이냐 우발적이냐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는 재정의 범주에 속하느냐의 여부가 관건
  - 직접·간접은 재정부담의 발생이 상황에 의존하느냐 여부가 관건

〈표 1-Ⅱ-1〉 Polackova(1998)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위험의 분류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 확정채무 > - 국가채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차입금 및 채권 발행	- 보증채무 - 신용보증 : 정부출연 신용보증기금 - 기타 : BTO 등 민자투자
암묵적 채무	< 미확정채무 >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 기타 BTL 등 민자투자 관련 채무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부채	- 공기업 채무 - 중앙은행 채무 : 통안증권 - 예금보험 : 공적자금 -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출처: 박형수 외(2007)

\*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song@kipf.re.kr)

## 나.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측정

### □ 공적 신용보증의 재정위험 측정

- 정부가 공적신용보증기금에 투입해야 할 출연금의 기댓값을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으로 측정

### □ 출연금 결정모형을 활용한 재정위험 측정

- 홍범교 · 박기백 · 전택승(2003)과 박형수 외(2007)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 가정 1: 보증료수입( $F_t$ )과 대위변제금액( $P_t$ )은 각각 보증규모의 함수이다. 단순화해서 보증규모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F_t = \theta_f G_t, P_t = \theta_p G_t, \text{ 여기서 } \theta_f \text{는 보증료율, } \theta_p \text{는 대위변제율}$$

- 가정 2: 신용공급은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한다.  $k_0 = \frac{G_t}{A_t}$ .

- $A_t = (1 + r_t)A_{t-1} + (R_t - C_t)$ 로부터 다음의 이론 출연금( $W_t$ )식이 얻어짐

$$W_t = \left(\frac{1}{k_0} + \theta_p - \theta_f\right)G_t - (1 + r_t)A_{t-1} + S_t$$

여기서  $A_t$ : t기의 기금재산,  $G_t$ : 보증규모(보증잔액),  $r_t$ : 재산운용수익률,  $R_t$ : 재산운용외 수입으로 보증료수입( $F_t$ ), 이론 출연금( $W_t$ ) 등,  $C_t$ : 발생한 비용이며 주로 대위변제금액( $P_t$ )과 기금관리비( $S_t$ )로 구성됨

- $W_t$ 는 이론 출연금이며 여기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면 정부 출연금이 됨
- 대위변제율이 클수록, 적정운용배수율이 작을수록, 보증료율이 적을수록, 재산운용수익률이 낮을수록, 관리비가 클수록 필요한 출연금 규모는 커짐을 알 수 있음

다.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측정

□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베이스라인 전망

① 기술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보증잔액 증가율 4.6%: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운용배수 7.5: 최근 5년('06~'10)간 평균
-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1.7%: 최근 5년('06~'10) 평균<sup>1)</sup>
- 기금운영비(인건비 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 금리(3년만기 회사채 기준) 5.7%: 최근 5년('06~'10) 평균
- 대위변제율(순증 기준) 3.8%: 최근 5년('06~'10)간 평균
-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4.4%: 최근 3년('06~'10)간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표 1-Ⅱ-2〉 기술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대위변제율	3.8	3.8	3.8	3.8	-
이론 출연금	889	5,686	5,922	6,168	18,666
금융기관출연금	4,734	4,941	5,157	5,383	20,215
정부출연금	0	745	765	785	2,296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기보의 보증료수입은 면허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 보증잔액 증가율 -13.0%: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운용배수 13.8: 최근 5년('06~'10)간 평균
-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5%: 최근 5년('06~'10) 평균
-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 대위변제율 5.1%: 최근 5년('06~'10)간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표 1-Ⅱ-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0	3,095	2,792	2,532	8,419
금융기관출연금	1,946	2,173	2,428	2,712	9,258
정부출연금	0	922	365	0	1,287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보증잔액 증가율 20.3%: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운용배수 12.6: 최근 5년('06~'10)간 평균
-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3%: 최근 5년('06~'10) 평균
-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 대위변제율 0.3%: 최근 5년('06~'10)간 평균
-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11.7%: 최근 3년('08~'10)간 평균

## SECTION 1 >>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표 1-Ⅱ-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1,037	978	1,157	1,373	4,546
금융기관출연금	N.A.	N.A.	N.A.	N.A.	N.A.
정부출연금	1,037	978	1,157	1,373	4,546

### ④ 신용보증기금

####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보증잔액 증가율 2.9%: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운용배수 7.9: 최근 5년('06~'10)간 평균
-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1.3%: 최근 5년('06~'10) 평균
-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 대위변제율 3.2%: 최근 5년('06~'10)간 평균
-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2.0%: 최근 3년('08~'10) 평균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표 1-Ⅱ-5〉 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6,513	10,659	10,971	11,292	39,434
금융기관출연금	7,423	7,571	7,722	7,877	30,593
정부출연금	0	3,088	3,248	3,415	9,751

## 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보증잔액 증가율 18.5%: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운용배수 10.6: 최근 5년('06~'10)간 평균
-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6%: 최근 5년('06~'10) 평균
-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 대위변제율 1.6%: 최근 5년('06~'10)간 평균
-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26.8%: 최근 3년('08~'10) 평균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 '11~'14 정부출연금 전망

〈표 1-Ⅱ-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0	5,815	6,799	7,962	20,576
금융기관출연금	5,774	7,322	9,284	11,773	34,153
정부출연금	0	0	0	0	0

## 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개의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을 측정한 결과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 2011~2014년 동안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 출연금은 9조 1,64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남
-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2011~2014년 동안 1조 7,880억원으로 전망되었음
  -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표 1-Ⅱ-7〉 베이스라인 이론 출연금 전망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기술신용보증기금	889	5,686	5,922	6,168	18,666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0	3,095	2,792	2,532	8,41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37	978	1,157	1,373	4,546
신용보증기금	6,513	10,659	10,971	11,292	39,43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5,815	6,799	7,962	20,576
합 계	8,439	26,233	27,641	29,327	91,641

〈표 1-Ⅱ-8〉 베이스라인 정부 출연금 전망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기술신용보증기금	0	745	765	785	2,296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0	922	365	0	1,28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37	978	1,157	1,373	4,546
신용보증기금	0	3,088	3,248	3,415	9,7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0	0	0	0
합 계	1,037	5,733	5,535	5,573	17,880

## 2.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 가. 우리나라의 소득보전정책 운영 현황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보상하고 시장 수급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줄여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농정 수단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기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진 6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직불제가 가진 역기능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개편 논란이 있었음
  - 개별 품목에 대한 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어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을 유발
  -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및 농가에 대한 지원 효과 감소
  - 따라서 직불제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복잡한 직불제는 단순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음

#### ① 쌀 소득보전직불제(이후 쌀 직불제)

- 목적
  -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
- 지원조건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의 다원적 기능 유지의 목적으로 지불되는 고정직불과 쌀 가격 하락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변동직불로 이루어짐
  - 고정직불금: 기준연도의 농지면적당
  -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 당해연도 쌀 가격) × 0.85 × 해당 논면적
- 재원
  - (고정직불)농특회계, (변동직불)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sylim@kipf.re.kr)

② 경관보전직불제

목적

- 지역 특색에 맞는 작물을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 지급(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비용 지원(30만원/ha)

재원

- 농특회계

③ FTA 피해보전직불제

목적

-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 및 가격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

지원조건 (2011년 7월 현재)

- 기준가격: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  $\times 0.85$
- 지급단가: (기준가격-당해연도 가격)  $\times 0.90$

재원

- FTA기금, 수산발전기금

④ 경영이양직불제

목적

- 쌀 전업농 육성을 목적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집중시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원조건

- 최근 10년 이상 영농을 한 65~70세의 농업인이 소유한 논을 농어촌공사나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 매월 ha당 25만원씩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표 1-Ⅱ-9〉 직접지불제도 실시 현황

유형	연도	대상농지 및 대상자	지원단가
쌀소득보전 <sup>1)</sup>	고정	2005 '98~'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	70만원/ha
	변동	2005 벼 재배농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85%
친환경농업	1999	친환경인증 농가	밭: (유기·전환)794천원/ha (무농약)674천원/ha (저농약)524천원/ha 논: (유기·전환) 392천원/ha (무농약)307천원/ha (저농약)217천원/ha
경관보전	2005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조건불리	2004	조건불리지역 밭, 과수원, 초지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FTA피해보전	2004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기준조수입 - 당해연도 평균 조수입) × 0.85
경영이양	1997	65~74세(벼농사 영농 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매월 250천원/ha

주: 논농업직불제(2001년 시작)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2002~2004 시행)가 2005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통합됨  
 자료: 김태곤 외(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9-68

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목적

- 조건불리지역의 불리성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지원조건

- 대상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리, 대상농지는 대상지역 내의 밭과 초지로 한정
- 밭은 40만원/ha, 초지는 20만원/ha

재원

- 농특회계

⑥ 친환경농업직불제

목적

- 친환경농법 시행농가에 대하여 농법 이행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3년간 지급. 지급한도 면적은 농가당 0.1 ~ 5.0ha
- 지급단가: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재원

- 농특회계

〈표 1-Ⅱ-10〉 연도별 직불금 예산

(단위: 억원)

예산항목	2008	2009	2010	2011
쌀소득보전직불제	12,446	7,764	12,601	14,188
FTA피해보전직불제	1,000	400	265	265
경영이양직불제	300	845	699	623
친환경농업직불제	263	423	520	379
경관보전직불제	26	96	157	13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3	336	417	388
직불제 예산(A)	14,079	9,864	14,659	15,982
농업농촌예산(B)	123,240	121,505	120,808	121,980
직불제 예산 비중(A/B)(%)	11.4	8.1	12.1	13.1

주: 농업농촌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

자료: 농림부(2008),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부(2009),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부(2010),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나. 직불제의 개편논의 동향

- 복잡하고 중복되는 직불제를 통합하여 예산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직불제 개편 논의는 쌀 직불제의 개선과 직불제 전반의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① 쌀 직불제의 개선방안

-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 공급과잉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짐
  - 쌀 소비 감소 및 공급 과잉은 쌀 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변동직불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향후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임

- 양승룡(2009)<sup>2)</sup>
  - 쌀 직불제, 생산조정제, 전작보상제 등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 제시
  
- 박동규 외(2011)<sup>3)</sup>
  - 생산중립적 직불제로의 개편
  - 목표가격의 고정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
  -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 격리
  - 쌀 직불제는 소득안정형 직불과 별도로 운영
  
- 박성재 외(2011)
  - 1안: 시장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목표가격 설정+재고관리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
  - 2안: 쌀 소득보전직불제+생산조정제+전작보상제
  - 3안: 목표가격 고정+변동직불제, 일시적 공급 초과 물량의 시장 격리와 소비 촉진을 통해 수급 안정 도모

## ② 직불제의 제도적 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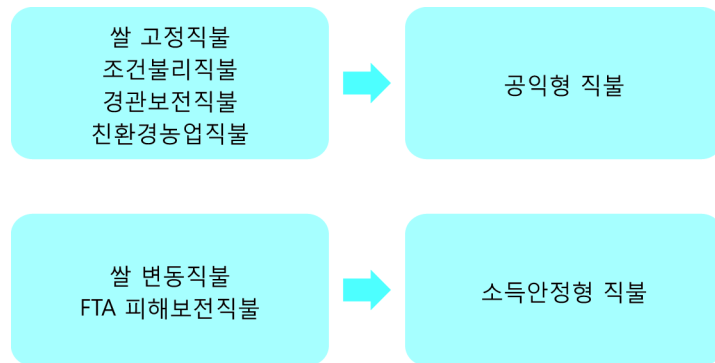
-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
  - 기존의 직불제를 통합하여 농가단위의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도입
    - 공익형 직불제: 환경보전, 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함
    - 경영안정형 직불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함
  - 농가단위 직불제
    - 2004년 정부 발표
    - 20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 확정

2)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3)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법률」(2009)을 근거로 농가단위 직불제가 법적으로 보장됨
- 현재 도상연습중에 있음

[그림 1-Ⅱ-1]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개편 방안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농림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음<sup>4)</sup>
  - 현행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쌀 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저농약)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통합, 친환경직불(무농약, 유기농) 및 경관보전직불을 가산형으로 설계하였음. 또한 쌀 변동직불을 농가소득안정직불로 전환하고 1ha 미만의 농가는 대상 농가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김태곤 외(2011)는 쌀 고정직불과 친환경직불(저농약)을 공익형 직불로 통합하고, 밭 고정직불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쌀 변동직불은 경영안정형 직불로 재편하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경영안정형 직불을 지급하도록 제시하였음<sup>5)</sup>
- 박성재 외(2011)는 품목별 소득지불제도를 받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재정부담 및 가격지지 효과 등을 비판하며 공익형/경영안정형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또한 쌀 직불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낮추어가는

4)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5)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중립직불을 먼저 실시하고 생산 조정제를 통해 일시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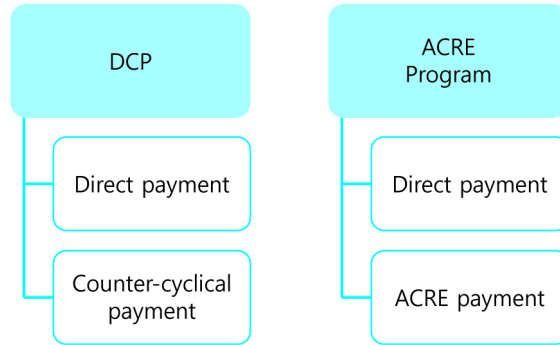
#### 다. 외국의 소득보전제도

- 외국에서도 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주요국의 소득안정제도의 특징
  - 생산과의 연계를 차단하여 직불제가 시장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함(decoupling)
  - 직불제를 단순화하여 농가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
  - 직불제를 환경보전 및 농촌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정책으로부터 농촌정책 및 환경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① 미국

- 미국은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 Direct and Counter-cyclical Payment Program (DCP)과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농민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 DCP와 ACRE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방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Direct payment는 기준 재배면적에 수확량 및 일정 직불요율을 곱하여 지급되는 고정형 직불임
  - Counter-cyclical payment와 ACRE payment는 각각 가격 및 소득이 기준 가격 및 소득 이하로 하락할 때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격 및 소득과 연동되어 있음

[그림 1-Ⅱ-2]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 □ DCP 지급액

- Direct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3.3% × 농가의 단위 수확량 × 직불요율
- Counter-cyclical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5% × 농가의 단위 수확량 × (목표가격 - 유효가격), 유효가격 = 직불요율 + (전국 평균 시장가격 또는 전국 평균 이자율 중 높은 것)

## □ ACRE 프로그램 지급액

- Direct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3.3% × 농가의 단위 수확량 × 직불요율 × 0.80
- ACRE payment:

$$\boxed{\text{재배면적의 83.3\%}} \times \boxed{\text{Farm Productivity Index Factor}} \times \boxed{\text{주별 보장소득 - 실제 주 평균 소득 또는 주별 보장소득의 25\%중 낮은 것}}$$

Farm Productivity Index Factor

$$= \frac{\text{과거 5년간 해당 농가 수확량의 Olympic 평균}}{\text{과거 5년간 해당 주별 수확량의 Olympic 평균}}$$

단, Olympic 평균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 □ ACRE 프로그램 발동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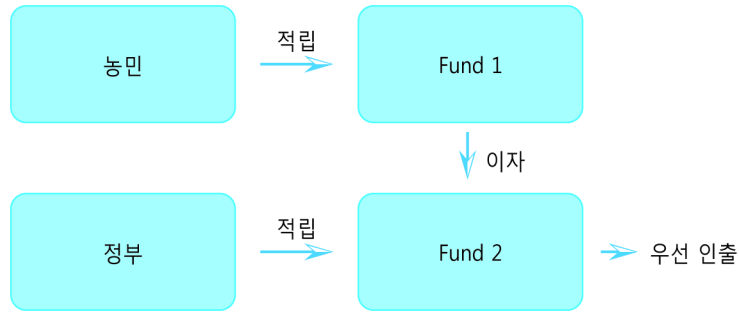
- ACRE State Trigger와 ACRE Farm Trigger가 모두 만족되어야 발동됨
- ACRE State Trigger: 주별 보장소득 > 실제 주 평균소득

- ACRE Farm Trigger: 농가 보장소득 > 실제 농가소득

## ② 캐나다

- 캐나다의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AgriInvest와 AgriStability로 나누어져 있음
  - AgriInvest: 농가 소득이 기준 소득의 85%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 AgriStability: 농가 소득이 기준 소득의 85%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 캐나다의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하락에 대한 보전을 정부와 농가가 나누어 한다는 것이 특징임
  - 농민들은 자의에 따라 소득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소득
  - 농민들의 적립금과 동등한 액수를 정부가 matching하여 펀드를 조성
- AgriInvest
  - 매년 참여 농가는 자신의 Allowable Net Sales(ANS)의 1.5배까지 적립할 수 있음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해당 농가의 적립금만큼 Fund 2에 적립
  - 소득 하락시 Fund 2에서 우선 인출되며 Fund 2가 소진되면 Fund 1에서 인출함
  - ANS는 농산물 총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며 농가당 1,500만캐나다달러까지 인정됨
  - 기준 소득은 과거 5개년의 소득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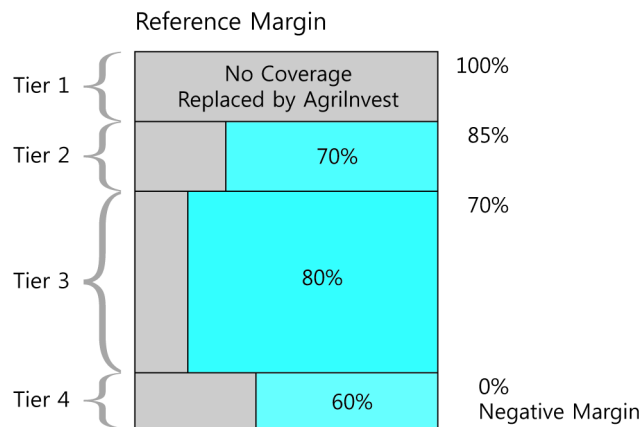
[그림 1-Ⅱ-3] AgriInvest 운용 개요



□ AgriStability

- 당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의 85%보다 낮을 경우 손실분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300만캐나다달러의 상한이 있음
- 손실 수준에 따라 차등 보전됨
  - 당년 소득이 기준 소득의 70~85%인 경우 손실액의 70%를 보전받으며, 0~70%인 경우 손실액의 80%를 보전받을 수 있음
  - 당년 소득이 적자일 경우에는 손실액의 60%를 보전받음(그림 참조)

[그림 1-Ⅱ-4] AgriStability의 손실 보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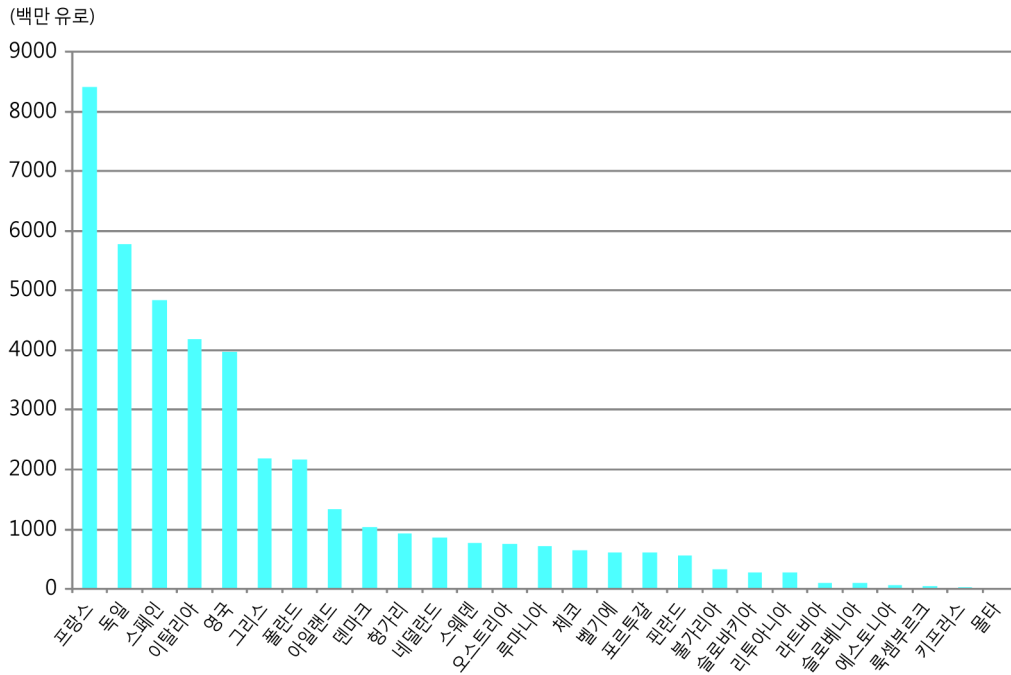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s, AgriStability Program Handbook

③ EU

- EU는 2003년에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개혁하면서 농가 단위의 단일 직불금 제도(Single Payment Scheme, SPS)를 도입하고, 직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였음
- 직불금의 수령 조건은 농가가 농지를 농업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공공보전, 가축 및 작물의 건강,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준(Cross-Compliance)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불금이 삭감되거나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직불금의 지급은 1년에 한번 이루어지며 재배작물의 종류나 생산량과 상관없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회원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SPS를 도입할 때 회원국은 다음 세 가지 옵션에 따라 직불금을 결정할 수 있음
  - 과거 기준연도 동안 받았던 직불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일 직불금을 결정(농가별로 상이한 직불금)
  - 지역 내의 전체 직불금의 합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농가들이 동일한 액수의 직불금을 수령
  - 이상 두 모형의 혼합 형태
- 새로 도입된 단일 직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이전에 운영되던 직불금을 수령하였어야 하므로 과거의 직불금 규모에 따라 단일 직불의 규모가 결정됨
- 회원국 중 과거의 농가 보조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단일 직불금의 상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Ⅱ-5] 회원국별 2010년도 SPS 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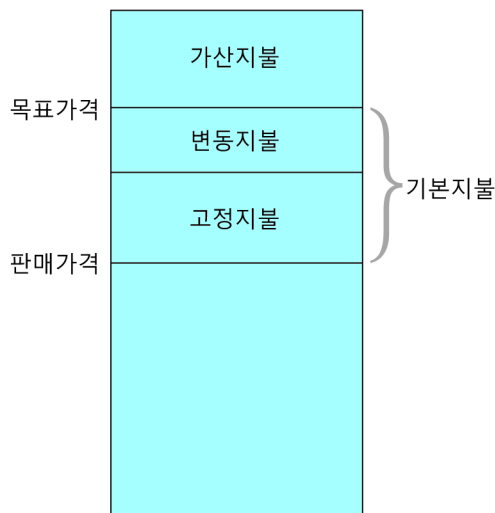
## ④ 일본

- 일본은 2000년에 도입한 중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를 시작으로 2007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생산조건불리보정대책, 농지·물·환경보전대책을 통해 농가에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 2009년에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호별소득보상제도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범시행하고 있음
- 대상품목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품목들이며 쌀, 맥류, 대두를 비롯하여 잡곡, 유지작물, 사료작물 등이 해당됨
- 지불방식은 기본지불과 가산지불로 나누어짐
  - 기본지불: 목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 가격에 상관없이 지불되는 고정지불과 고정

지불과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변동지불로 나누어짐. 고정지불은 품목별 표준 생산비와 표준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본으로, 수급 동향에 따라 달라짐

- 가산지불: 다음의 다섯 가지 특정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지급. ① 쌀로부터 작물 전환, ② 고품질 농산물 생산, ③ 친환경농업 실시, ④ 판매 활동, ⑤ 구조개선

[그림 1-Ⅱ-6]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지불구조



### 라.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는 아직도 품목의 생산실적과 연계되어 있어 직불제가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목표를 가진 직불제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여전히 도상연습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11년에는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직불제의 시행이 발표됨으로써

직접지불제가 전 작목으로 확대되어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

- 향후 직불제 개편 논의는 다음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 반영
  - 예산 제약
  - 현실 적합성 및 실행의 용이성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보조금 규정에 합치
  
- 향후 직불제의 개편은 생산실적과 직불금의 연계를 차단하여 직불제가 시장을 교란하는 역효과를 제거하고, 정책 대상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지원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농가별 소득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가의 경영상태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참고문헌〉

- 김태곤 · 정호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 120
- 김태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9-68, 2009
- 농림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
- \_\_\_\_\_,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 \_\_\_\_\_,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 박동규 · 김창길 · 임송수 · 송미령 · 김배성 · 박경철,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4-6, 2004
- 박성재 · 박준기 · 송주호 · 채광석 · 문한필,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40
- 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s, AgriStability Program Handbook available at <http://www.afsc.ca/Default.aspx?cid=745&lang=1>
- 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s, AgriInvest Program Handbook available at <http://www4.agr.gc.ca/AAFC-AAC/display-afficher.do?id=1291909724519&lang=eng>
- USDA, 2009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ACRE) Program Fact Sheet
- USDA, Direct and Counter-cyclical Payment (DCP) Program Fact Sheet
- Europa, Summaries of EU legislation available at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agriculture/general\\_framework/ag0003\\_en.htm](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agriculture/general_framework/ag0003_en.htm)
- European Commission, Fact Sheet: The Single Payment Scheme available at [http://ec.europa.eu/agriculture/direct-support/pdf/factsheet-single-payment-scheme\\_en.pdf](http://ec.europa.eu/agriculture/direct-support/pdf/factsheet-single-payment-scheme_en.pdf)

### Ⅲ 국내외 보고서

####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년 9월 발표)\*

##### 1) 세계 경제전망 추세

- **(동향)**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sup>1)</sup>가 크게 확대
  -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수요 회복세가 더디며 국가부채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
  -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경기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조세연구원 김정원 연구원(kimjw@kipf.re.kr)

1) 특정 분야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잠재적 손실. 비교적 국공채류가 하방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SECTION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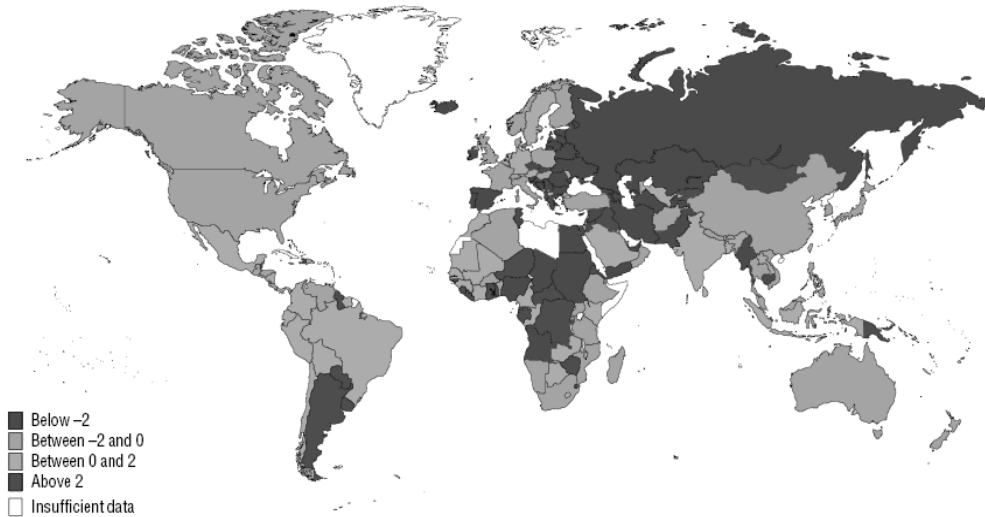
〈표 1-Ⅲ-1〉 세계경제전망

(단위: % 변화율)

	Year over Year						Q4 over Q4		
	2009	2010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une 2011 WEO Projections		Estimates	Projections	
			2011	2012	2011	2012	2010	2011	2012
<b>World Output<sup>1</sup></b>	-0.7	5.1	4.0	4.0	-0.3	-0.5	4.8	3.6	4.1
<b>Advanced Economies</b>	-3.7	3.1	1.6	1.9	-0.6	-0.7	2.9	1.4	2.2
United States	-3.5	3.0	1.5	1.8	-1.0	-0.9	3.1	1.1	2.0
Euro Area	-4.3	1.8	1.6	1.1	-0.4	-0.6	2.0	1.1	1.6
Germany	-5.1	3.6	2.7	1.3	-0.5	-0.7	3.8	1.6	2.0
France	-2.6	1.4	1.7	1.4	-0.4	-0.5	1.4	1.4	1.7
Italy	-5.2	1.3	0.6	0.3	-0.4	-1.0	1.5	0.4	0.4
Spain	-3.7	-0.1	0.8	1.1	0.0	-0.5	0.6	0.7	1.7
Japan	-6.3	4.0	-0.5	2.3	0.2	-0.6	2.5	0.5	2.0
United Kingdom	-4.9	1.4	1.1	1.6	-0.4	-0.7	1.5	1.5	1.7
Canada	-2.8	3.2	2.1	1.9	-0.8	-0.7	3.3	1.4	2.5
Other Advanced Economies <sup>2</sup>	-1.1	5.8	3.6	3.7	-0.4	-0.1	4.8	3.8	3.9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0.7	8.4	4.7	4.5	-0.4	0.0	6.0	5.2	4.7
<b>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sup>3</sup></b>	2.8	7.3	6.4	6.1	-0.2	-0.3	7.4	6.4	6.4
Central and Eastern Europe	-3.6	4.5	4.3	2.7	-1.0	-0.5	5.3	2.9	2.7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6.4	4.6	4.6	4.4	-0.5	-0.3	4.6	3.8	3.9
Russia	-7.8	4.0	4.3	4.1	-0.5	-0.4	4.4	4.0	3.6
Excluding Russia	-3.0	6.0	5.3	5.1	-0.3	0.0	...	...	...
Developing Asia	7.2	9.5	8.2	8.0	-0.2	-0.4	9.0	8.1	8.1
China	9.2	10.3	9.5	9.0	-0.1	-0.5	9.8	9.3	9.1
India	6.8	10.1	7.8	7.5	-0.4	-0.3	9.2	7.0	7.5
ASEAN-5 <sup>4</sup>	1.7	6.9	5.3	5.6	-0.1	-0.1	6.0	5.4	5.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7	6.1	4.5	4.0	-0.1	-0.1	5.4	4.1	3.9
Brazil	-0.6	7.5	3.8	3.6	-0.3	0.0	5.0	3.8	3.8
Mexico	-6.2	5.4	3.8	3.6	-0.9	-0.4	4.2	3.7	3.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6	4.4	4.0	3.6	-0.2	-0.8	...	...	...
Sub-Saharan Africa	2.8	5.4	5.2	5.8	-0.3	-0.1	...	...	...
<i>Memorandum</i>									
European Union	-4.2	1.8	1.7	1.4	-0.3	-0.7	2.1	1.3	1.9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3	4.0	3.0	3.2	-0.4	-0.5	...	...	...

-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11년 9월 WEO)은 2011년 6월 세계경제전망 대비 0.3%p 감소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2년 또한 6월 세계경제전망 대비 0.5%p 감소한 4.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이는 2010년 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둔화된 수치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01년 1.6%에서 2012년 1.9%로 증가
  - 신흥국의 경우,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재정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6.4%에서 2012년 6.1%로 하락

[그림 1-Ⅲ-1] 최근 경제성장률과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  
(2011-12년과 2000-07년 연성장률 %p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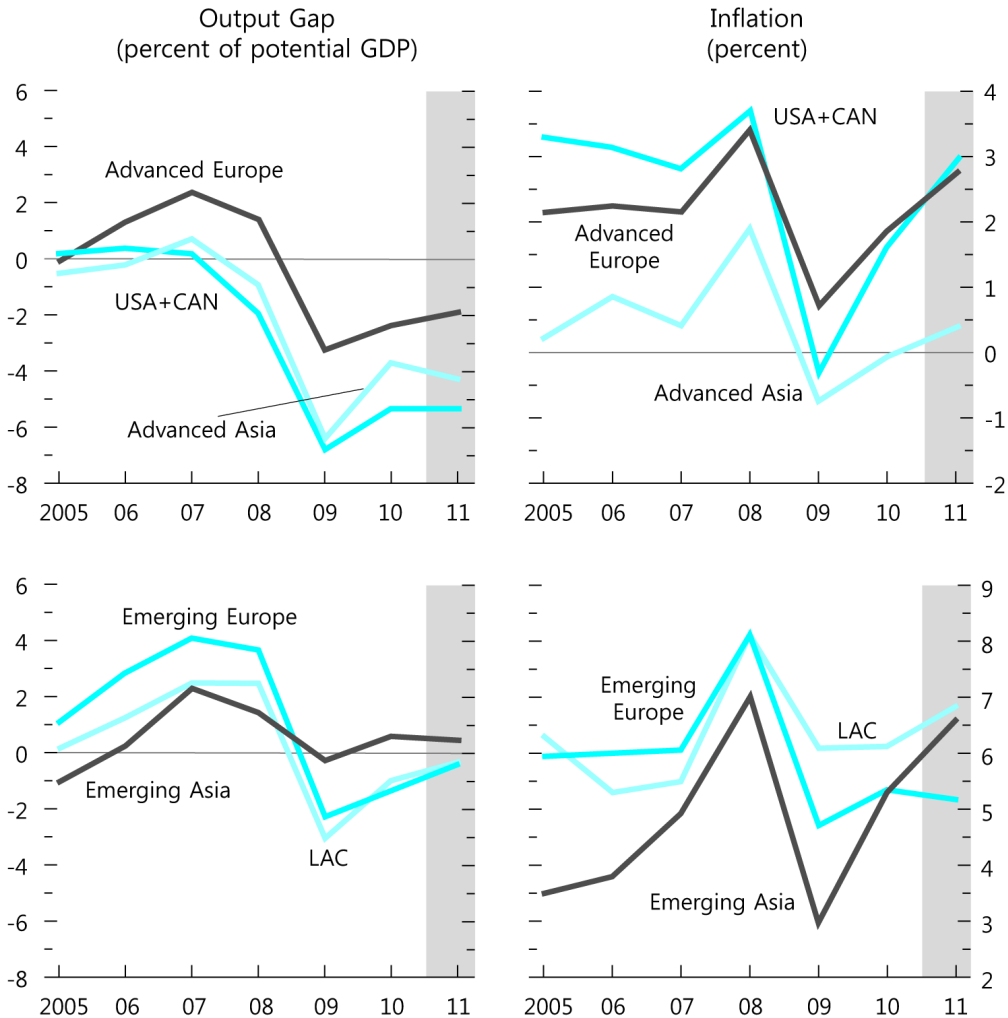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There are no data for Libya in the projection years due to the uncertain political situation. Projections for 2011 and later exclude South Sudan. Due to data limitations, data for Iraq are the growth differential between the average in 2011-12 and 2005-07; for Afghanistan between the average in 2011-12 and 2003-07; and for Kosovo, Liberia, Malta, Montenegro, Tuvalu, and Zimbabwe between the average in 2011-12 and 2001-07.

- 최근 세계 경제성장은 주춤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현상은 증가하는 추세
  - 미국의 경우,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부재가 국가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유럽은 주변국들의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이 상당함
  - 반면, 신흥국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
    -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의 확장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SECTION 1 >>

[그림 1-Ⅲ-2] 산출갭(output gap) 및 인플레이션



주: 1. 아시아 선진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LAC: 남미와 캐리비안, USA+CAN: 미국과 캐나다  
 2. 지역별 총액은 PPP기준으로 작성

자료: IMF staff estimates.

- 각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는 대부분 상품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나, 수용적 정책(accommodative policy), 신용증가(strong credit growth) 및 자본유입도 주된 요인임
  -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국가 및 지역별로 경제회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은 상이함
  -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재조정(rebalancing)이 요구됨
    - 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유럽 국가들의 경우, 민간부문을 통한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 또한 감행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개선 및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국가부채를 줄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새로운 재정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함
  - 신흥국의 경우, 외부수요에서 내수로의 재조정(rebalancing)을 통해 경기회복 추진
    - 내수가 과도한 남미국가들의 경우, 재정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재정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 부양적 통화정책<sup>2)</sup>(monetary accommodation) 중단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반면, 내수가 부족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구조적개혁과 동반된 환율절상을 통해 내수 확충

## 2) 주요국가 및 지역별 재정동향 및 전망

### 가) 미국

- **(동향)** 미국은 GDP 성장률이 2010년 후반 2.75% 정도였으나, 2011년 전반 1%로 하락세를 나타냄
  - 이러한 미국의 경기침체는 당초 예상되었으나, 갑작스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공급이 중단되고, 유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11.6 세계경제

2)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중앙은행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연방기금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망 업데이트(WEO update)에서의 예상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

- 또한 더딘 경기 회복세,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미국경제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인플레이션은 최고조에 달하고, 고용은 주춤

<표 1-III-2> 선진국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Real GDP			Consumer Prices <sup>1</sup>			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Unemployment <sup>3</sup>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b>Advanced Economies</b>	<b>3.1</b>	<b>1.6</b>	<b>1.9</b>	<b>1.6</b>	<b>2.6</b>	<b>1.4</b>	<b>-0.2</b>	<b>-0.3</b>	<b>0.1</b>	<b>8.3</b>	<b>7.9</b>	<b>7.9</b>
United States	3.0	1.5	1.8	1.6	3.0	1.2	-3.2	-3.1	-2.1	9.6	9.1	9.0
Euro Area <sup>4,5</sup>	1.8	1.6	1.1	1.6	2.5	1.5	-0.4	0.1	0.4	10.1	9.9	9.9
Japan	4.0	-0.5	2.3	-0.7	-0.4	-0.5	3.6	2.5	2.8	5.1	4.9	4.8
United Kingdom <sup>4</sup>	1.4	1.1	1.6	3.3	4.5	2.4	-3.2	-2.7	-2.3	7.9	7.8	7.8
Canada	3.2	2.1	1.9	1.8	2.9	2.1	-3.1	-3.3	-3.8	8.0	7.6	7.7
Other Advanced Economies <sup>6</sup>	5.8	3.6	3.7	2.3	3.3	2.8	5.0	4.7	3.7	4.9	4.4	4.3
<i>Memorandum</i>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8.4	4.7	4.5	2.3	3.7	3.1	7.0	6.4	6.1	4.1	3.5	3.5

<sup>1</sup>Movements in consumer prices are shown as annual averages. December-December changes can be found in Table A6 in the Statistical Appendix.

<sup>2</sup>Percent of GDP.

<sup>3</sup>Percent. National definitions of unemployment may differ.

<sup>4</sup>Based on Eurostat's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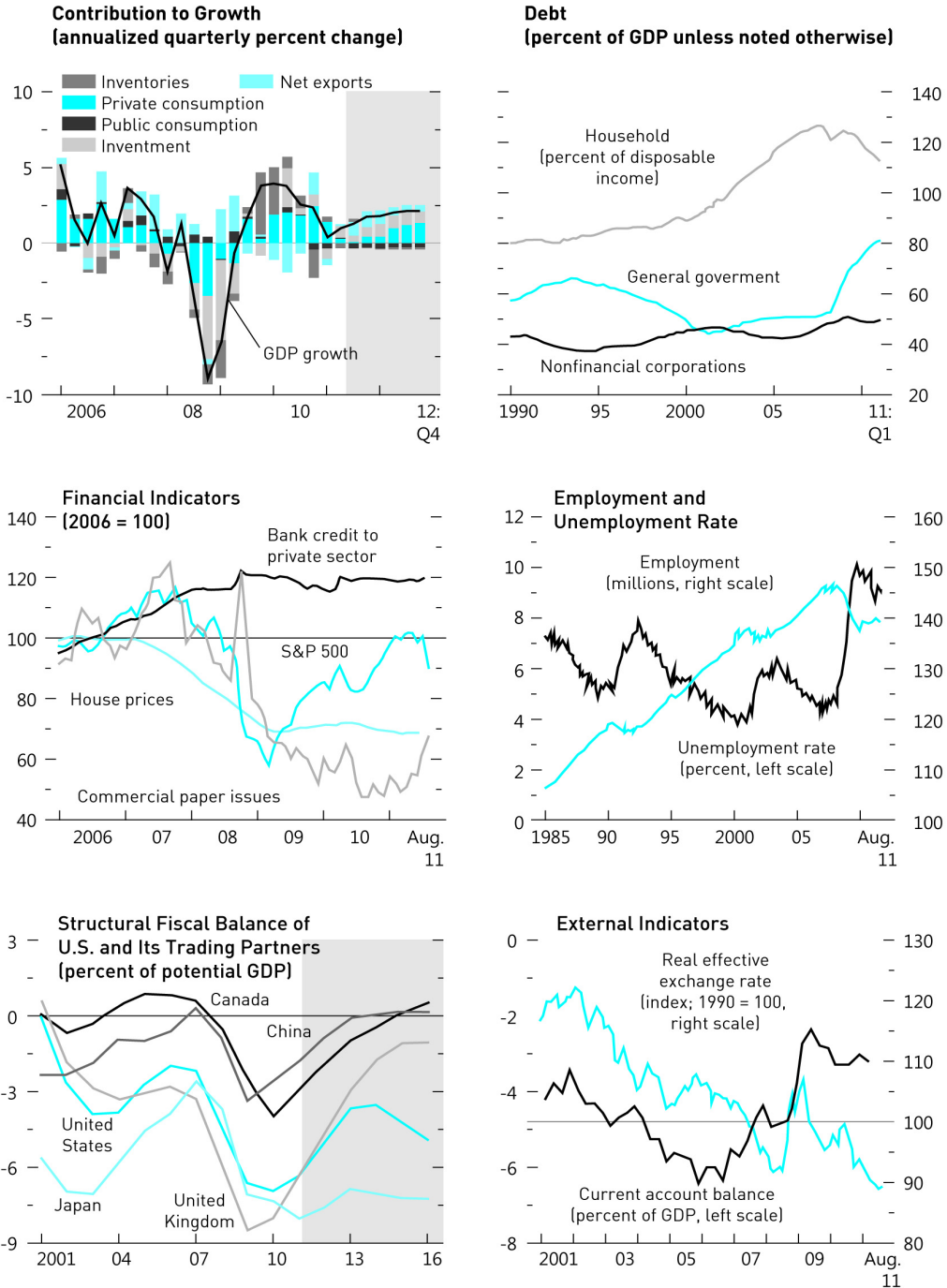
<sup>5</sup>Current account position corrected for reporting discrepancies in intra-area transactions.

<sup>6</sup>Excludes the G7 economies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Euro Area countries.

□ (전망) 미국은 2011-12년 사이 실질 GDP가 1.5%에서 1.8%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일본 지진과 에너지 가격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2011년 후반에 들어 점차 줄어들고, 일시적인 급여세 감면과 실업보험 확대가 2012년 다시 재개될 것을 반영한 수치임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식시장 손실, 부동산 침체 및 디레버리지 (deleveraging) 압력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 2011년 실업률은 현재 9.1%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러한 높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상품가격 하락으로 2011년 3%에서 2012년 1.2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1-III-3] 미국 경제동향



Sources: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estimates.

- 미국은 재정 불확실성, 주택시장 침체 및 가계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
  - 따라서, 재정수입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 마련을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시적인 부양책과 수용적 통화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급여세 감면 및 실업보험 확대를 통한 부양책이 2012년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치적 이견에 의한 부채감소방안 도입의 실패는 향후 강력한 조기(front-loaded) 부채 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더욱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
    - 중기 부채감축계획 도입 지연은 미국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증가시키고, 주요국에게 악영향을 미침
      - 미국 채권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주요국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이자율의 변동성 위험은 신흥국 시장 스프레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외에도 지속적인 주식시장 손실, 상품가격의 상방리스크<sup>3)</sup>(upside risks), 주택가격 회복세 둔화 등은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침
  - 2011년 후반 미국 경제성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증가할 것
  
- 미국의 국내 균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리밸런싱(global rebalancing)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
  - 또한, 최근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캐나다와 영국의 재정조정 과정으로 인해 미국 재정건전화 방안이 경상수지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3) 증권 또는 투자한 분야의 수익이 예상수준보다 높은 경우로 하방리스크의 반대개념

- 재정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안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최근 미국은 금융개혁법안(Dodd-Frank Act)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될 전망

#### 나) 캐나다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3.25%에서 2011-12년 사이 2%로 하락하나, 비교적 적당한 수치를 유지할 전망
  - 이는 재정축출전략(fiscal withdrawal)<sup>4)</sup> 및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현상 때문
  -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적 경기회복세 둔화로 실업률은 2011-12년 사이 7.5%에서 7.75%로 소폭 상승할 전망

#### 다) EU 국가

- EU 국가들은 방대한 규모의 국가부채, 낮은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 높은 시장압력(market tension)으로 인해 경기둔화세 지속
  -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유럽국가에서 하방리스크 확대 경향이 있음
  - 유로 부채위기 대응 및 국가 신용회복을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7월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 2011년 상반기 유로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 2%에 해당되었으나, 하반기 연 0.25%로 감소하여 2012년 1%를 상회할 전망

4) 경기침체에 경기를 회복 및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들을 경제기반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으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 SECTION 1 >>

〈표 1-Ⅲ-3〉 EU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Real GDP			Consumer Prices <sup>1</sup>			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Unemployment <sup>3</sup>		
	Projections			Projections			Projections			Projections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b>Europe</b>	<b>2.2</b>	<b>2.0</b>	<b>1.5</b>	<b>2.4</b>	<b>3.1</b>	<b>2.1</b>	<b>0.3</b>	<b>0.1</b>	<b>0.4</b>	...	...	...
<b>Advanced Europe</b>	<b>1.8</b>	<b>1.6</b>	<b>1.3</b>	<b>1.9</b>	<b>2.8</b>	<b>1.7</b>	<b>0.8</b>	<b>0.8</b>	<b>1.0</b>	<b>9.4</b>	<b>9.2</b>	<b>9.1</b>
Euro Area <sup>4,5</sup>	1.8	1.6	1.1	1.6	2.5	1.5	-0.4	0.1	0.4	10.1	9.9	9.9
Germany	3.6	2.7	1.3	1.2	2.2	1.3	5.7	5.0	4.9	7.1	6.0	6.2
France	1.4	1.7	1.4	1.7	2.1	1.4	-1.7	-2.7	-2.5	9.8	9.5	9.2
Italy	1.3	0.6	0.3	1.6	2.6	1.6	-3.3	-3.5	-3.0	8.4	8.2	8.5
Spain	-0.1	0.8	1.1	2.0	2.9	1.5	-4.6	-3.8	-3.1	20.1	20.7	19.7
Netherlands	1.6	1.6	1.3	0.9	2.5	2.0	7.1	7.5	7.7	4.5	4.2	4.2
Belgium	2.1	2.4	1.5	2.3	3.2	2.0	1.0	0.6	0.9	8.4	7.9	8.1
Austria	2.1	3.3	1.6	1.7	3.2	2.2	2.7	2.8	2.7	4.4	4.1	4.1
Greece	-4.4	-5.0	-2.0	4.7	2.9	1.0	-10.5	-8.4	-6.7	12.5	16.5	18.5
Portugal	1.3	-2.2	-1.8	1.4	3.4	2.1	-9.9	-8.6	-6.4	12.0	12.2	13.4
Finland	3.6	3.5	2.2	1.7	3.1	2.0	3.1	2.5	2.5	8.4	7.8	7.6
Ireland	-0.4	0.4	1.5	-1.6	1.1	0.6	0.5	1.8	1.9	13.6	14.3	13.9
Slovak Republic	4.0	3.3	3.3	0.7	3.6	1.8	-3.5	-1.3	-1.1	14.4	13.4	12.3
Slovenia	1.2	1.9	2.0	1.8	1.8	2.1	-0.8	-1.7	-2.1	7.3	8.2	8.0
Luxembourg	3.5	3.6	2.7	2.3	3.6	1.4	7.8	9.8	10.3	6.2	5.8	6.0
Estonia	3.1	6.5	4.0	2.9	5.1	3.5	3.6	2.4	2.3	16.9	13.5	11.5
Cyprus	1.0	0.0	1.0	2.6	4.0	2.4	-7.7	-7.2	-7.6	6.4	7.4	7.2
Malta	3.1	2.4	2.2	2.0	2.6	2.3	-4.8	-3.8	-4.8	6.9	6.3	6.2
United Kingdom <sup>5</sup>	1.4	1.1	1.6	3.3	4.5	2.4	-3.2	-2.7	-2.3	7.9	7.8	7.8
Sweden	5.7	4.4	3.8	1.9	3.0	2.5	6.3	5.8	5.3	8.4	7.4	6.6
Switzerland	2.7	2.1	1.4	0.7	0.7	0.9	15.8	12.5	10.9	3.6	3.4	3.4
Czech Republic	2.3	2.0	1.8	1.5	1.8	2.0	-3.7	-3.3	-3.4	7.3	6.7	6.6
Norway	0.3	1.7	2.5	2.4	1.7	2.2	12.4	14.0	12.8	3.6	3.6	3.5
Denmark	1.7	1.5	1.5	2.3	3.2	2.4	5.1	6.4	6.4	4.2	4.5	4.4
Iceland	-3.5	2.5	2.5	5.4	4.2	4.5	-10.2	1.9	3.2	8.1	7.1	6.0
<b>Emerging Europe<sup>6</sup></b>	<b>4.5</b>	<b>4.3</b>	<b>2.7</b>	<b>5.3</b>	<b>5.2</b>	<b>4.5</b>	<b>-4.6</b>	<b>-6.2</b>	<b>-5.4</b>	...	...	...
Turkey	8.9	6.6	2.2	8.6	6.0	6.9	-6.6	-10.3	-7.4	11.9	10.5	10.7
Poland	3.8	3.8	3.0	2.6	4.0	2.8	-4.5	-4.8	-5.1	9.6	9.4	9.2
Romania	-1.3	1.5	3.5	6.1	6.4	4.3	-4.3	-4.5	-4.6	7.6	5.0	4.8
Hungary	1.2	1.8	1.7	4.9	3.7	3.0	2.1	2.0	1.5	11.2	11.3	11.0
Bulgaria	0.2	2.5	3.0	3.0	3.8	2.9	-1.0	1.6	0.6	10.3	10.2	9.5
Serbia	1.0	2.0	3.0	6.2	11.3	4.3	-7.2	-7.7	-8.9	19.6	20.5	20.6
Croatia	-1.2	0.8	1.8	1.0	3.2	2.4	-1.1	-1.8	-2.7	12.2	12.7	12.2
Lithuania	1.3	6.0	3.4	1.2	4.2	2.6	1.8	-1.9	-2.7	17.8	15.5	14.0
Latvia	-0.3	4.0	3.0	-1.2	4.2	2.3	3.6	1.0	-0.5	19.0	16.1	14.5

<sup>1</sup>Movements in consumer prices are shown as annual averages. December-December changes can be found in Tables A6 and A7 in the Statistical Appendix.

<sup>2</sup>Percent of GDP.

<sup>3</sup>Percent. National definitions of unemployment may differ.

<sup>4</sup>Current account position corrected for reporting discrepancies in intra-area transactions.

<sup>5</sup>Based on Eurostat's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sup>6</sup>Also includes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Kosovo,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and Montenegro.

-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 상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의 경우, 경제성장세 및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

- 이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 이전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제조업(global manufacturing)의 호조로 회복되는 추세
  - 이 중에서 터키의 경우는, 수용적 정책(accommodative policy)의 영향으로 경기호황 국면
  - 반면, 금융위기와 관련한 급격한 경기조정으로 인해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위기 이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의 경우, 최근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은행시스템 및 높은 실업률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시장 변동성의 증가 및 채권 스프레드의 상승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1년 2.5%에서 2012년 1.5%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동유럽은 5.25%에서 4.5%로 감소할 전망
- 최근 유럽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더욱 강행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폴란드와 터키의 경우, 강화된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재정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갑작스런 자본유출입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재정여유분(fiscal room) 확충
  -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중기재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 아시아 국가들

- 2011년 상반기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일본 지진 및 쓰나미의 영향으로 상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여 그 정도가 감소
-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선진 아시아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본 지진에 영

## SECTION 1 >>

향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들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향후 경제전망이 달라질 것

- 신생 아시아(Emerging Asia) 국가들의 경우, 내수로 인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예정
  -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외부수요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표 1-Ⅲ-4〉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Real GDP			Consumer Prices <sup>1</sup>			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Unemployment <sup>3</sup>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0	Projections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b>Asia</b>	<b>8.2</b>	<b>6.2</b>	<b>6.6</b>	<b>4.1</b>	<b>5.3</b>	<b>4.0</b>	<b>3.3</b>	<b>2.9</b>	<b>2.9</b>	...	...	...
<b>Advanced Asia</b>	<b>5.4</b>	<b>1.7</b>	<b>3.3</b>	<b>0.8</b>	<b>1.6</b>	<b>1.3</b>	<b>3.3</b>	<b>2.5</b>	<b>2.3</b>	<b>4.8</b>	<b>4.4</b>	<b>4.4</b>
Japan	4.0	-0.5	2.3	-0.7	-0.4	-0.5	3.6	2.5	2.8	5.1	4.9	4.8
Australia	2.7	1.8	3.3	2.8	3.5	3.3	-2.7	-2.2	-4.7	5.2	5.0	4.8
New Zealand	1.7	2.0	3.8	2.3	4.4	2.7	-4.1	-3.9	-5.6	6.5	6.4	5.6
<b>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b>	<b>8.4</b>	<b>4.7</b>	<b>4.5</b>	<b>2.3</b>	<b>3.7</b>	<b>3.1</b>	<b>7.0</b>	<b>6.4</b>	<b>6.1</b>	<b>4.1</b>	<b>3.5</b>	<b>3.5</b>
Korea <sup>4</sup>	6.2	3.9	4.4	3.0	4.5	3.5	2.8	1.5	1.4	3.7	3.3	3.3
Taiwan Province of China	10.9	5.2	5.0	1.0	1.8	1.8	9.3	11.0	11.0	5.2	4.3	4.2
Hong Kong SAR	7.0	6.0	4.3	2.3	5.5	4.5	6.2	5.4	5.5	4.3	3.6	3.7
Singapore	14.5	5.3	4.3	2.8	3.7	2.9	22.2	19.8	18.5	2.2	2.3	2.3
<b>Developing Asia</b>	<b>9.5</b>	<b>8.2</b>	<b>8.0</b>	<b>5.7</b>	<b>7.0</b>	<b>5.1</b>	<b>3.3</b>	<b>3.3</b>	<b>3.4</b>	...	...	...
China	10.3	9.5	9.0	3.3	5.5	3.3	5.2	5.2	5.6	4.1	4.0	4.0
India	10.1	7.8	7.5	12.0	10.6	8.6	-2.6	-2.2	-2.2	...	...	...
<b>ASEAN-5</b>	<b>6.9</b>	<b>5.3</b>	<b>5.6</b>	<b>4.4</b>	<b>6.1</b>	<b>5.6</b>	<b>3.3</b>	<b>2.5</b>	<b>1.6</b>	...	...	...
Indonesia	6.1	6.4	6.3	5.1	5.7	6.5	0.8	0.2	-0.4	7.1	6.8	6.6
Thailand	7.8	3.5	4.8	3.3	4.0	4.1	4.6	4.8	2.5	1.0	1.2	1.2
Malaysia	7.2	5.2	5.1	1.7	3.2	2.5	11.5	11.3	10.8	3.3	3.2	3.1
Philippines	7.6	4.7	4.9	3.8	4.5	4.1	4.2	1.7	1.3	7.2	7.2	7.2
Vietnam	6.8	5.8	6.3	9.2	18.8	12.1	-3.8	-4.7	-3.8	5.0	5.0	5.0
<b>Other Developing Asia<sup>5</sup></b>	<b>5.2</b>	<b>4.6</b>	<b>5.0</b>	<b>9.1</b>	<b>10.9</b>	<b>9.5</b>	<b>-0.4</b>	<b>-0.1</b>	<b>-1.3</b>	...	...	...
<i>Memorandum</i>												
Emerging Asia <sup>6</sup>	9.3	7.7	7.5	5.2	6.6	4.9	3.9	3.8	3.8	...	...	...

<sup>1</sup>Movements in consumer prices are shown as annual averages. December-December changes can be found in Tables A6 and A7 in the Statistical Appendix.

<sup>2</sup>Percent of GDP.

<sup>3</sup>Percent. National definitions of unemployment may differ.

<sup>4</sup>The 2011 annual GDP growth forecast is as of September 5, 2011. The recent revision of the second quarter GDP data would imply a revision of the 2011 annual GDP growth forecast to 4 percent.

<sup>5</sup>Other Developing Asia comprises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Brunei Darussalam, Cambodia, Republic of Fij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dives, Myanmar, Nepal, Pakistan,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Sri Lanka, Timor-Leste, Tonga, Tuvalu, and Vanuatu.

<sup>6</sup>Emerging Asia comprises all economies in Developing Asia and the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 경제 성장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2011-12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평균 9~9.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0-07년 평균인 10.5%보다 낮은 수치

-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 8.4%에서 2012년 4.5%로 감소할 전망
  - ASEAN 5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은 5.5%로 전망
  - 일본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공급제한(supply constraint)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국가 신뢰도가 상승하여 경기 반등 예정
    - 2011년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2년 2.25%로 증가할 전망
  - 호주의 경우 일본의 지진에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받아 큰 변화가 없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무역호조로 경제성장세를 기록
    -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5%에서 2012년 3.25%로 증가할 전망이며, 뉴질랜드는 2%에서 3.75%로 증가할 예정
- 상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은 2011년 5.25%에서 2012년 4%로 감소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신용 증가세가 크고, 산출갭이 플러스를 나타내며, 비교적 수용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국가들(한국, 인도, 베트남)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 정도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것임
  - 반면,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
-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일본의 경우 인프라 재건축 외에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중기적 계획 마련이 시급
-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근 소비세를 10%로 상향조정을 추진중인데, 이를 15%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도와 베트남은 재정출구전략을 통해 재정 여유분을 확충해야 함

나. IMF, Fiscal Monitor(2011년 9월 발표)\*

1) 총론

- 세계 재정 위험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모든 국가는 위기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감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감소시켜야 함
  - 선진국의 2011년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Delta 6.7\%$ (전년 대비  $0.8\text{p}$  감소), 국가채무는  $102.9\%$ (전년 대비  $4.8\text{p}$  증가)를 기록함
    - 특히 대부분의 유로지역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높은 국가채무로 인해 차입비용(borrowing cost)이 높게 유지됨
    - 미국과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아 차입비용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중기재정계획 도입이 필요
  - 개도국의 2011년 평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GDP 대비  $\Delta 2.6\%$ 와  $37.8\%$ 이며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한국조세연구원 이은희 연구원 (leehll@kipf.re.kr)

〈표 1-III-5〉 2006-16년 재정 수지

(단위: GDP 대비 %)

Statistical Table 1. General Government Balance (Percent of GD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Advanced Economies</b>											
Australia	1.8	1.3	-0.8	-4.1	-4.9	-3.9	-1.9	-0.5	-0.1	0.0	0.3
Austria	-1.7	-1.0	-1.0	-4.1	-4.6	-3.5	-3.2	-2.7	-2.3	-2.0	-2.1
Belgium	0.1	-0.3	-1.3	-5.9	-4.1	-3.5	-3.4	-3.3	-3.2	-3.2	-3.2
Canada	1.6	1.6	0.1	-4.9	-5.6	-4.3	-3.2	-1.9	-1.0	-0.2	0.3
Czech Republic	-2.6	-0.7	-2.7	-5.8	-4.7	-3.8	-3.7	-3.6	-3.5	-3.4	-3.4
Denmark	5.4	4.8	3.4	-2.8	-2.9	-3.0	-3.0	-2.8	-2.7	-2.4	-2.0
Estonia	3.2	2.9	-2.3	-2.1	0.2	-0.1	-2.3	-1.1	0.3	1.0	1.5
Finland	3.9	5.2	4.1	-2.8	-2.8	-1.0	0.3	0.3	0.4	0.5	0.5
France	-2.4	-2.7	-3.3	-7.6	-7.1	-5.9	-4.6	-4.0	-3.1	-2.3	-1.4
Germany	-1.6	0.3	0.1	-3.1	-3.3	-1.7	-1.1	-0.8	0.0	0.2	0.4
Greece	-6.1	-6.7	-9.8	-15.5	-10.4	-8.0	-6.9	-5.2	-2.8	-2.8	-2.8
Hong Kong SAR	4.1	7.7	0.1	1.6	4.3	2.5	4.0	4.0	4.3	4.5	4.5
Iceland	6.3	5.4	-0.5	-8.6	-5.4	-4.1	-2.3	-1.2	0.0	1.1	1.5
Ireland	2.9	0.1	-7.3	-14.2	-32.0	-10.3	-8.6	-6.8	-4.4	-4.1	-3.7
Israel	-1.2	-0.2	-2.8	-5.6	-4.1	-2.8	-2.2	-1.6	-1.1	-1.1	-1.0
Italy	-3.3	-1.5	-2.7	-5.3	-4.5	-4.0	-2.4	-1.1	-1.1	-1.1	-1.1
Japan	-4.0	-2.4	-4.2	-10.3	-9.2	-10.3	-9.1	-7.8	-7.5	-7.4	-7.3
Korea	1.1	2.3	1.6	0.0	1.7	2.1	2.4	2.7	2.8	2.9	2.8
Netherlands	0.6	0.3	0.4	-5.5	-5.3	-3.8	-2.8	-2.3	-1.9	-1.3	-0.6
New Zealand	3.2	2.5	0.1	-3.3	-6.0	-6.2	-3.5	-1.2	0.0	0.5	0.9
Norway	18.5	17.7	19.4	10.6	10.9	12.0	11.2	10.8	10.3	9.9	9.4
Portugal	-0.4	-3.1	-3.5	-10.1	-9.1	-5.9	-4.5	-3.0	-2.3	-1.9	-1.7
Singapore	5.1	10.0	5.3	-0.8	5.2	3.2	3.6	3.7	3.8	3.9	4.0
Slovak Republic	-3.2	-1.8	-2.1	-8.0	-7.9	-4.9	-3.8	-3.1	-2.8	-2.0	-2.0
Slovenia	-0.8	0.3	-0.3	-5.6	-5.3	-6.2	-4.7	-3.8	-3.4	-3.2	-3.2
Spain	2.0	1.9	-4.1	-11.1	-9.2	-6.1	-5.2	-4.4	-4.1	-4.1	-4.1
Sweden	2.2	3.6	2.2	-0.9	-0.3	0.8	1.3	1.7	2.0	2.2	2.2
Switzerland	1.0	1.4	1.9	0.5	0.4	0.8	0.6	0.5	0.9	0.9	0.9
United Kingdom	-2.6	-2.7	-4.9	-10.3	-10.2	-8.5	-7.0	-5.1	-3.5	-2.3	-1.7
United States	-2.0	-2.7	-6.5	-12.8	-10.3	-9.6	-7.9	-6.2	-5.5	-5.6	-6.0
<b>Emerging Economies</b>											
Argentina	-0.9	-2.1	-0.8	-3.6	-1.6	-2.0	-1.9	-1.5	-1.4	-0.5	-0.1
Brazil	-3.5	-2.7	-1.4	-3.1	-2.9	-2.5	-2.8	-2.6	-2.5	-2.4	-2.4
Bulgaria	3.3	3.3	2.9	-0.9	-3.9	-2.5	-2.2	-1.4	-1.0	-0.8	-0.4
Chile	7.9	8.4	4.3	-4.4	-0.3	1.4	1.6	1.4	1.4	1.2	1.0
China	-0.7	0.9	-0.4	-3.1	-2.3	-1.6	-0.8	-0.1	0.0	0.1	0.2
Colombia	-0.8	-1.0	0.0	-2.5	-3.1	-3.0	-1.5	-1.2	-1.0	-0.9	-0.9
Hungary	-9.3	-5.0	-3.6	-4.5	-4.3	2.0	-3.6	-3.2	-2.7	-2.1	-1.6
India	-5.5	-4.2	-7.2	-9.7	-8.8	-8.0	-7.6	-7.4	-7.4	-7.2	-7.1
Indonesia	0.2	-1.0	0.0	-1.8	-1.2	-1.8	-1.3	-1.2	-1.2	-1.2	-1.0
Jordan	-4.0	-4.7	-4.3	-8.5	-5.4	-6.2	-6.0	-5.6	-5.0	-4.5	-4.3
Kazakhstan	7.7	5.2	1.2	-1.3	1.5	1.8	1.7	1.5	1.3	1.4	1.4
Kenya	-2.5	-3.1	-4.3	-5.2	-6.0	-5.4	-4.8	-4.3	-4.0	-3.3	-2.9
Latvia	-0.5	0.6	-7.5	-7.8	-7.8	-4.5	-2.3	-2.0	-1.6	-1.9	-1.6
Lithuania	-0.4	-1.0	-3.3	-9.2	-7.1	-5.3	-4.5	-4.1	-3.5	-3.1	-2.8
Malaysia	-2.3	-2.6	-3.6	-5.9	-5.1	-5.1	-4.9	-4.7	-4.6	-4.4	-4.3
Mexico <sup>1</sup>	-1.0	-1.2	-1.1	-4.7	-4.3	-3.2	-2.8	-2.4	-2.4	-2.3	-2.2
Morocco	-1.2	1.5	1.4	-2.2	-3.5	-6.8	-4.9	-4.3	-3.7	-3.2	-2.8
Nigeria	11.6	0.5	4.8	-10.2	-8.5	0.4	2.2	2.0	1.3	0.4	-1.5
Pakistan	-3.7	-5.5	-7.3	-5.2	-5.9	-6.5	-5.3	-5.2	-4.2	-4.0	-3.8
Peru	1.9	3.2	2.2	-1.9	-0.4	0.6	0.9	1.4	1.7	1.7	1.8
Philippines	-1.3	-1.5	-1.2	-3.7	-3.5	-2.9	-2.5	-2.0	-2.0	-2.0	-2.0
Poland	-3.6	-1.9	-3.7	-7.3	-7.9	-5.5	-3.8	-3.5	-3.2	-2.6	-2.4
Romania	-1.4	-3.1	-4.8	-7.3	-6.5	-4.4	-2.8	-2.4	-2.2	-1.8	-1.4
Russia	8.3	6.8	4.9	-6.3	-3.5	-1.1	-2.1	-2.3	-3.1	-3.7	-4.3
Saudi Arabia	24.6	15.8	34.4	-4.6	6.7	9.4	8.0	4.5	3.2	1.3	-1.7
South Africa	0.8	1.5	-0.5	-5.2	-5.1	-4.3	-3.9	-3.4	-2.9	-2.1	-1.2
Thailand	2.2	0.2	0.1	-3.2	-2.7	-2.6	-2.9	-3.2	-3.1	-3.1	-3.0
Turkey	0.0	-1.6	-2.4	-5.6	-2.9	-0.9	-1.0	-0.7	-1.0	-1.2	-1.1
Ukraine	-1.4	-2.0	-3.2	-6.3	-5.7	-2.8	-2.0	-2.0	-2.0	-2.0	-2.0
Average	-0.8	-0.6	-2.3	-7.1	-5.9	-5.0	-4.1	-3.2	-2.9	-2.8	-2.8
Advanced	-1.4	-1.2	-3.6	-8.8	-7.5	-6.7	-5.4	-4.2	-3.5	-3.4	-3.4
Emerging	-0.1	0.1	-0.5	-4.8	-3.7	-2.6	-2.3	-2.0	-2.0	-2.0	-2.0
G-7	-2.3	-2.1	-4.6	-10.1	-8.6	-8.0	-6.5	-5.1	-4.4	-4.3	-4.3
G-20	-1.2	-0.9	-2.6	-7.5	-6.1	-5.4	-4.4	-3.5	-3.2	-3.1	-3.1
Advanced	-2.0	-1.8	-4.2	-9.5	-8.1	-7.4	-6.0	-4.7	-4.0	-3.8	-3.8
Emerging	-0.1	0.3	-0.3	-4.8	-3.5	-2.6	-2.3	-2.0	-2.0	-2.0	-2.1

Source: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Projections are based on staff assessment of current policies (see "Fiscal Policy Assumptions" in text).

<sup>1</sup>For details, see "Data and Conventions" in text.

〈표 1-III-6〉 2006-16년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Statistical Table 7.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Advanced Economies</b>											
Australia	9.9	9.6	11.7	16.9	20.5	22.8	23.8	23.0	21.6	20.0	18.2
Austria	62.8	60.7	63.8	69.6	72.2	72.3	73.9	74.1	73.8	73.4	72.9
Belgium	88.0	84.2	89.8	96.3	96.7	94.6	94.3	93.9	93.6	93.2	93.0
Canada	70.3	66.5	71.1	83.3	84.0	84.1	84.2	82.3	79.7	76.4	73.0
Czech Republic	29.4	29.0	30.0	35.4	38.5	41.1	43.2	44.6	45.7	46.7	47.6
Denmark	41.0	34.1	42.2	41.8	43.7	44.3	45.8	47.0	48.1	48.8	49.2
Estonia	4.4	3.7	4.6	7.2	6.6	6.0	5.6	5.3	5.1	4.8	4.6
Finland	39.6	35.2	33.9	43.3	48.4	50.2	50.3	51.0	51.6	52.0	52.3
France	63.9	64.2	68.3	79.0	82.4	86.9	89.4	90.8	90.8	89.7	87.7
Germany	67.9	65.0	66.4	74.1	84.0	82.6	81.9	81.0	79.1	77.1	75.0
Greece	106.1	105.4	110.7	127.1	142.8	165.6	189.1	187.9	178.5	165.1	162.8
Hong Kong SAR <sup>1</sup>	31.9	30.8	30.4	34.0	33.2	31.6	30.5	29.7	29.1	28.6	28.0
Iceland	30.1	29.1	70.3	88.2	92.4	101.2	96.8	95.0	91.7	88.2	82.5
Ireland	24.7	24.9	44.4	65.2	94.9	109.3	115.4	118.3	117.7	116.1	114.3
Israel	85.0	78.1	77.1	80.7	77.4	71.1	68.9	66.8	64.4	62.0	59.7
Italy	106.6	103.6	106.3	116.1	119.0	121.1	121.4	120.1	118.4	116.3	114.1
Japan	191.3	187.7	195.0	216.3	220.0	233.1	238.4	242.9	245.9	249.9	253.4
Korea	31.1	30.7	30.1	33.8	33.4	32.0	30.0	28.0	26.0	24.0	22.2
Netherlands	47.4	45.3	58.2	60.8	63.7	65.5	66.5	66.9	66.7	65.8	64.4
New Zealand	19.4	17.4	20.3	26.1	32.0	35.3	34.6	34.1	33.3	31.1	29.7
Norway	60.5	58.6	56.8	55.4	55.4	55.4	55.4	55.4	55.4	55.4	55.4
Portugal	63.9	68.3	71.6	83.0	92.9	106.0	111.8	114.9	114.6	112.5	110.5
Singapore	86.8	85.9	97.2	105.0	96.3	93.5	90.1	87.8	85.3	83.1	81.7
Slovak Republic	30.5	29.6	27.8	35.4	41.8	44.9	46.9	47.1	46.9	46.1	45.4
Slovenia	26.7	23.4	22.5	35.5	37.3	43.6	47.2	49.2	50.8	52.1	53.5
Spain	39.6	36.1	39.8	53.3	60.1	67.4	70.2	72.8	74.9	76.1	77.4
Sweden	45.3	40.2	38.8	42.8	39.7	36.0	32.6	29.2	25.7	22.4	19.3
Switzerland	64.4	57.2	54.8	54.8	54.5	52.4	51.2	50.0	49.1	47.7	46.4
United Kingdom	43.1	43.9	52.0	68.3	75.5	80.8	84.8	85.9	85.1	83.1	80.4
United States	61.1	62.3	71.6	85.2	94.4	100.0	105.0	108.9	111.4	113.2	115.4
<b>Emerging Economies</b>											
Argentina	76.5	67.1	58.5	58.7	49.1	43.3	41.5	40.4	39.5	38.0	37.3
Brazil	66.7	65.2	63.6	68.1	66.8	65.0	64.0	62.5	60.9	59.0	57.2
Bulgaria	23.4	18.6	15.5	15.6	17.4	17.8	20.5	20.7	20.4	20.5	19.3
Chile	5.3	4.1	5.2	6.2	9.2	10.5	10.6	10.6	10.7	10.7	10.9
China <sup>1</sup>	16.2	19.6	17.0	17.7	33.8	26.9	22.2	18.4	15.5	13.0	10.9
Colombia	36.8	32.7	30.8	35.8	36.0	35.9	34.7	33.7	32.8	32.1	31.2
Hungary	65.7	66.1	72.3	78.4	80.2	76.1	75.5	75.6	74.4	73.1	71.5
India	78.5	75.4	74.7	74.2	67.3	64.9	64.2	63.2	62.6	62.2	61.7
Indonesia	40.4	36.9	33.2	28.6	27.4	25.2	24.0	22.7	21.4	20.2	19.0
Jordan	76.3	73.8	60.2	64.5	66.8	68.5	67.8	66.9	66.3	64.4	63.6
Kazakhstan	6.7	5.9	6.7	10.2	10.7	12.9	13.0	13.8	14.2	14.4	14.1
Kenya	46.8	46.1	46.2	47.6	50.4	51.2	50.2	49.2	48.9	48.4	47.4
Latvia	9.9	7.8	17.1	32.8	39.9	39.6	40.5	43.4	46.6	42.0	39.6
Lithuania	18.0	16.9	15.6	29.6	38.7	42.8	44.6	45.9	46.4	46.5	46.4
Malaysia	43.2	42.7	42.8	55.4	54.2	55.1	55.9	56.6	57.0	57.2	57.4
Mexico	38.4	37.8	43.1	44.7	42.9	42.9	43.6	43.5	43.4	43.3	43.2
Morocco	59.4	54.6	48.2	47.9	51.1	54.2	55.5	56.0	55.8	54.9	53.5
Nigeria	11.8	12.8	11.6	15.2	17.3	15.7	16.3	17.1	15.7	15.0	13.4
Pakistan	56.4	53.9	58.7	57.4	56.8	57.6	57.3	56.5	55.1	52.8	51.1
Peru	33.2	30.9	25.0	27.1	24.5	21.5	19.2	16.4	13.4	10.8	8.1
Philippines	53.3	46.1	46.7	47.1	44.7	44.4	43.6	42.2	40.9	39.7	38.5
Poland	47.7	45.0	47.1	50.9	55.0	56.0	56.4	56.5	56.2	55.6	54.7
Romania	12.6	12.7	13.6	23.9	31.7	34.4	34.4	34.0	33.6	32.8	31.7
Russia	9.0	8.5	7.9	11.0	11.7	11.7	12.1	12.6	14.5	16.8	19.5
Saudi Arabia	27.3	18.5	13.2	15.9	9.9	7.1	6.1	5.1	4.3	3.6	3.0
South Africa	32.6	28.3	27.3	31.5	34.8	36.9	38.5	39.5	39.6	38.6	36.3
Thailand	42.0	38.3	37.3	45.2	44.1	43.0	43.5	44.5	45.3	46.2	47.1
Turkey	46.1	39.4	39.5	46.1	42.2	40.3	38.1	36.3	35.1	34.2	33.2
Ukraine	14.8	12.3	20.5	35.4	40.1	39.3	39.4	39.0	39.3	38.4	35.1
Average	58.3	57.5	60.6	68.5	73.8	75.3	76.3	76.7	76.6	76.3	76.1
Advanced	74.3	73.4	79.7	91.9	98.1	102.9	106.1	108.0	108.7	109.0	109.4
Emerging	36.6	35.9	34.7	36.7	40.9	37.8	36.0	34.3	33.0	31.9	30.9
G-7	82.9	82.4	89.5	103.4	110.4	115.9	119.6	122.1	123.3	124.1	124.8
G-20	61.0	60.6	63.7	71.9	77.8	79.1	80.1	80.6	80.5	80.4	80.3
Advanced	78.6	78.1	84.7	97.8	104.4	109.5	112.9	115.1	116.1	116.7	117.2
Emerging	36.6	36.3	34.6	35.9	40.7	36.9	34.7	32.7	31.2	30.0	29.0

Source: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Projections are based on staff assessment of current policies (see "Fiscal Policy Assumptions" in text).

<sup>1</sup> For Hong Kong SAR, entire series was revised upward compared to the April *Monitor* to include additional items. For China, data revisions from the authorities indicate that debt at end-2010 was much larger than previously reported, but no revised historical series is yet available for previous years. For details, see "Data and Conventions" in text.

## 2) 유로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GDP 대비 약 4.2%와 3.2%를 기록하여 2016년에는 GDP 대비 1.5%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 유로 지역에서 재정건전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하였음
  - 독일의 종합재정수지(headline fiscal balance)는 경기 회복세와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4월 전망보다 더 빠르게 개선됨
  - 프랑스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대부분 지출감소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세 개혁과 적자감축안을 발표함
    - IMF는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당국은 계획된 조세지출 삭감을 가속화할 예정
  - 국가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증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긴축재정안을 승인함
    - 이탈리아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긴축재정안을 의회에서 7월과 9월에 통과시킴
    - 스페인 정부는 올해와 내년 대규모 적자감축안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됨
      - 정부는 최근 제약 관련 조세지출 감축안을 승인하고 법인세 부과를 앞당길 예정인데, 이는 2011년 GDP 대비 약 0.5%p 지출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IMF와 EU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도 재정건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데, 유럽국가들이 제공하는 용자 조건이 좋을수록 재정이 보다 신속히 개선될 전망이다
- 각국은 예산 및 연금제도 등 중요한 재정제도를 개혁중이며, EU는 성장과 안정협약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안(draft Directive)을 제시함
  -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예산제도를 개선중이며, 스페인 정부는 지출준칙(expenditure rule)을 발표함

## SECTION 1 >>

-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을 진행중임
    - 국가들의 연금개혁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GDP의 약 1~1.5%p로 추정됨
  - 이탈리아는 균형재정 헌법개정안을 정부(내각)에서 승인하였으며 의회에서 심의중
  - 그리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중기재정정책 개혁을 준비중
  - 아일랜드는 독립적인 재정자문위원회(Fiscal Advisory Council)를 설립하였으며 포르투갈 또한 동 위원회 설립 예정
  - 라트비아와 포르투갈은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과 새로운 예산체계(new budgetary framework)를 도입하거나 고려하는 중임
- 이러한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일부 유로지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차입비용 인상으로 이어짐
-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fiscal adjustment), 친성장(pro-growth) 정책, 그리고 적절한 위기관리 체제가 필요함
- (재정건전화정책) 각국은 중기재정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
    - 재정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와 민영화 실행 방안이 될 수 있음

※ 재정 평가절하 “Fiscal Devaluation”

- 일반적으로 화폐 평가절하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조세 개편을 일컫음
  - 가령 재화를 원산지 대신 소비지에서 과세할 경우 수출품은 면세되고 수입품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개편의 효과는 환율 평가절하와 동등함
-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대신 부가가치세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옹기는 조세 개편이 부각됨
  - 조세부과를 노동에서 소비로 옮김으로써 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완화함
- 현재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고됨

- (위기관리체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
  - 7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확대되어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공급원이 생겼으나 향후 위기관리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추가 위기 발생시, EFSF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각국은 기금 확대방안을 국내 차원에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 EU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1년 앞당겨 2012년 7월에 조기 실행하고 EFSF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해 2013년 중반까지 두 가지를 병행할 계획임
    -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는 재정건전화와 구조 개혁 및 외부 지원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EU 재정 거버넌스 체제(fiscal governance framework) 구축을 위해 보다 신속히 합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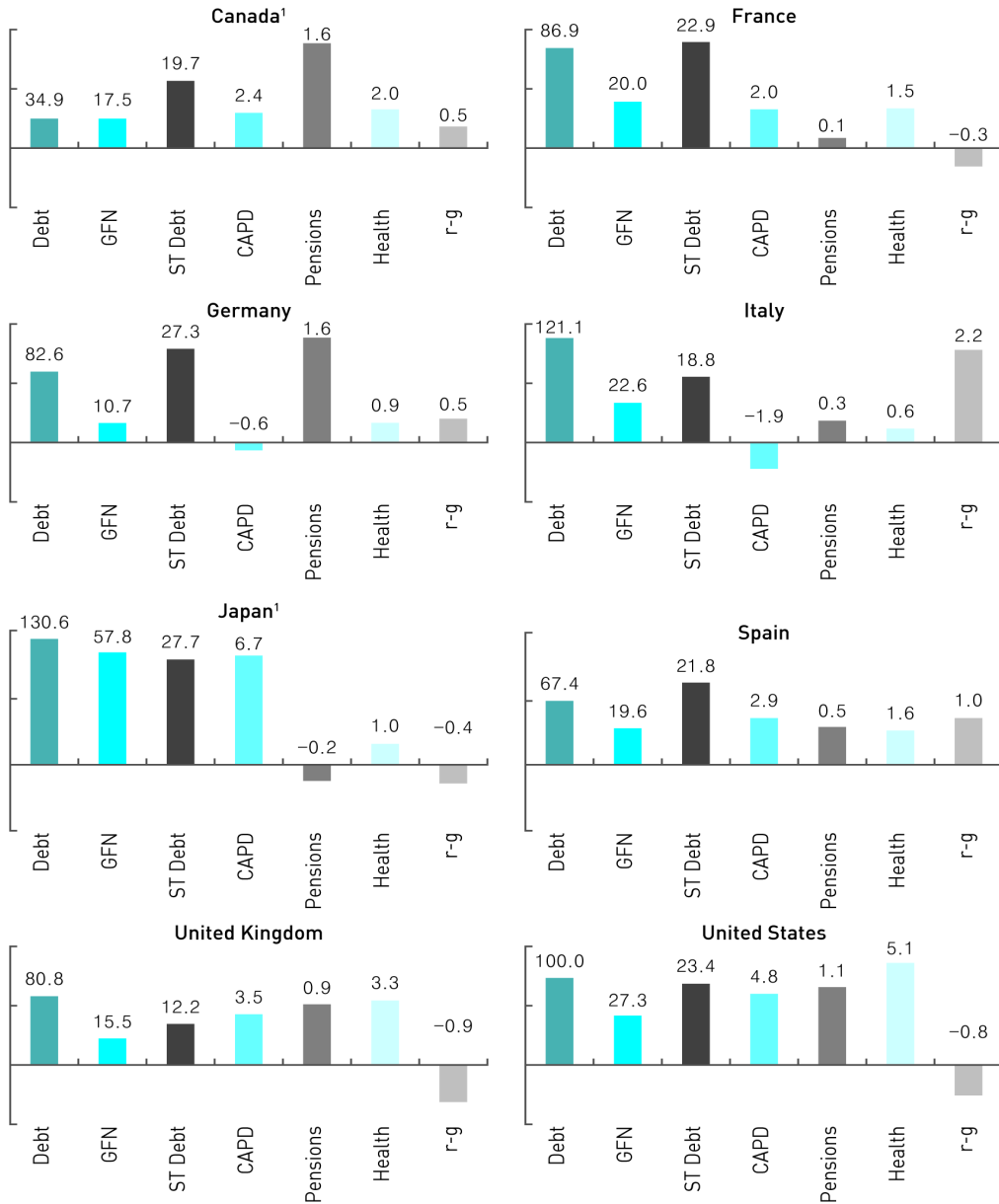
### 3) 미국과 일본의 드러나지 않는 재정 취약성

-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재정 상황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림1-III-4 참고) 차입비용은 위기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낮음

## SECTION 1 >>

- 미국과 일본 정부의 각종 재정지표 및 향후 5년간 증가할 부채 규모는 유로국가들과 흡사하며 사회보장지출은 오히려 유로국가들보다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 차입비용이 낮은 이유는 양국의 재정 펀더멘탈(fiscal fundamental)이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미국은 올해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금년 말까지 GDP 대비 0.5%p 감소시킬 전망이며, 부양책 종료와 사회보장지출 감소로 내년 말까지 추가로 약 1.5%p 감소시킬 예정임
  - 2011년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많은 수입과 낮은 경비 덕분에 4월 전망에 비해 1%p 개선
    - ※ 단,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의 효과는 미반영
- 일본은 예상보다 큰 지진피해 때문에 G-20 국가 중 가장 큰 재정적자( $\Delta 10.3\%$ , GDP 대비)를 기록함

[그림 1-III-4] G-7 국가와 스페인의 재정 펀더멘탈



Sources: BIS; Bloomberg L.P.; and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Note: The indicators reported are the seven with the best signaling power from Baldacci, McHugh, and Petrova (2011) (see also Box 5). *Debt* refers to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in percent of GDP; *GFN* is gross financing needs in percent of GDP; *ST Debt* is short-term debt securities at remaining maturity as a percentage of total debt securities, as of end-2010, as reported by BIS (except for Canada and Japan; see note 1); *CAPD* is cyclically adjusted primary deficit in percent of potential GDP; *Pensions* is the change in long-term public pensions spending from 2010 to 2030 in percent of GDP; *Health* is the change in long-term public health spending from 2010 to 2030 in percent of GDP; and *r-g* is the average interest rate-growth differential from 2012 to 2016 in percent. As each indicator is expressed in different units, the size-of-the-bars differential is standardized.

<sup>1</sup>Debt refers to net de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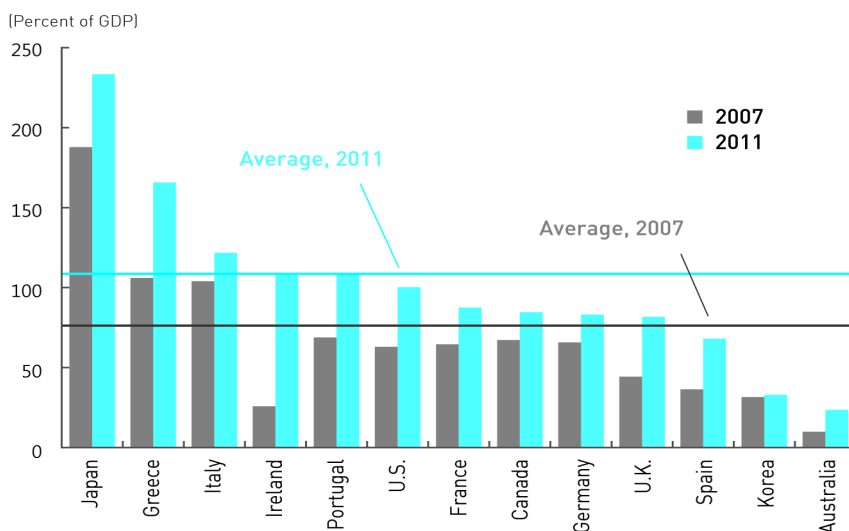
-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차입 비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 자국민의 높은 국채 보유 비율(안정적인 부채 구조)
    - 일본은 부채의 95%를, 미국은 부채의 70%를 자국민이 보유함
  - 중앙은행의 정부 부채 매입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GDP의 7.5%가량의 미재무부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은 GDP의 1%가량의 정부 증권(securities)을 구입함
  -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관투자자들이 양국의 부채와 증권을 보유함
    - 기관 투자자들(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금기금 등)은 일본 정부 증권의 24%를, 미국 재무부 증권의 12%를 보유함
    - 해외 법인이 미국 재무부 증권의 22%와 일본 정부 채권의 2%를 보유함
    - 미국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및 기타 정부기관이 재무부 채권의 33% 이상, 일본 유초은행(Japan Post Bank)이 정부 채권의 약 20%를 보유함
  - 은행부문 위험이 유럽보다 낮다고 평가
    -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정부지원으로 우발채무가 GDP 대비 35% 초과(잠재위험요인 존재)
  
- 미국과 일본은 유럽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게 재정건전화를 이행해야 함
  -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는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조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차입비용이 아직 낮을 때 재정 취약성을 보완해야 함
  -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외 신뢰도는 급격히 악화될 우려
  
- 양국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해결임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과 적자감축 승인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 2015년까지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양당은 추가적인 조치를 합의하고 이행해야 함
    - 특히 연금과 같은 보건 관련 지출 및 기타 의무 지출을 삭감해야 함
    - IMF는 세수 증가를 위해 조세지출의 단계적 폐지와 세원 확대를 권고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전망을 민간부문의 전망과 비교·검토할 것을 권고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더욱 강조됨
  - 조세와 사회보장 개혁안이 올해 의회에서 논의 예정
    - 개혁안은 소비세율 인상(5% → 10%)을 포함함
    - 개혁안은 2016년까지 기초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4.7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비율은 2021년부터 감소할 전망
    - IMF는 보다 신속한 부채비율 절감을 위해 더 많은 감축을 권고함

#### 4)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장기 지속가능성 전망

- 향후 실시될 많은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부채(public debt)비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의 경우 특히 그러함
- 2011년 일부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00%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는 위기 직전 평균에 비해 약 30%p 정도 높음 (그림 1-Ⅲ-5)

[그림 1-Ⅲ-5] 일부 선진국: 일반정부 총부채



Sources: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Note: Weighted averages based on 2009 purchasing-power-parity GDP.

## SECTION 1 >>

- 대다수 선진국에서 국가채무는 증가할 전망이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GDP 대비 5%p 일본은 GDP 대비 10%p 이상 증가할 전망
- 2015년 선진국 일반정부 총부채의 평균은 GDP 대비 10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20 선진국의 평균은 GDP 대비 117%임
  
-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목표 부채비율(선진국 60%, 개도국은 40%)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개선해야 할 경기 조정 기초재정수지 규모는 각각 GDP 대비 7.8%p와 2.75%p임
- 사회보장지출을 고려할 경우 미국은 GDP 대비 17.0%p, 일본은 GDP 대비 14.3%p 감축을 달성해야 함

〈표 1-Ⅲ-7〉 선진국: 일반정부 부채와 기초재정수지

(Percent of GDP)

	2010			Illustrative Fiscal Adjustment Strategy to Achieve Debt Target in 2030		
	Gross debt	Primary balance	CAPB	CAPB in 2020-30	Required adjustment between 2010 and 2020	Required adjustment and age-related spending, 2010-30
Australia	20.5	-4.7	-4.6	0.5	5.0	8.4
Austria	72.2	-2.5	-1.6	1.8	3.4	7.7
Belgium	96.7	-0.9	0.3	3.1	2.8	8.4
Canada	84.0	-4.9	-3.4	0.8	4.3	7.8
Czech Republic	38.5	-3.5	-2.5	0.9	3.4	4.0
Denmark	43.7	-2.4	-1.1	1.0	2.0	4.0
Estonia	6.6	0.4	4.3	0.4	-3.9	-3.5
Finland	48.4	-3.2	-0.7	0.4	1.1	6.8
France	82.4	-4.9	-3.1	3.1	6.3	7.9
Germany	84.0	-1.2	-0.4	2.0	2.3	4.6
Greece	142.8	-4.9	-5.7	9.8	15.5	19.0
Hong Kong SAR	33.2	4.3	-1.4	-0.9	0.4	...
Iceland	92.4	-2.5	-3.3	2.8	6.1	11.3
Ireland	94.9	-28.9	-6.4	5.6	12.0	13.5
Israel	77.4	-0.7	-0.6	1.0	1.6	...
Italy	119.0	-0.3	1.2	4.3	3.1	4.1
Japan	220.0	-8.1	-6.6	7.0	13.6	14.3
Korea	33.4	2.8	3.0	-0.6	-3.6	1.3
Netherlands	63.7	-3.9	-3.1	1.3	4.4	9.7
New Zealand	32.0	-4.6	-3.3	0.4	3.7	8.7
Norway	55.4	8.4	8.7	8.2	-0.4	4.3
Portugal	92.9	-6.3	-5.3	4.3	9.6	13.8
Slovak Republic	41.8	-6.8	-5.8	0.9	6.6	8.5
Slovenia	37.3	-4.1	-2.8	1.1	4.0	7.9
Spain	60.1	-7.8	-6.3	2.0	8.3	10.4
Sweden	39.7	-1.1	0.6	0.2	-0.5	-0.1
Switzerland	54.5	1.0	0.9	0.2	-0.7	...
United Kingdom	75.5	-7.7	-5.8	3.4	9.1	13.3
United States	94.4	-8.4	-5.4	5.4	10.8	17.0
Average	98.1	-5.7	-3.8	4.0	7.8	11.7
G-20 advanced	104.4	-6.2	-4.1	4.3	8.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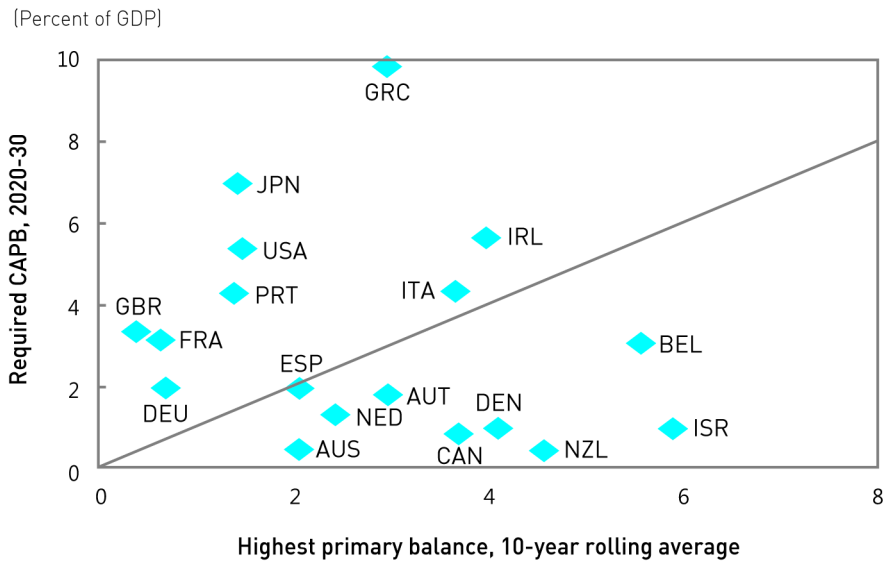
Sources: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Note: Averages are weighted by GDP at PPP. The table reports gross debt; 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CAPB) is reported in percent of nominal GDP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definition in percent of potential GDP). General government data are used where available. In the illustrative fiscal adjustment strategy, the CAPB is assumed to improve in line with *Fiscal Monitor* projections in 2011-12 and gradually from 2013 until 2020; thereafter, it is maintained constant until 2030. The fifth column shows the CAPB adjustment needed between 2010 and 2020 to bring down the debt ratio to 60 percent in 2030 (shaded entries, "higher debt") or to stabilize debt at the end-2012 level by 2030 if the country debt-to-GDP ratio is less than 60 percent (no shading, "lower debt"). The analysis is illustrative and makes some simplifying assumptions: in particular, up to 2015, an interest rate-growth differential of 0 percentage points is assumed, broadly in line with WEO assumptions, and 1 percentage point afterward, regardless of country-specific circumstances. The last column adds the projected increase in health care and pension spending between 2010 and 2030 (see Statistical Table 9), which will require offsetting measures. Illustrative scenarios for Australia, Canada, Japan, and New Zealand are based on their net debt ratios (see Statistical Table 8 for net debt data); for Japan, a net debt target of 80 percent of GDP is assumed, which corresponds to a target of 200 percent of GDP for gross debt. For Norway, maintenance of primary surpluses at the projected 2012 level is assumed (primary balance includes oil revenue, whereas elsewhere in this document the non-oil balance is shown). For the United States, the CAPB excludes financial sector support recorded above the line. For countries not reporting CAPB or output gap, a Hodrick-Prescott filter is used to estimate potential output, and the CAPB is estimated assuming growth elasticities of 1 and 0 for revenues and expenditures, respectively. For details, see "Data and Conventions" in the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 SECTION 1 >>

- 2030년까지 목표 부채비율 달성을 위해, 2020~30년 동안 각국이 유지해야 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부채비율을 정상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의 재정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Ⅲ-6] 2030년 부채목표 달성 위해 각국이 2020~30년간 유지해야 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For each country, this figure reports, on the vertical axis, the 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that needs to be attained by 2020 and maintained until 2030 to achieve the illustrative debt target by 2030, and on the horizontal axis, the largest primary surplus that the country has ever attained, on average, in any 10-year period since 1970(subject to data availability). The figure includes all advanced economies with required adjustments larger than 2 percent of GDP between 2010 and 2020 for which more than 15 years of data are available.

## 다. ECB,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Debt in Euro Area (2011년 10월 발표)\*

### 1) 국가채무 측정의 이론적 개념

- 국가채무는 이론상 전년도 재정적자에 따른 누적 채무를 의미하나, 실제 측정 시 적자-채무 조정과정(deficit-debt adjustment, DDA)이 매우 복잡
  - 적자-채무 조정(DDA) 시 순금융자산 취득에 의한 추가 차입, 시장-액면가 조정(the market-to-face-value adjustment), 환율변동, 통계적 조정 등을 고려
  - GDP 대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음

$$\frac{D_t - D_{t-1}}{GDP_t} = \frac{EXP_t - REV_t}{GDP_t} + \frac{DDA}{GDP_t}$$

여기서,  $D$ : 해당연도 말 국가채무 규모,  $EXP$ : 세출,  $REV$ : 세입,  $DDA$ : 적자-부채 조정규모

- 국가채무의 증가는 정부의 이자지출을 높이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국가채무의 증가는 왜곡적 조세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및 장기금리 상승, 민간투자 위축, 성장건인 지출 감소를 유발(Checherita and Rother(2010) 등)
  - 또한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한 국가의 자본유출을 조장하여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초래(Reinhart and Rogoff(2009) 등)
- 국가채무 규모와 구조는 각각 정부의 상환능력(solveny)과 유동성(liquidity) 문제로 직결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위험의 함의를 제공
  - (채무규모) 정부는  $t$ 기에 현재와 미래 재정수지 흑자(현재가치)가 초기 채무 수준과 미래 재정적자(현재가치)의 합보다 더 높을 때 채무상환이 가능
  - (채무구조) 정부는  $t$ 기에 조달 가능한 재정과 표시통화(currency denomination) 유동

\* 한국조세연구원 이성호 연구원 (shlee@kipf.re.kr)

자산이 만기도래 부채와 일치할 때 유동성 조건을 만족

-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현재와 미래에 정부가 사회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재정운용능력과 관련됨
  - 일반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정부예산제약의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문제의 단초를 제공
  - 다음과 같은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정부가 채무 상환 비용을 조달을 위해 미래에 충분히 큰 규모의 기초재정수지를 운용해야 함을 의미

$$D_0 - \sum_{t=1}^{\infty} \frac{pb_t}{(1+r)^t} = 0$$

여기서,  $D_0$ : (t=0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pb_t$ : (t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r$ :명목금리 - 경상성장률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금융시장 내에서 만기연장위험(rollover risk)관련 정부의 자금조달 마찰은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악영향
  - 또한 국채시장 일부에 유동성 부족은 은행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쳐 경제 내에 신용 경색을 초래
- 기존 연구에 의한 국가부채(government liability) 및 자산의 4대 분류(Brixi and Schick(2002), Ciammarioli et al(2007))
  - 특정 사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를 직접(비우발)부채 및 우발부채로 구분
    - 우발부채는 보통 정부와 기타 기관 간의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
    - 우발부채와 비교하면 우발자산은 금융거래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계약상 합의(제3자에 의한 지급보증, 신용장, 파생상품 등)를 의미
  - 또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규정 여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를 명시적 부채 및 암묵적 부채로 분류

- 암묵적 부채와 대비하여 암묵적 자산은 이연법인세수 등과 같이 정부의 잠재적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미래자산을 의미
  - 따라서 직접부채와 명시적 부채는 정부의 대차대조표(on-balance sheet) 상에 기록되지만, 우발부채 및 암묵적 부채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로서 ‘숨겨진 채무(hidden debt)’를 의미
    - 우발부채 및 암묵적 부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위험에 해당
- IMF(2009)는 최근 금융 및 경제위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인 정부 대차대조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
- 첫째, 2008년 이후 금융부문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정부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었으며 금융자산과 부채의 구조 및 가치가 변화
  - 둘째, 정부부채 범위의 확대(금융파생상품 또는 기타 외상매입금 등) 및 금융자산 포지션 고려(순채무 등)
  -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부외거래(off-balance-sheet) 자산 및 부채의 고려

〈표 1-Ⅲ-8〉 일반정부 통합기준 대차대조표

	Financial assets (government has a claim that somebody else will pay to government)	Liabilities (government is obliged to pay to somebody else)
Balance sheet items (ESA 95)	Currency and deposits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excluding derivatives Financial derivatives Loans granted Shares and other equity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Other accounts receivable Non-financial assets Produced fixed assets Non-produced assets	Currency and deposits ( <i>EDP debt</i> )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excluding derivatives ( <i>EDP debt</i> ) Financial derivatives Loans received ( <i>EDP debt</i> )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Other accounts payable Net worth (B.90)
Off-balance-sheet items	Implicit assets (e.g. additional revenue stemming from future taxes, broadening tax bases, increasing social contributions) Contingent assets	Implicit liabilities (e.g. unfunded PAYG pension pillar) Contingent liabilities (e.g. guarantees)

## 2) 국가채무의 규모

가) 국가부채(Government liabilities)와 국가채무(Government debt)

- 국가 (총)채무의 개념은 채무에 포함되는 부채항목 및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기준 채무(EDP debt)와 국민계정기준 채무(ESA debt)로 구분
- EDP기준 채무(EDP debt or Maastricht debt): 유로국가에서 통용되는 국가채무
  - 일반정부 기준으로 통합하여 해당연도 말 명목가치로 나타낸 일반정부의 총채무를 의미
    - 단, 금융파생상품 및 무역 신용장 등과 같은 금융수단 제외
  - 동 채무는 유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하에서 재정운영 감시체계인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상의 국가채무(GDP 대비 60%) 기준으로 활용
  - EDP기준 채무는 명목가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격, 시장성 또는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정부자산의 가격 및 시장성이 변동함에 따라 순채무 집계 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총채무는 불변
  - 그러나 EDP기준 채무와 국제기준에 따른 채무는 집계방식의 차이로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
- ESA기준 채무(ESA debt): 국민계정기준 채무
  - 유럽 국민계정기준(European System of Accounts 95, ESA95)에 따라 산출되는 일반정부 총채무를 의미
  - 국민계정에서 ESA 정부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실제로 모든 명시적 정부부채를 포함
    - 집계 시 EDP기준 부채에 포함된 금융수단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 외상매입금, 보험책임준비금 등을 모두 산입(단, 주식 제외)
  - 일반정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ESA기준 부채는 시장가치로 기록

- ESA기준 부채수준은 명목가치로 측정되는 EDP기준 채무와는 달리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표 1-Ⅲ-9〉 EDP기준 및 ESA기준 채무 산정의 방법론 비교

	EDP debt	ESA debt
Sector delineation	General government sector (S.13)	
Gross concept	Gross debt (i.e. financial assets of the general government are not subtracted in the calculation of EDP or ESA debt)	
Breakdown by financial instrument	“EDP instruments”: currency and deposits;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excluding derivatives; loans	“ESA debt instruments”: financial derivatives; other accounts payable;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Valuation rules	Nominal value	Market value
Consolidation	Consolidated (across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Dual presentation: non-consolidated and consolidated(quarterly financial accounts for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Main advant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P instruments” are valued in nominal terms, avoiding market fluctuations in the calculation of EDP debt</li> <li>• Simplicity in the calculation of EDP debt (mainly linked to the exclusion of liab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in practice)</li> <li>• EDP debt is directly applicable only in the EU contex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A debt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of government liabilities</li> <li>• ESA debt allows the calculation of net debt, as assets are also valued at market prices</li> <li>• ESA debt facilitates international comparisons, as government balance sheet data are generally available and directly comparable</li> </ul>

□ 국가채무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GDP 대비 EDP 채무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

○ 1) 명목GDP 성장률( $g$ ), 2) 일반정부기준 재정적자( $EXP-REV$ ), 3) 적자-채무조정( $DDA$ )

$$\Delta \frac{D_t}{GDP_t} \approx \frac{EXP_t - REV_t}{GDP_t} + \frac{DDA_t}{GDP_t} - \frac{g}{1+g} \cdot \frac{D_{t-1}}{GDP_t}$$

○ 2007~2010년 유로지역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경기수축으로 명목GDP 성장률은 국가채무 증가요인이었으나 2009년 플러스 명목성장은 채무비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
- 2008~2010년 중 채무비율 증가는 재정안정화 장치 작동 및 대규모 재정의 경기부양책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에 기인
- 2007~2010년 중 적자-채무조정 규모가 플러스라는 것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적자에 의한 증가 이상으로 상승함을 의미

## SECTION 1 >>

- 정부가 금융위기로 약화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증가시킨 데 기인

〈표 1-Ⅲ-10〉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GDP대비 채무 비율 변화

(as percentage of GDP)		2007	2008	2009	2010	2011 <sup>1)</sup>	2012 <sup>1)</sup>
1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66.2	69.9	79.3	85.2	87.7	88.5
2	Change in debt ratio (2=3+4+5)	-2.3	3.6	9.5	6.0	2.4	0.8
	<i>of which contribution of:</i>						
3	Nominal GDP growth	-3.5	-1.6	2.3	-2.0	-2.5	-2.9
4	General government deficit (4=4a+4b)	0.7	2.0	6.3	6.0	4.3	3.5
4a	Automatic stabilisers	-1.0	-0.5	2.0	1.6	1.3	1.0
4b	Other	1.7	2.5	4.3	4.4	3.0	2.5
5	Deficit-debt adjustment (5=5a+5b)	0.5	3.2	0.9	1.9	0.6	0.2
5a	<i>Of which support to financial sector</i>	0.0	1.9	0.5	2.5	.	.
5b	<i>Of which other deficit-debt adjustment</i>	0.5	1.3	0.4	-0.6	.	.

Sources: ECB and European Commission.  
 1)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11 forecasts (EDP debt for 2011-12,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not consolidated).  
 2) Data refer to EDP debt.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For 2010,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sovereign debt crisis is consolidated.

〈표 1-Ⅲ-11〉 국가별 EDP 채무 추이

(as percentage of GDP)	1999	2007	2010	2011 <sup>1)</sup> (forecast)	2012 <sup>1)</sup> (forecast)	EDP debt accumulation (1999-2007)	EDP debt accumulation (2007-2012)
Belgium	113.7	84.2	96.8	97.0	97.5	-29.5	13.3
Germany	60.9	64.9	83.2	82.4	81.1	4.0	16.1
Estonia	6.5	3.7	6.6	6.1	6.9	-2.8	3.2
Ireland	48.2	25.0	96.2	112.0	117.9	-23.2	92.9
Greece	100.3	105.4	142.8	157.7	166.1	5.1	60.7
Spain	62.3	36.1	60.1	68.1	71.0	-26.2	34.9
France	58.8	63.9	81.7	84.7	86.8	5.1	22.9
Italy	113.7	103.6	119.0	120.3	119.8	-10.1	16.2
Cyprus	58.9	58.3	60.8	62.3	64.3	-0.6	6.0
Luxembourg	6.4	6.7	18.4	17.2	19.0	0.2	12.4
Malta	57.1	62.0	68.0	68.0	67.9	4.8	5.9
Netherlands	61.1	45.3	62.7	63.9	64.0	-15.8	18.7
Austria	67.3	60.7	72.3	73.8	75.4	-6.6	14.7
Portugal	49.6	68.3	93.0	101.7	107.4	18.7	39.1
Slovenia	24.3	23.1	38.0	42.8	46.0	-1.2	22.9
Slovakia	47.8	29.6	41.0	44.8	46.8	-18.3	17.2
Finland	45.7	35.2	48.4	50.6	52.2	-10.5	17.0
Euro area <sup>2)</sup>	71.7	66.2	85.2	87.7	88.5	-5.5	22.3

Sources: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 European Commission (observations published by Eurostat in its News Release 60/2011 of 26 April 2011;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11 forecasts (EDP debt for 2011-12).  
 1) European Commission projections do not include the impact of the activation of the EFSF in the context of financial support to Ireland.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not consolidated.  
 2)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For 2010,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consolidated.

〈표 1-Ⅲ-12〉 2010년 금융수단별 일반정부 EDP 부채

	(as percentage of total)			
	Currency and deposits	Financial instruments		Long-term securities
		Loans	Short-term securities	
Belgium	0.4	10.5	12.7	76.3
Germany	0.5	32.5	4.4	62.6
Estonia	0.0	74.8	0.0	25.2
Ireland	9.3	23.2	7.3	60.2
Greece	0.3	22.9	2.8	74.1
Spain	0.6	16.0	13.7	69.8
France	1.4	13.9	15.0	69.6
Italy	8.5	7.5	7.0	77.0
Cyprus	0.0	29.5	4.6	65.9
Luxembourg	2.7	45.1	0.0	52.2
Malta	1.0	5.3	8.9	84.8
Netherlands	0.1	21.2	14.4	64.3
Austria <sup>1)</sup>	0.0	15.8	4.7	79.5
Portugal	7.3	12.9	13.0	66.8
Slovenia	0.3	10.9	0.2	88.6
Slovakia	0.3	7.4	4.7	87.7
Finland	0.6	15.9	13.8	69.8
Euro area	2.8	18.1	9.0	70.0

Source: ECB calculations (based on Eurostat and national data).

1) Data refer to 2009.

## 나) 국가 자산(Government asset) 및 순채무(Net government debt)

- 상환능력 전망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수준 평가시 금융자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유로지역 국가의 시장가치 기준 금융자산은 정부부채 대비 1/3 이상
  - 2008~2010년 GDP 대비 금융자산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수축으로 금융 부문 지원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표 1-Ⅲ-13〉 유로지역의 GDP 대비 정부 금융자산 변화 추이

(as percentage of GDP)		2007	2008	2009	2010
1	Government financial assets <sup>1)</sup>	29.2	29.6	33.1	34.7
2	Change in financial assets-to-GDP ratio (2=3+4)	0.9	0.4	3.5	1.6
<i>of which contribution of:</i>					
3	Nominal GDP growth	-3.5	-1.6	2.3	-2.0
4	Financial assets adjustment	4.4	2.0	1.2	3.6
4a	<i>Of which support to financial sector</i>	0.0	1.9	0.4	2.5
4b	<i>Of which other financial assets adjustment</i>	4.4	0.1	0.8	1.1

Sources: ESCB and European Commission.

1) Data refer to government financial assets. Government financial assets at market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 순채무의 평가는 상환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지표로서 중요(특히 국가부채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동반할 경우)
  - 유로지역 국가들은 통화와 예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취득으로 2007년 대비 2010년 통합기준 금융자산(GDP의 약 35%)이 5.5% 증가
  - 순부채는 해당연도 정부부채(또는 ESA 채무) - 금융자산으로 계산
  
- 정부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한 완충장치이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 자산별 유동성 정도의 차이로 채무상환에 적합한 자산 선별이 난해
    - 정부의 공기업 지분은 유동성이 낮아 부채상환에 이용 불가
  - 경제위기 시 금융자산의 시장가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금융자산을 손실없이 유동화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음
  - 정부가 금융자산 매각 시 채무변제를 최우선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다) 부외거래(Off-balance-sheet) 자산 및 부채

-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 정부가 은행간 대출이나 특수목적회사에 의해 발행된 채권, 소규모 은행 저축 등에 대해 보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 우발채무는 주로 금융부문 안정화 조치(자본주입, 자산매입 등)나 금융지원협정 등의 결과로 나타남
  - 정부보증채무는 ESA95 기준에 따라 부외거래에 기록

〈표 1-III-14〉 금융부문 안정화조치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percentage of GDP)								
	Measures impacting on government debt (2008-10)						Measures impacting on government contingent liabilities (2008-10)	
	Capital injections		Asset purchase	Other measures	Total impact on government debt	o/w redemptions	Total contingent liabilities	Ceiling
	Acquisition of shares	Loans						
Belgium	5.7	0.0	0.0	0.1	5.8	2.0	15.8	28.0
Germany	1.9	0.0	11.1	0.5	13.5	0.0	2.8	7.1
Estonia	0.0	0.0	0.0	0.0	0.0	0.0	0.0	0.0
Ireland	7.0	0.0	0.0	16.2	23.2	0.0	125.2	125.2
Greece	1.6	0.0	0.0	0.7	2.3	0.0	25.1	27.4
Spain	0.0	0.0	2.4	0.0	2.4	0.2	5.6	5.8
France	0.2	0.0	0.0	0.0	0.2	0.4	4.7	23.6
Italy	0.3	0.0	0.0	0.0	0.3	0.0	0.0	0.0
Cyprus	0.0	0.0	0.0	0.0	0.0	0.0	17.2	17.2
Luxembourg	6.1	0.0	0.0	0.0	6.1	0.2	3.2	3.2
Malta	0.0	0.0	0.0	0.0	0.0	0.0	0.0	0.0
Netherlands	5.8	0.8	2.4	0.0	9.0	9.7	6.8	6.8
Austria	2.1	0.0	0.0	0.4	2.6	0.0	7.8	17.6
Portugal	1.2	0.0	2.2	0.3	3.6	0.0	3.1	11.7
Slovenia	0.0	0.0	0.4	3.5	4.0	0.0	6.1	33.3
Slovakia	0.0	0.0	0.0	0.0	0.0	0.0	0.0	0.0
Finland	0.0	0.0	0.0	0.0	0.0	0.0	0.0	0.0
Euro area	1.5	0.1	3.5	0.5	5.5	0.8	6.5	13.1

Sourc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Notes: The cut-off date was end-April 2011. Contingent liabilities on retail bank deposits are not included.

〈표 1-III-15〉 금융지원협정이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EUR billion)						
	EFSF (2010-13)		Effective lending capacity	ESM (2013-17)		Paid-in capital
	Effective lending capacity	Maximum (over) guarantees		Subscribed capital		
Belgium	15.3	27.0	17.4	24.3	2.8	
Germany/KdW	119.4	211.0	135.7	190.0	21.7	
Estonia	.	2.0	0.9	1.3	0.1	
Ireland	7.0	12.4	8.0	11.1	1.3	
Greece	12.4	21.9	14.1	19.7	2.3	
Spain	52.4	92.5	59.5	83.3	9.5	
France	89.7	158.5	101.9	142.7	16.3	
Italy	78.8	139.3	89.6	125.4	14.3	
Cyprus	0.9	1.5	1.0	1.4	0.2	
Luxembourg	1.1	1.9	1.3	1.7	0.2	
Malta	0.4	0.7	0.4	0.5	0.1	
Netherlands	25.1	44.4	28.6	40.0	4.6	
Austria	12.2	21.6	13.9	19.5	2.2	
Portugal	11.0	19.5	12.5	17.6	2.0	
Slovenia	2.1	3.7	2.1	3.0	0.3	
Slovakia	4.3	7.7	4.1	5.8	0.7	
Finland	7.9	14.0	9.0	12.6	1.4	
Euro area	440.0	779.6	500.0	700.0	80.0	

Source: ESCB.  
Notes: 1) The bilateral loans to Greece as approved in the first EU/IMF rescue package (2010). 2) The commitments under the EFSF as amended in the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f 23/24 June 2011. 3) The commitments under the ESM in the form of paid-in capital in relation to the total subscribed capital of €700 billion as specified in the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f 23/24 June 2011.

□ 암묵적 부채(Implicit liability)

- 암묵적 부채를 측정하는 사용되는 국민계정상 접근법은 공적연금의 순현재가치법 (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획득한 권리에 기초한 부채)
- 대표적인 예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잠재적 비용 증가(연금부채 등)

〈표 1-III-16〉 기관별 연금부채 산출방식

(as percentage GDP)						
Source	OECD <sup>1)</sup>	IMF <sup>1)</sup>	DESTATIS <sup>2)</sup>	INSEE <sup>3)</sup>	Eurostat/ECB Task Force on Pensions	
Method	Implicit pension debt (ABO)	Implicit pension debt (PBO)	Accrued-to-date liabilities (PBO)	Accrued-to-date liabilities (PBO)	Accrued-to-date liabilities (PBO)	
Coverage	Pension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Defined-benefit schemes
End-year	1990	1995	2005	2003	2007	2007
Germany	157 <sup>4)</sup>	221 <sup>4)</sup>	230	-	275	47
France	216	265	-	259	292	60
Italy	242	357	-	-	322 <sup>5)</sup>	1 <sup>5)</sup>
Euro area	-	-	-	-	278	52

Sources: 1) OECD and IMF studies, op. cit. by: Holzmann et al. (2001).  
 2) Braakmann et al. (2007, pp. 1167-1179).  
 3) Blanchet and Le Minez (2008).  
 4) Data refer to West Germany.  
 5) End-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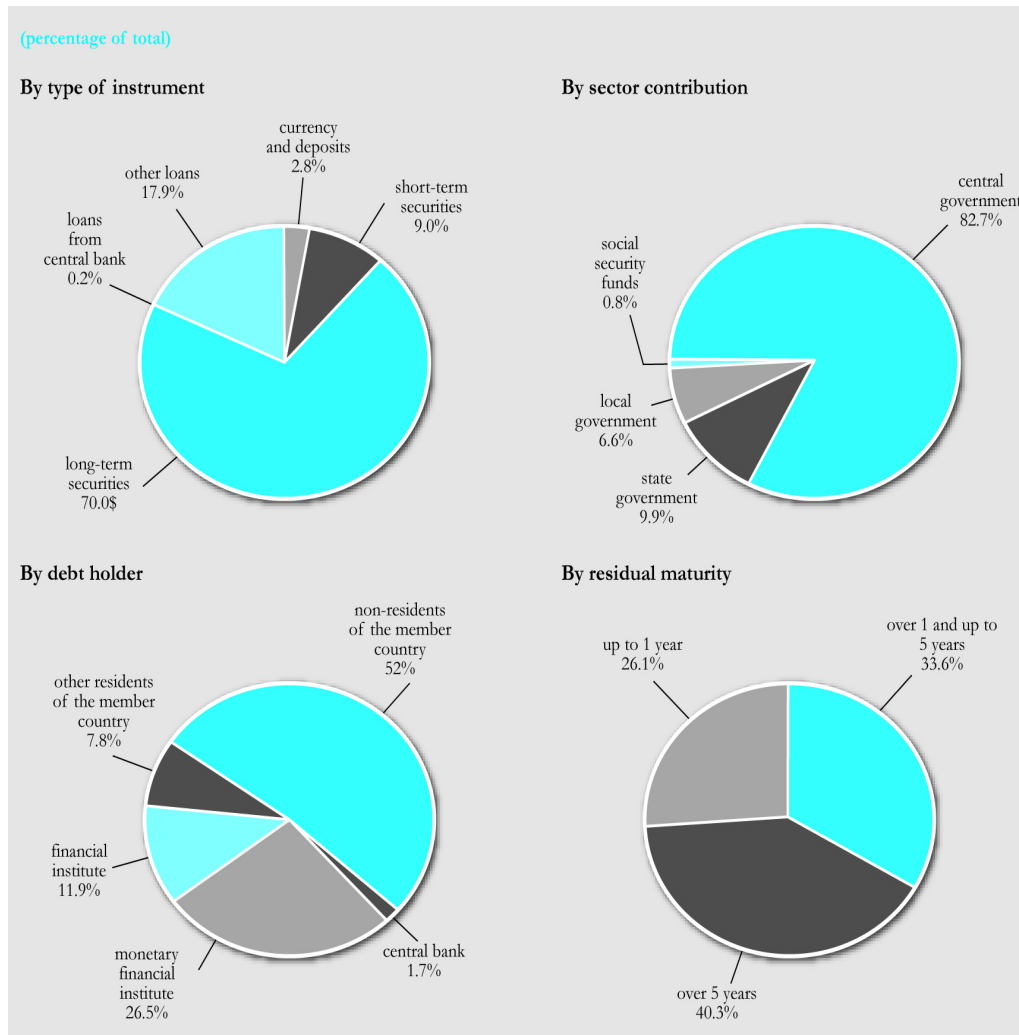
□ 암묵적 자산(Implicit assets)

- 정부의 암묵적 자산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관세 수입을 포함한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를 의미(Buiter(1983))
- 즉, 암묵적 자산은 미래 세수확보 기회에 대한 전망이며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
  - 현행 세부담을 낮출수록 미래의 세수확보 기회가 높아짐
  - 효율적 국세행정
  - 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할 경우 추가적 조세에 대한 공공의 선호가 높을 때

### 3) 국가채무의 구조

- 만기구조, 물가연동제, 통화표시 및 투자자 등에 따른 국가채무의 구조는 정부의 채무 비용 및 만기연장 위험에 영향을 미침
  - 정부는 국채 발행 관련 리스크 관점에서 이자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시장 세분화에 따른 유동성 증대, 벤치마크 채권의 부활, 투자자 수요에 맞는 만기구조를 가진 국채발행 등을 통해 정부 국채시장의 발전 등에 중점
  
- 거시경제에서 국가채무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선진국의 국채수익률 곡선은 민간부문 채권의 가격결정을 위한 벤치마크로서의 역할
    - 국가채무의 만기구조는 수익률 곡선 및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줌
    - 정부차입이 높아질수록 장기 경제성장에 중요한 민간부문 대출을 구축
  - 단기채무 비중이 높은 국가는 통화정책 금리 증가에 취약할 가능성
    - 정부가 재정수지 전반의 높은 이자지출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
  - 물가연동채권 발행은 정부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용인하도록 중앙은행에 압력을 행사할 유인이 낮아짐
  - 국내표시통화는 이자지출과 세수 간의 통화 미스매치에서 오는 환변동 위험을 낮춤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비중은 급격한 외국자본 동결이나 급격한 환율변동 상황에서 중요

[그림 1-III-7] 2010년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구조



Source: ESCB.

Note: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 평상시 정부는 해당 위험수준에서 채무변제비용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그러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차환리스크 (refinancing risk)를 최소화할 경우 유의할 필요
    - 특히 단기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단기적 금융수단을 이용

- 그러나 이는 차환 리스크를 높여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의 국가채무의 만기연장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국가채무 구조는 정부와 투자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나 양자의 선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재정적자나 만기도래 부채 연장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투자 전략에 따라 이질적 선호를 가짐
  - 연금 등을 선호하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의 만기구조에 맞는 금융수단을 선호
  - 상업은행 또는 비금융기업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 금융수단을 선호
- 과거의 경험도 국가채무 구조 선택에 중요
  -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과 잦은 시장변동을 경험한 국가의 투자자들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변동금리 금융수단(물가연동채권 등)을 선호
  - 물가연동채권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민감도나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려

## SECTION 1 >>

〈표 1-Ⅲ-17〉 2010년 국가채무 보유주체별 현황

(percentage of total government debt)

	Total residents (a)+(b)+(c)+(d)	Resident creditors			Other residents (d)	Non-resident creditors (e)
		Central bank (a)	Other MFIs (b)	Other financial corporations (c)		
Belgium	43.7	1.4	23.5	14.7	4.1	56.3
Germany	51.0	0.2	31.5	9.2	10.1	49.0
Estonia	62.3	0.0	57.0	1.1	4.2	37.9
Ireland	-	-	-	-	-	-
Greece	30.4	3.2	23.9	0.3	3.1	69.6
Spain	58.5	3.4	28.4	7.9	18.8	41.5
France	-	-	-	-	-	-
Italy	55.4	3.6	27.0	15.6	9.1	44.6
Cyprus	50.3	14.2	22.3	6.6	7.2	49.7
Luxembourg	69.9	0.0	47.5	-	-	30.1
Malta	94.4	5.9	40.2	19.6	28.7	5.6
Netherlands <sup>1)</sup>	31.7	0.3	18.2	10.6	2.6	68.3
Austria <sup>1)</sup>	23.6	0.4	12.0	6.9	4.2	76.4
Portugal	36.7	0.8	22.4	5.8	7.8	63.3
Slovenia	42.3	1.0	27.7	10.1	3.5	57.7
Slovakia	63.0	0.0	62.4	0.0	0.6	37.0
Finland	28.9	0.0	12.5	1.2	15.2	71.1
Euro area	47.9	1.7	26.5	11.9	7.8	52.1

Source: ESCB.  
Notes: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consolidated.  
1) Data refer to 2009.

〈표 1-Ⅲ-18〉 2010년 국가채무 만기구조별 현황

	(percentage of total government debt)				
	Up to 1 year	Residual maturity		Over 5 years	
		Over 1 and up to 5 years	o/w variable interest rate	Over 5 years	o/w variable interest rate
Belgium	24.0	35.5	0.0	40.5	0.0
Germany	28.1	35.5	-	36.5	-
Estonia	8.3	32.9	0.0	58.8	0.0
Ireland	-	-	-	-	-
Greece	10.2	41.5	13.8	48.3	15.3
Spain	21.5	35.9	0.0	42.6	0.0
France	33.3	31.7	0.2	35.0	0.1
Italy	25.2	30.4	5.4	44.5	4.2
Cyprus	10.6	44.9	0.0	44.5	10.2
Luxembourg	9.0	-	-	-	-
Malta	13.7	45.1	1.6	41.2	0.0
Netherlands <sup>1)</sup>	29.6	31.7	0.0	38.7	0.0
Austria <sup>1)</sup>	8.8	34.2	0.7	57.0	0.6
Portugal	29.5	28.5	1.3	41.9	0.2
Slovenia	8.8	34.1	3.8	57.1	0.8
Slovakia	13.8	43.0	7.8	43.3	0.1
Finland	24.0	34.9	12.8	41.1	13.7
Euro area	26.1	33.6	2.9	40.3	2.9

Source: ESCB.  
Notes: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consolidated.  
1) Data refer to 2009.

## □ 국가채무의 만기구조 및 표시통화는 차환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 기초 만기는 발행 시점에서의 상환기간인 반면 잔존 만기는 기준일자로부터 상환기간을 의미
- 국내 금융시장이 발달된 국가들은 외화표시 채무에 비해 채무상환조건에 대한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국통화표시 채무를 선호
  - 유로지역 국가채무는 대부분 유로화표시 채무
- 원칙적으로 정부는 증세, 신규 조세의 부과 및 왜곡적 정부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채무를 상환

〈표 1-Ⅲ-19〉 2010년 국가채무 표시통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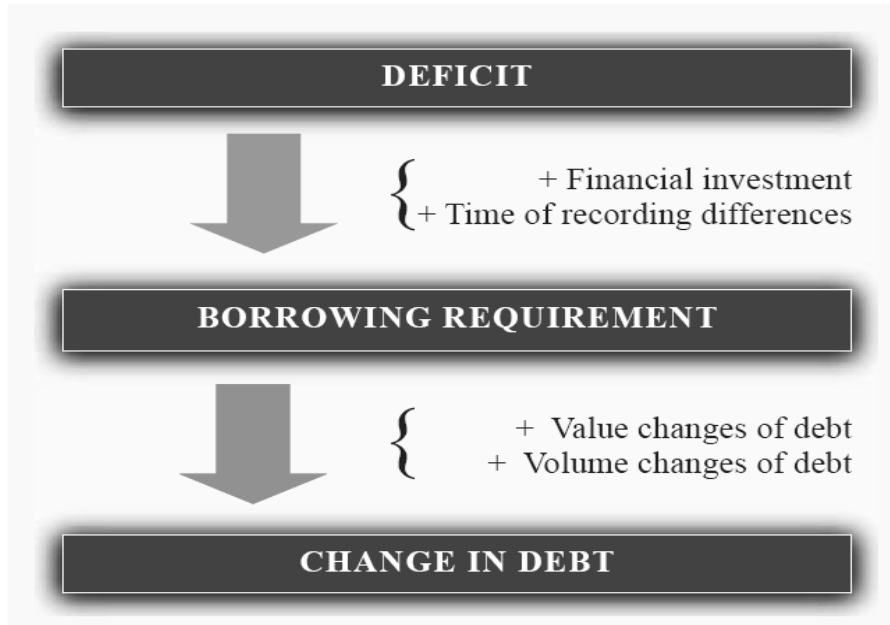
(percentage of total government debt)		
	Euro or participating currencies	Other currency
Belgium	100.0	0.0
Germany	98.9	1.1
Estonia	100.0	0.0
Ireland	-	-
Greece	98.2	1.8
Spain	99.4	0.6
France	99.9	0.1
Italy	99.8	0.2
Cyprus	99.7	0.3
Luxembourg	100.0	0.0
Malta	100.0	0.0
Netherlands <sup>1)</sup>	92.4	7.6
Austria <sup>1)</sup>	97.3	2.7
Portugal	98.5	1.5
Slovenia	99.8	0.2
Slovakia	99.7	0.3
Finland	100.0	0.0
<b>Euro area</b>	<b>99.1</b>	<b>0.9</b>

Source: ESCB.  
Notes: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is consolidated.  
1) Data refer to 2009.

## 4) 정책적 시사점

- 동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 및 시장신뢰도 개선을 통한 하향 안정화 노력
  - 국가채무 관련 지표들에 대한 재정운영 감시(fiscal surveillance) 강화 필요
  - 상환능력 평가시 정부 금융자산의 고려
  - 총부채 개념의 기준 정립
  - 주어진 국가채무 규모에서 해당 구조는 재정 취약성의 주요인

〈참고〉 적자-채무 조정과정(deficit-debt adjustment, DDA)의 예시



(annual average as a percentage of GDP)

Countries	DDA										Time of recording differences <sup>1)</sup>	
	Financial investment									Valuation & volume effects		
	Currency and deposits	Securities	Shares			Loans	Change in volume of debt					
		Equity injections	Other investment in shares	Privatisations								
BE	0.2	-0.3	0.1	0.0	0.0	0.1	0.0	-0.2	-0.4	0.2	0.2	0.3
DE	-0.3	-0.3	0.0	0.0	-0.2	0.2	0.0	-0.4	-0.1	-0.1	-0.1	0.1
IE	1.6	0.7	0.5	0.2	-0.1	1.1	0.0	-1.3	0.2	0.6	0.0	0.2
GR	3.2	0.6	0.2	0.0	0.4	0.3	0.9	-0.7	0.0	0.9	0.0	1.7
ES	0.8	1.0	0.8	0.1	-0.1	0.2	-0.3	0.0	0.2	0.0	0.1	-0.3
FR	0.6	0.5	0.1	0.0	0.4	0.1	0.5	-0.2	0.0	0.1	0.1	0.0
IT	0.0	0.0	0.1	0.0	-0.4	0.1	0.1	-0.6	0.3	-0.5	0.0	0.5
LU	2.6	2.8	2.0	0.5	0.3	n.a.	n.a.	n.a.	-0.1	0.1	n.a.	-0.2
NL	0.0	-0.2	0.1	0.0	-0.2	0.0	0.0	-0.3	-0.1	0.1	0.0	0.1
AT	0.9	1.1	0.2	0.3	0.1	n.a.	n.a.	n.a.	0.6	-0.4	n.a.	0.1
PT	0.6	0.2	-0.1	0.2	-0.1	0.5	0.1	-0.7	0.2	-0.1	0.0	0.5
FI	4.5	4.2	0.7	2.6	1.1	0.1	2.3	-1.3	-0.2	0.4	-0.1	-0.1
Euro area <sup>2)</sup>	0.3	0.2	0.2	0.1	0.0	0.2	-0.1	-0.4	0.1	-0.1	0.0	0.2

Source: Eurosystem.

1) "Time of recording differences" mainly includes transactions in other accounts receivable/payable and the statistical discrepancies between the non-financial and financial accounts of general government.

2) Data for the euro area do not include Slovenia.

## 2. 보고서 목록

### 가. 국제기구

IMF

1. Labor Market Regulations in Low-, Middle- and High-Income Countries: A New Panel Database, IMF Working Paper, WP\_11\_154 (01 Jul, 2011)
2. The External Impact of China's Exchange Rate Policy: Evidence from Firm Level Data, IMF Working Paper, WP\_11\_155 (01 July, 2011)
3. The Dynamic Implications of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57 (01 July, 2011)
4. Nonperforming Loans and Macrofinancial Vulnerabilities in Advanced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_11\_151 (01 July, 2011)
5. Modeling Optimal Fiscal Consolidation Paths in a Selection of European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64 (01 July, 2011)
6.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Sovereign Default and Business Cycles, IMF Working Paper, WP\_11\_166 (01 July, 2011)
7. International Fuel Tax Assessment: An Application to Chile, IMF Working Paper, WP\_11\_168 (01 July, 2011)
8. Title: Country Insurance Using Financial Instruments, IMF Working Paper, WP\_11\_169 (01 July, 2011)
9. Is Fiscal Policy Procyclical in Developing Oil-Produc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71 (01 July, 2011)
10. Fiscal Policy Implementation in Sub-Saharan Africa, IMF Working Paper, WP\_11\_172 (01 July, 2011)
11. Democratic Accountability, Deficit Bias, and Independent Fiscal Agencies, IMF Working Paper, WP\_11\_173 (01 July, 2011)
12. Is There a Role for Funding in Explaining Recent U.S. Banks' Failures? , IMF Working

- Paper, WP\_11\_180, (01 July, 2011)
13.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An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Feasibility, IMF Working Paper, WP\_11\_185 (01 Aug, 2011)
  14. Capital Flows and Financial Stability: Monetary Policy and Macprudential Responses, IMF Working Paper, WP\_11\_189 (01 Aug, 2011)
  15. Economic Polici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_11\_192 (01 Aug, 2011)
  16. External Adjustment and the Glob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197 (01 Aug, 2011)
  17. Financial Linkages across Korean Banks, IMF Working Paper, WP\_11\_201 (01 Aug, 2011)
  18. The Taxation and Regulation of Banks, IMF Working Paper, WP\_11\_206 (01 Aug, 2011)
  19. Public Debt in Advanced Economies and its Spillover Effects on Long-term Yields, IMF Working Paper, WP\_11\_210 (01 Aug, 2011)
  20. Do Fiscal Spillovers Matter?, IMF Working Paper, WP\_11\_121 (01 Sep, 2011)
  21. What Fuels the Boom Drives the Bust: Regulation and the Mortgage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215 (01 Sep, 2011)
  22. Efficiency-Adjusted Public Capital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WP\_11\_217 (01 Sep, 2011)
  23. Growth Spillover Dynamics from Crisis to Recovery, IMF Working Paper, WP\_11\_218 (01 Sep, 2011)
  24. Systemic Risks in Global Banking: What Available Data can tell us and What More Data are Needed?, IMF Working Paper, WP\_11\_222 (01 Sep, 2011)
  25. Incorporating Financial Stability in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s, IMF Working Paper, WP\_11\_224 (01 Sep, 2011)
  26. Decentralizing Spending More than Revenue: Does It Hurt Fiscal Performance? ,IMF Working Paper, WP\_11\_226 (01 Sep, 2011)

27. Did the Euro Crisis Affect Non-financial Firm Stock Prices through a Financial or Trade Channel?, IMF Working Paper, WP\_11\_227 (01 Sep, 2011)
28. How Long Do Housing Cycles Last? A Duration Analysis for 19 OECD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231 (01 Sep, 2011)
29. Macroprudential Policy: What Instruments and How to Use Them?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IMF Working Paper, WP\_11\_238 (01 Sep, 2011)
30. Global Rebalancing: Implications for Low-Income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239 (01 Sep, 2011)
31. Rapid Credit Growth: Boon or Boom-Bust?, IMF Working Paper, WP\_11\_241 (01 Sep, 2011)
32. Risk Sharing and Financial Contagion in Asia: An Asset Price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P\_11\_242, (01 Sep, 2011)
33. Financial Integration and Rebalancing in Asia., IMF Working Paper, WP\_11\_243, (01 Sep, 2011)
34. Monetary Policy, Bank Leverage, and Financial Stability, IMF Working Paper, WP\_11\_244 (01 Sep, 2011)
35. Improving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s in Central America, IMF Working Paper, WP\_11\_245 (01 Sep, 2011)
36. The Economic Crisis: Did Financial Supervision Matter?, IMF Working Paper, WP\_11\_261 (01 Nov1, 2011)
37. Bank of Japan's Monetary Easing Measures: Are They Powerful and Comprehensive?, IMF Working Paper, WP\_11\_264 (01 Nov1, 2011)
38. The Problem that Wasn't: Coordination Failures in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IMF Working Paper, WP\_11\_265 (01 Nov1, 2011)
39. The Eurozone Crisis: How Banks and Sovereigns Came to be Joined at the Hip, IMF Working Paper, WP\_11\_269 (01 Nov1, 2011)
40. Credit Growth and Bank Soundness: Fast and Furious?, IMF Working Paper, WP\_11\_278 (Dec 01, 2011), (01 Dec, 2011)

41. How Costly Are Debt Crises?, IMF Working Paper, WP\_11\_280 (01 Dec, 2011)
42. Effectiveness of Capital Controls in Selected Emerging Markets in the 2000s, IMF Working Paper, WP\_11\_281 (01 Dec, 2011)
43. Market Discipline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Banks and Pension Funds, IMF Working Paper, WP\_11\_282 (01 Dec, 2011)
44. Assessing the Risks to the Japanese Government Bond (JGB) Market, IMF Working Paper, WP\_11\_292 (01 Dec, 2011)
45. Employment Protection and Business Cycles in Emerg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_11\_293 (01 Dec, 2011)
46. Bank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A General Equilibrium Exposition, IMF Working Paper, WP\_11\_295 (01 Dec, 2011)
47.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MF Working Paper, WP\_11\_297 (01 Dec, 2011)

#### Country Report

1. Euro Area Policies: 2011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Member Countries, Country Report No. 11/184 (18 July, 2011)
2. France: Selected Issues Paper, Country Report No. 11/212 (27 July, 2011)
3. Spain: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1/216 (29 Jul, 2011)
4.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s Paper, Country Report No. 11/221 (01 Aug, 2011)
5. United Kingdom: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Country Report No. 11/222 (01 Aug, 2011)
6. United Kingdom: Stress Testing the Banking Sector Technical Note, Country Report No. 11/227 (03 Aug, 2011)
7. United Kingdom: Crisis Management and Bank Resolution Technical Note, Country Report No. 11/228 (03 Aug, 2011)
8.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1/247 (04 Aug, 2011)

9. Germany: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Detailed Assessment of Observance on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Country Report No. 11/273 (01 Sep, 2011)
10. Portugal: First Review Under the Extended Arrangement, Country Report No. 11/279 (13 Sep, 2011)
11. Australia; Staff Report for the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 11/300 (06 Oct, 2011)

OECD

1. ESTONIA - Public sector spending efficiency: healthcare and local government,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81 (Jul 19, 2011)
2. Can India Achieve Double-digit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83 (Jul 21, 2011)
3. How Institutions Shape the Distributive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84 (Jul 21, 2011)
4. Labour Market Reforms in Japan to Improve Growth and Equ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89 (Sep 6, 2011)
5. Japan's New Growth Strategy to Create Demand and Job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90 (Sep 6, 2011)
6. Has Deregulation Increase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92 (Sep 19, 2011)
7. Green Growth and Climate Change Policies in New Zea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93 (Sep 29, 2011)
8. Reforming Austria's Highly Regarded but Costly Health System,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96 (Sep 29, 2011)
9. Refining Macroeconomic Policies to Sustain Growth in Brazil,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99 (Oct 21, 2011)
10. Drivers of Systemic Banking Cri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02 (Oct

26,2011)

11. The Demand for Safe Assets in Emerging Economies and Global Imbalanc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03 (Oct 26, 2011)
12. Fiscal Reform for a Stronger Fairer and Cleaner Mexican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04 (Nov 14, 2011)
13. Overcoming the Banking Crisis in Ire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07 (Nov 22, 2011)
14. Getting Back on Track: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Ire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09 (Dec 02, 2011)
15. Structural Reforms to Reduce Unemployment and Restore Competitiveness in Ire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10 (Dec 02, 2011)
16. Fiscal Prospects and Reforms in Indi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11 (Dec 02, 2011)
17.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nd Capital Regulation Challeng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916 (Dec 12, 2011)

World Bank

1. Financial-stability challenges in European emerging-market countrie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773 (Aug 2011)
2. Debt overhang in emerging Europe, Policy Research Paper,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784 (Aug 2011)
3. Banking flows and financial crisis - financial interconnectedness and basel III effect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769 (Aug 2011)
4. The role of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boom and adjustment phase of the credit cycle in Estonia,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35 (Oct 2011)
5. Has the global banking system become more fragile over time?,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49 (Oct 2011)
6. Financial development : structure and dynamic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54

- (Oct 2011)
7. World Development Report (WDR) 2013 : jobs - outline, Board Report, no. 65804 (25 Oct, 2011)
  8. Job growth and finance : are some financial institutions better suited to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an other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80 (Nov 2011)
  9. International trade and inclusive growth : a primer for busy policy analyst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86 (Nov 2011)
  10. Impact evaluation of trade interventions : paving the way,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77 (Nov 2011)
  11. From growth to green growth - a framework,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72 (Nov 2011)
  12. Explaining the demand for sovereignty,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88 (Nov 2011)
  13. What explains prevalence of informal employment in European countries : the role of labor institutions, governance, immigrants, and growth,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17 (Dec 2011)
  14. The relative volatility of commodity prices : a reappraisal,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03 (Dec 2011)
  15. Spending on Public Infrastructure : A Practitioner's Guide,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05 (Dec 2011)
  16. Risk absorption by the state: when is it good public policy?,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93 (Dec 2011)
  17. Quality of tax administration : how relevant is country size?,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895 (Dec 2011)
  18. Migration, remittances and forests : disentangling the impact of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on forest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07 (Dec 2011)
  19. Labor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shadow economies in Europe,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13 (Dec 2011)

20. How important i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investment ? The case of the Republic of Congo,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01 (Dec 2011)
21. Does financial structure matter for poverty?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15 (Dec 2011)
22. Coordinating tax reforms in the poorest countries : can lost tariffs be recouped ?, Policy Research Paper ; no. WPS 5919 (Dec 2011)

ADB

1. When Fast Growing Economies Slow Down: Internation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Jun 2011)
2. Effectiveness of Capital Restrictions: Do Regional and Income Differences Matter?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Jun 2011)
3. Asia Economic Monitor - Jul 2011, Asia Economic Monitor (Jul 2011)
4. Foreign Direct Investment, Technology Diffusion, and Host Country Productivity Growth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Aug 2011)
5. Population Aging and Aggregate Consumption in Developing Asia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Oct 2011)
6. Why Does Population Aging Matter So Much for Asia? Population Aging,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Security in Asia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Oct 2011)

ECB

1. How flexible are real wages in EU countries? A panel investigation, ECB WP No. 1360 (Jul 2011)
2. Identify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shocks with and without expected reversal: an approach based on U.S. real-time data, ECB WP No. 1361, (Jul 2011)
3. Capital flows, push versus pull factor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CB WP No. 1364 (Jul 2011)

4. Stock market firm-level information and real economic activity, ECB WP No. 1366 (Aug 2011)
5. Output growth and fluctuation: the role of financial openness, ECB WP No. 1368 (Aug 2011)
6. Technology, utilization and inflation: what drives th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ECB WP No. 1369 (Aug 2011)
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ying to understand the global trade downturn and recovery, ECB WP No. 1370 (Aug 2011)
8. What is driving oil futures prices? Fundamentals versus speculation, ECB WP No. 1371 (Aug 2011)
9. Asset prices, collateral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n a DSGE model, ECB WP No. 1373 (Aug 2011) (Aug 2011)
10. The 2007 subprime market crisis through the lens of European Central Bank auctions for short-term funds, ECB WP No. 1374 (Aug 2011)
11. The price of liquidity: the effects of market conditions and bank characteristics, ECB WP No. 1376 (Sep 2011)
12. Ranking, risk-taking and effort: an analysis of the ECB's foreign reserves management, ECB WP No. 1377 (Sep 2011)
13. Forecasting economic growth in the euro area during the Great Moderation and the Great Recession, ECB WP No. 1379 (Sep 2011)
14. Labour tax progressivity and output volatility: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CB WP No. 1380 (Sep 2011)
15. Global crises and equity market contagion, ECB WP No. 1381 (Sep 2011)
16. Mapping the state of financial stability, ECB WP No. 1382 (Sep 2011)
17. Using cash to monitor liquidity - implications for payments, currency demand and withdrawal behavior, ECB WP No. 1385 (Oct 2011)
18. Bank risk during the financial crisis: do business models matter?, ECB WP No. 1394 (Oct 2011)

19. Macroeconomic effect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n the Euro Area, ECB WP No. 1397 (Nov 2011)
20. Monetary policy and the flow of funds in the Euro Area, ECB WP No. 1402 (Dec 2011)
21. The public sector pay gap in a selection of Euro area countries, ECB WP No. 1406 (Dec 2011)
22. Macroeconomic vulnerability and disagreement in expectations, ECB WP No. 1407 (Dec 2011)
23. Real-time data and fiscal analysis: a survey of the literature, ECB WP No. 1408 (Dec 2011)

##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연구 제4권 제3호 (2011. 08)

1. 좋은 학교 찾기: 수능점수 분석을 통한 학교평가/김진영
2. 국회 예산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행정부, 여당,야당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상원
3. 자치구 재정의 장기 수렴성 분석/홍서빈 · 주만수
4. 장래 소득세원 분포 변화를 고려한 장기 소득세수 추계/김현숙 · 성명재
5. Fair Revenue Shar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박선영
6.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가 주택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양도세 증과 및 종부세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김경표

재정학연구 제4권 제4호 (2011. 11)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최적제어와 기여-수급 연계성:A Technical Note/최기홍 · 신성휘
2. 쉬기와 숙아내기의 성적 효과: 1999~2009년 수능시험 점수 분석/김진영

3.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지배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전주성
4.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송원호
5. 이천지출의 사회후생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최성은
6.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김상헌
7. 재정제도 및 정책 논의 관련 개념, 용어의 오류에 대한 고찰/최광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재정정책논집 제 13권 2호 (2011)

1. 대외 환경하에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책조합의 적절성 검토/홍인기
2.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효과의 공간적 분포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황석준
3. 공개정보를 이용한 기업투명성의 측정과 활용 -사업현황의 투명성과 대리인 비용/강동관
4.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가?/홍필기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김의섭
6. 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황경민 외

재정정책논집 제 13권 2호 (2011)

1.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류가격 및 유류소비의 변동성/이재민 · 김희호
2. 1981~2009 기간의 시계열자료에 의한 소주수요와 가격의 조세민감도 분석/이재형 · 강철규
3. 패널 시계열분석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분석/정기현 · 이충열
4.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6대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문병근 · 성상기
5. 연금자산과 저축 -기대은퇴연령을 고려한 분석/전승훈 · 임병인
6. 한국에서의 기관투자자 주식 소유에 대한 실증연구/이상훈

2011 복지재정DB 학술대회 공동주관 (2011.10.27 )

1.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연구/고경환

2.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김진욱
3. 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김성수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 분석/조임곤
5.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분석/김태일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6권 제2호(2011년 09월)

1.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타당성 및 전환방안 연구/이영희 · 홍은주
2.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충북을 중심으로/조택희
3.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남황우
4.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중심으로/이재원
5.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원구환
6. 지방공기업 부채 절감방안에 관한 소고/정창훈 · 정성호
7.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이원희 · 주기완

2011년 통계 학술 대회 (2011년 12월)

1.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체수입반응/윤석완
2. 지방재정의 의존성과 의존재원의 추이 분석/주만수
3.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유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배상석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부채간 관계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정성호 · 정창훈
5.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김의섭 외
6. 동태적 패널분석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 분석/오병기
7.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31개 지방을 중심으로/이명환 외
8. 지방정부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원시 자체평가제도 개선사례를 중심으로/임상규 외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9권 2호 (2011년 06월)

1. 담보 차입 제약 금융가속기가 부가된 명목가격 경직성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분석/이준희
2.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박창균 · 이철인
3. 선도추급과정을 이용한 새로운 예측기법: 장기전력수요예측에의 응용/박준용 외
4.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에 대한 연구/임진
5. 패널자료를 이용한 한국 지역소득 확률수렴성과 수렴클럽 분석/김지욱
6. 구조적 VAR 모형 및 서울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김배근

세미나 :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2011년 12월)

1. 복지지출,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영
2. 복지지출규모와 국가채무규모의 관계/김태일
3. 재정준칙별 재정건전화 효과분석/류덕현
4. Can We Detect the Presence of Non-Keynesian Effect Empirically/송호신

####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박형수 (2011.07)
2.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원중학 (2011.07)
3.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김진수 (2011.08)
4. 글로벌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노영훈 (2011.08)
5.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허경선 (2011.09)
6. 조세 · 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성명재 (2011.09)
7.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송헌재 (2011.10.)
8. 서비스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손원익 (2011.10.)

9.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박명호 (2011.10)
10.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정재호 (2011.11)
11.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홍범교 (2011.11)

#### 세미나 자료

1.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한상국 (2011.08)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11.08)
3. 국제행정의 역할과 과제/한국조세연구원 (2011.08)
4.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11.11)

#### 기타연구자료

1. 책임성과 투명성: 정부소유권을 위한 지침/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06)
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1호/ 세법연구센터 (2011.06)
3. 제6차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07)
4.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3호 (제7호) (2011.08)
5.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성관관리센터 (2011.08) (부처별 총 36권)
6. KIPF 공공기관동향 제 4호/공공기관연구센터 (2011.09)
7.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미국,캐나다,영국을 중심으로/박노욱 (2011.11)
8. Understanding Korean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11)
9. 한국과 중국의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 비교 연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11)
10.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지영 (2011. 11)
11. 공공기관 청년인턴 · 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한국조세연구원 (2011.12)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예산분석 보고서

1.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보고서 (2011.07.28)
2.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1.07.28)
3.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11.08.08)
4.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2011.10.26)
5.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 (2011.10.26)
6. [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 (2011.10.26)
7. [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지식경제·보건복지】 (2011.10.26)
8.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환경노동·국토해양·여성가족】 (2011.10.26)
9. [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2011.11.01)
10. [예산안분석시리즈 7]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 (2011.11.01)
11. [예산안분석시리즈 8]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2011.11.01)
12. [예산안분석시리즈 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 (2011.11.01)
13. [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1.11.01)
14. [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1.11.01)

#### 경제분석 보고서

1.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5호) (2011.06.10)
2.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0호) (2011.06.27)
3.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6호) (2011.07.19)
4. [경제현안분석 제63호]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8.05)
5. [경제현안분석 제64호]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2011.08.08)

6.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7호) (2011.08.23)
7.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1호) (2011.08.29)
8.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2011.09.05)
9. [경제현안분석 제65호]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2011.09.27)
10.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10.19)
11.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8호) (2011.10.26)
12.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9호) (2011.10.26)
13.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10.28)
14.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10.31)
15.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2011.10.31)
16.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10.31)
17.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1.10.31)
18.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 (2011.11.11)
19.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2호) (2011.11.17)
20. [경제현안분석 제66호]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2011.11.17)
21. [경제현안분석 제67호]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1.11.18)
22.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20호) (2011.11.29)
23. [경제현안분석 제68호]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베이시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2011.12.13)
24. [경제현안분석 제69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2011.12.16)

#### 기타보고서

1. 재정법령집 2011 (2011.08.30)
2.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결과보고서 (2011.9.21)

3.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2011.11.11)
4. [용역보고서] 가계지출 요인의 구조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분석 (2011.11.18)

□ KDI (<http://www.kdi.re.kr>)

#### 보고서

1.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6월 (2011.06.07)
2. KDI 경제동향 2011. 6 (2011.06.09)
3.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2011.6.22)
4. Economic Bulletin, June 2011 (2011.06.23)
5.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고영선 외 (2011.06.24)
6. click 경제교육 2011. Jul (2011.06.30)
7. 나라경제 2011. 7 (2011.06.30)
8. KDI 경제동향 2011. 7 (2011.07.07)
9.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7월 (2011.07.07)
10. Economic Bulletin, Jul 2011 (2011.07.20)
11. click 경제교육 2011. Aug (2011.07.28)
12. 나라경제 2011. 8 (2011.07.29)
13. Reforms for Korea's Sustained Growth/ 한진희 외 (2011.08.01)
14.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8월 (2011.08.07)
15. KDI 경제동향 2011. 8 (2011.08.08)
16.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고영선 (2011.08.17)
17. Economic Bulletin, Aug 2011 (2011.08.24)
18.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윤희숙 (2011.08.24)
19. click 경제교육 2011. September (2011.08.28)
20. 나라경제 2011. 9 (2011.08.29)
21. KDI 경제동향 2011. 9 (2011.09.07)
22.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황수경 (2011.09.07)

23. Economic Bulletin, September 2011 (2011.09.23)
24. 나라경제 2011. 10 (2011.09.2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 (2011.09.30)
26. click 경제교육 2011. October (2011.09.30)
27.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윤희숙 (2011.10.07)
28. KDI 경제동향 2011. 10 (2011.10.10)
29. Economic Bulletin, October 2011 (2011.10.24)
30.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 (2011.10.28)
31. 나라경제 2011. 11 (2011.10.28)
32. 경제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조동철 외 (2011.10.30)
33. click 경제교육 2011. November (2011.10.30)
34. KDI 경제동향 2011. 11 (2011.11.07)

####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KDI-제도학회 월례세미나 공지] 한국재정,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최광 (2011.07.20)
2. [KDI-제도학회 월례 세미나 복지]에 관하여/ 김성배 외 (2011.09.08)
3.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 (2011.10.06)
4.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2011.10.25)
5. [KDI-제도학회 월례 세미나 복지 정책]에 관하여/ 고영선 외 (2011.10.27)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 (2011.12.15)
7.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 협력-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 (2011.12.19)

####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BOK경제 브리프: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2011.09.01)
2. 2011년 상반기 중 국제수지 동향 (2011.10.06)
3. 저출산 · 인구고령화의 원인 :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011.10.18)
4. 국제경제정보 제2011-47호: 중국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 평가 및 전망 (2011.10.19)

5. 국제경제정보 제2011-48호: 국제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의 최근 동향과 영향(2011.10.20)
6. 국제경제정보 제2011-50호: 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과 향후 전망 (2011.10.26)
7. 국제경제정보 제2011-51호: 최근 유럽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평가 (2011.11.02)
8. 국제경제정보 제2011-52호: 국제유가의 고수준 지속 가능성 평가 (2011.11.04)
9. 국제경제정보 제2011-53호: 미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 평가 (2011.11.17)
10. 국제경제정보 제2011-56호: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에 대한 ECB의 정책대응 (2011.11.24)
11. 조사통계월호 2011.11월 논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 관계 (2011.11.30)
12. 국제경제정보 제2011-60호: 미국 경기회복 제약요인으로서 주택시장 부진 평가 (2011.12.08)
13. 국제경제정보 제2011-61호: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2011.12.15)
14. 국제경제정보 제2011-19호: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배경과 전망 (2011.05.13)
15. 국제경제정보 제2011-21호: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2011.05.19)
16. 국제경제정보 제2011-25호: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재부상 배경과 전망 (2011.06.02)
17. 국제경제정보 제2011-24호: 중국 불태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011.06.02)
18.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적 운용에 관한 연구 (2011.06.02)
19.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대응 사례와 평가 (2011.06.02)
20. 국제경제정보 제2011-27호: 최근 글로벌 불균형 축소 논의의 주요 내용 (2011.06.23)
21. 국제경제정보 제2011-28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2011.06.23)
22. 국제경제정보 제2011-29호: 브라질의 환율안정 정책의 유효성 (2011.06.30)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보고서

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신창목 외, SERI Economic Outlook (2011.09.21)
2.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이찬영, SERI 경제포커스 제352호 (2011.10.04)

3.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김정근, SERI 경제포커스 제 357호 (2011.11.15)
4.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이찬영 외, SERI 연구보고서 (2011.11.24)
5.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신창목 외, SERI Economic Outlook (2011.12.01)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동향과진단: 최근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이지선 (2011.07.27)
2. LGERI 리포트: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 진단, 경쟁 노출도 높고 부가가치 낮은 편/이근태 (2011.08.03)
3. 동향과진단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남아있는 불안요인/최문박(2011.08.10)
4. LGERI 리포트: 2000년 이후 글로벌 산업 판도 변화/이한득 (2011.08.10)
5. LGERI 리포트: 변동성으로 본 국내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더 높여야/ 배민근 · 김건우/ (2011.10.05)
6. 동향과진단: 한 · EU FTA 3개월 평가와 한 · 미 FTA/김형주 (2011.10.12)
7. 동향과진단: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락세 진정/이지평 (2011.10.19)
8. LGERI 리포트: 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유승경 · 홍석빈 (2011.10.19)
9. LGERI 리포트: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윤상하 · 강성구 (2011.10.26)
10. LGERI 리포트: 미국 · 유럽, 일본경제 전철 밟을까/이지평 · 이혜림 (2011.11.02)
11. LGERI 리포트: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창선 · 김건우 (2011.11.09)
12. 동향과 진단: 고용 늘었지만 자영업 · 고령노동이 대부분/이지선 (2011.11.16)
13. LGERI 리포트: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장수의 축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이한득 · 이지홍/ (2011.11.16)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황상현 (2011.05.31)

2.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조경엽 외 (2011.07.20)
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7월호 [Vol.21-3]/한국경제연구원 (2011.07.28)
4.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와 재정정책/송원근 외 (2011.11.02)
5.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안순권 (2011.11.15)
6.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소득, 소비,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설윤 (2011.11.18)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곽은경 (2011.8.25)
2. 세계 시장으로 통(通)하는 트렌드/안지윤 (2011.9.18)
3.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박정수 (2011.10.06)
4.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이영환 (2011.11.03)
5.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정도범(2011.12.01)

2012정책제안

1.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바꾸자/현진권 (2011.8.11)
2. 노용산업(勞融産業)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자/박기성 (2011.8.18)
3. 평준화 정책 폐지해야/김정래 (2011.8.24)
4. FTA 경제성 강화해야/정인교 (2011.10.06)
5. 작은 정부를 위한 의회와 관료제의 역할/황수연 (2011.10.20)
6. 지방 행정, 기초 단체 존치시켜야/황수연 (2011.10.27)
7.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개선방안/안재욱 (2011.11.17)
8.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 중단해야/신중섭 (2011.11.24)
9.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조주현 (2011.12.12)
10.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 재원조달을 막자/김이석 (2011.11.15)
11. 선진강대국(GK) 건설을 위한 통일정책/배정호 (2011.12.19)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719회] 한국 이대로 하면 선진국 어렵다/권태신 (2011.9.28)
2. [724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자산운용 전략/조재민 (2011.11.02)
3. [729회] 2012년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현오석 (2011.12.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피해복구 현황과 시사점/이형근 외 (2011.07.25)
2.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와 향후 전망/강유덕 외 (2011.08.08)
3. 2011년 하반기 중국경제와 물가 분석/북경사무소 (2011.08.10)
4. 세계경제 위험요인 평가와 전망/이동은 외(2011.08.12)
5. 미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허인 외(2011.08.17)
6. 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강유덕 외 (2011.9.21)
7.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강유덕 외 (2011.9.30)
8.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요인 비교 및 시사점/허인 외 (2011.11.10)
9.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정형곤 외 (2011.11.18)
10. 한·일, 한·중 통화 스왑 확대와 그 시사점/윤덕룡 외 (2011.12.01)
11.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김군태 외 (2011.12.08)
12.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박복영 (2011.11.24)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보고서

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언/이재연 (2011.07)
2. 금융 그룹의 통합 리스크 관리/이명환(2011.07)
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임형석 (2011.07)
4.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김정환·박성욱 (2011.07)
5.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김정환·장민·이규복 (2011.08)
6.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신용상 (2011.08)
7.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구본승 외(2011.08)

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박성욱·장민(2011.09)
9.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장동구 (2011.09)
10.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남재현 (2011.09)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이시연 외(2011.09)
12.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서정호 외 (2011.10)
13.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KIP (2011.10)
14.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과 대응방안/김정환 외 (2011.10)
15.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의 비교/구본승 외(2011. 12)
16.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함준호 (2011. 12)

#### 세미나

1.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과 방안 (2011.09.17)
2.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법과 외화유동성 (2011.9.28)
3. 경제 및 재정전망과 정책방향 (2011.10.04)
4. Euro Crisis: Failure of Adjustment Mechanisms as Optimum Currency Area (2011.10.5)
5.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체계 연구 (2011.10.06)
6.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향후 금융 정책방향 (2011.10.21)
7. EU의 재정위기 요인과 시사점 (2011.10.24)
8. 2012년 경제전망 (2011.10.26)
9.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2011.10.26)
10. 유럽 재정위기의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 진단 (2011.11.01)
11. 글로벌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 (2011.11.01)
12.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 현상 및 해결전망 (2011.11.01)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자본 흐름의 특징과 전망 (2011.11.10)
14. 유로화 위기와 우리의 정책과제 (2011.11.10)
15. 최근 금융경제 여건과 감독정책 방향 (2011.11.29)
16.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1.12.01)
17.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 (2011.12.02\_

18. Refor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2011.12.09)
19.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s on Asia (2011.12.09)
20. Global Economic Crisis & Debt Sustainability in the US, Europe and Japan  
(2011.12.09)
21.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행과정과 감독상 이슈 (2011.12.13)



#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

II. 미 국

---

III. 프랑스

---

IV. 그리스

---

V. 이탈리아

---

VI. 아일랜드

---

VII. 포르투갈

---



## I 주요국 동향\*

- 미국의 일자리법안 통과 불발 및 재정적자 감축협상 실패,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타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지속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법안(급여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등)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3조 2,22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제안
    -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에서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에 실패하여 향후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연방지출 프로그램 예산이 2013년부터 자동삭감
  -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국의 재정위험도 증가하여 재정적자 감축안 제시
    - 2012년까지 12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2013년에는 SGP 기준인 재정적자 3% 기준 달성, 2016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 의료보험 지출 절감 이외에는 세수 확대(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소비세율 인상, 세제혜택 축소)에 중점
  -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 26개 회원국(영국 제외)은 ‘신 재정협약’에 합의하여 재정통합 강화
    - 당초 2013년에 출범하기로 했던 유럽안정화기구(ESM)를 내년 7월 앞당겨 개시하여 1년 동안 유럽재정안정기금(ESFS)과 동시 운영
    - 회원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 구조적 적자는 GDP 대비 0.5% 이하)을 법제화하고 규율 위반시 자동조정장치 발동 메커니즘 도입
    - 유로존 17개 회원국은 재정적자 3% 초과시 자동 제재조치 시행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 유럽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PIIGS 국가들은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표명
  - 그리스의 2011-2015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283억유로(GDP 대비 12%) 재정 적자를 감축하여 2014년에는 3%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
    - 세수 확대(직접세, 간접세, 사회보장기금, 과세기반 확대, 조세지출 축소), 구조개혁(공공부문 임금 합리화, 민영화, 의료 및 제약 지출 규제, 사회보장 비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이 담긴 중기재정계획 발표
    - 2012년까지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2014년까지 200억유로 규모의 조세지출 및 복지혜택 감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
  - 아일랜드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2~2015년 124억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함
    - 수입 확충을 위해 고용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적은 간접세율(소비세, VAT 등) 인상, 지출 축소를 위해 부처별 지출상한 설정, 공공서비스 개혁 제안
    - 또한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구조 개혁(재정책임법 제정 등)
  - 포르투갈은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2013년까지 재정적자 3%를 달성해야 함
    - 세수 확대를 위해 VAT 세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화 등을 제시
    - 지출 삭감을 위해 공무원 임금동결,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 정부운영비용 축소,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축소 등을 제시

## II 미국

〈표 2-II-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일자	주요내용
8.2	•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
8.5	• S&P 미국 국가신용등급 AAA에서 AA+로 하향조정
9.8	•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제안
9.19	• 3조 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9.20~21	• 연방준비제도(Fed)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실시 결정
10.14	• FY2011 결산 발표
10.24	• 주택 보유를 위한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HARP) 확대 적용 방안 제시
11.21	• 수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
11.28	• Fitch,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11.30	• 미국 Fed, 유로존 ECB, 캐나다 BOC, 영국 BOE, 일본 BOJ, 스위스 SNB 등 6개 중앙은행 공동조치

### 1. FY2011 연방정부 결산 발표

- 2011.10월 재무부와 OMB가 공동발표한 연방정부의 FY2011 결산은 연초 FY2012 예산안 발표시 예측했던 것보다 대폭 감소
  - 다만 2008,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FY2011 재정적자는 1조 2,990억달러(GDP 대비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
    - \* FY2011 재정적자는 FY2010 GDP 대비 9.0%보다 0.3%p 하락
    - \*\* 명목기준으로 보면 FY2011 재정적자는 40억달러(0.3%) 증가하여 전 회계연도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
  - FY2011 재정적자는 올 2월 FY2012 예산안 전망보다 21%(3,470억달러) 낮은 수준이며, 9월 FY2012예산안 업데이트(Mid-Session Review)의 예측보다는 1.3%(170억달러) 축소

〈표 2-Ⅱ-2〉 FY2011 연방정부 결산

(단위: 십억달러)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적자
FY 2010	2,162	3,456	-1,294
(GDP 대비 %)	15.1	24.1	9.0
FY 2011 전망:			
FY2012 예산안	2,174	3,819	-1,645
FY2012 MSR	2,314	3,630	-1,316
FY 2011 결산('11.10월)	2,302	3,601	-1,299
(GDP 대비 %)	15.4	24.1	8.7

## □ FY2011 연방정부 결산 주요내용

- (재정수입) FY2011의 재정수입은 총 2조 3,02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보다 6.5% 증가
  - 2010.12월 감세연장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소비세, 관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세, 법인세, 유산세 및 증여세 수입은 감소
  - GDP 대비 총재정수입은 전 회계연도 15.1%와 유사한 수준인 15.4% 기록
- (재정지출) FY2011 재정지출은 FY2010보다 1,450억달러(4.2%) 늘어난 3조 6,010억달러 규모
  - GDP 대비 총재정지출은 24.1%로 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
  - 재량지출은 4월까지 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편성된 준예산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FY2010 수준과 유사
  - 다만,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메디케어, 사회보장부문 지출이 증가하여 FY2010에 비해 증가한 지출 1,450억달러 중 동 부문이 1,100억달러 차지
  - 실업수당 지출은 FY2010보다 300억달러 감소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FY2011 동안 1조 1,042억달러 증가하여 총 10조 1,270억달러(GDP의 67.7%) 기록

## 2.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제안 및 진행 상황

- 9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12월 현재 야당의 반대로 통과 난항
  -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원 규모 4,470억 달러\*의 일자리 법안을 제안
    - \* <참고 1> 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소요재원 참조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급여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의 일부 내용으로 제안한 것임
  - 12월 17일 상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소득세(payroll tax) 감면 혜택을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완화와 일자리창출법’ 개정안을 가결
    - \* 오바마 행정부는 급여소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p 낮춘 바 있으며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동 조치의 연장 기간을 기존에 요청하였던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데 합의
  -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상원에서 급여소득세 감면안이 통과되었으나 12월 18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정치적 공방 지속중

### <참고 1> 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소요재원(2011.9월)

(단위: 십억달러)

일자리 창출 방식	규모
중소기업의 고용 및 진흥을 위한 세금감면	70
고용주 부담 급여세 절반 수준으로 인하/신규채용 및 급여인상에 대한 급여세 감세	65
기업투자 100% 상각 허용 연장	5
미래를 위한 투자 및 SOC 등	140
교사 및 소방대원, 경찰 재직 보장	35
학교시설 근대화	30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50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설립	10
빈집 및 차압된 주택의 복원 및 재정비	15
초고속 무선 인터넷 구축망 확대	0
퇴역군인 고용	n.a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62
실험보험 개혁 및 확대	49
장기 실업자 고용 기업 세제혜택	8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5
2012년 동안 피고용자 급여세 부담률 절반 수준으로 인하	175
총 합계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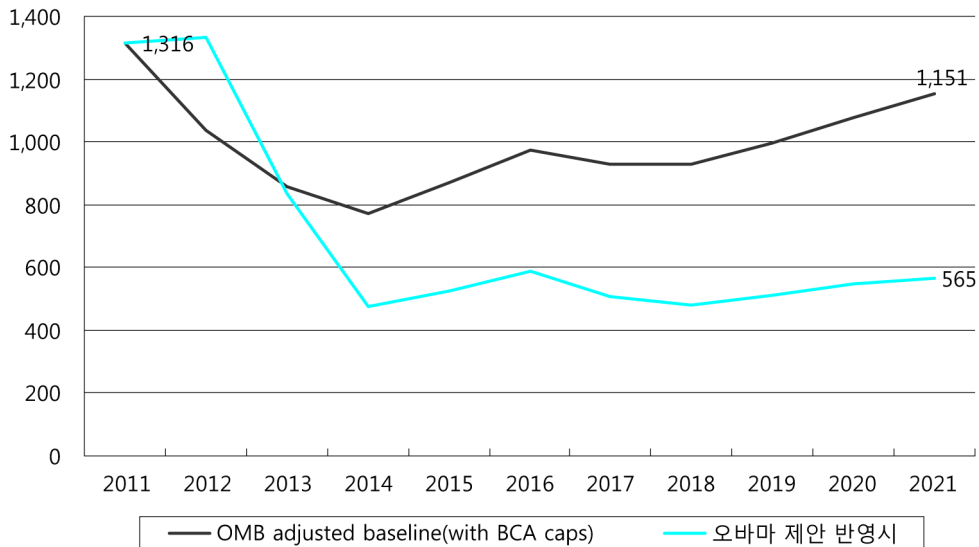
### 3. 오바마 대통령 3조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방안 발표

□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FY2021까지 향후 10년간 3조 2,22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수퍼위원회)\*에 송부

\* <참고 2>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 참고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FY2021년 재정적자는 5,650억달러 (GDP의 2.3%)로 이는 9월 현재 FY2011 예상 재정적자 1조 3,160억달러(GDP의 8.8%)에서 절반 이상 축소된 수준

[그림 2-Ⅱ-1] 오바마 대통령 제안의 재정적자 절감 효과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동 제안은 크게 조세개혁, 해외전비 감소, 법정지출 개혁,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이자지출 절감으로 구성

①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확보 약 1조 5천억달러

-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 만료(8,660억달러)
-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 세금 혜택 제한(4,100억달러)
- 세제상의 허점 차단을 통한 세수 확대 등(약 3,000억달러)

- ②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삭감으로 1조 1천억달러 절약
- ③ 메디케어 등 법정지출에서 5,700억달러 감축
  - 초과지급금 감소 등으로 메디케어 지출 절감(2,480억달러)
  - 기타 보건·의료 및 메디케이드 절감(720억달러)
  - 농업보조금 삭감,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등(2,500억달러)
- ④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이자지출 절감 4,300억달러

**<참고 2>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에 따라 향후 10년 간 1.2조~1.5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 특별위원회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
-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1단계로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 지출을 삭감하고 2단계로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 23일까지 1.2조~1.5조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의회는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올해 12월 23일까지 표결
  -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지출 프로그램에 대해 1.2조달러의 일률삭감 조치 시행
- 특별위원회 재정적자 합의 여부와 관련한 부채한도 조정
  - 1.2조달러 이상 적자감축 성공시 적자 감축액과 동일한 규모로 상향조정(단, 1.5조달러까지 상향조정 가능)
  - 1.2조달러 미달시 정부부채한도 1.2조달러 증액, 2013년 1월부터 1.2조달러 일률삭감 조치 시행

□ 11월 21일\*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수퍼위원회)는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를 발표

- \* 특별위원회가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한은 11월 23일로 특위가 제안하는 방안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해 21일 밤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CBO에 제출하여야 함
-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연방지출 프로그램 예산이 2013년 1월부터 자동 삭감 예정
  - 재량지출의 경우 국방지출과 국내지출이 동일한 규모로 삭감
  -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고용보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은 일률삭감에서 제외되며 메디케어의 경우 삭감 한도 설정
- 오바마 대통령은 일률삭감을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

-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에 따른 영향
  - 특위의 합의 실패로 국방부 예산 대폭 삭감 예상
    - 예산통제법에서의 국방지출 절감분은 향후 10년간 4,200억달러로 예상되며, 이 중 3,500억달러가 예산상의 국방지출 범주이고 여기서 약 3,300억달러는 국방부의 예산 삭감
    - 여기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 따라 추가로 5,00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미군 전력 훼손 우려, 해외 주둔 미군 전력 조정 등의 방안 등이 거론
    -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방지출 추가 삭감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존재
  -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
    - 다만, Moody's와 S&P는 의회가 일률삭감 계획의 불이행을 시도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경고
  -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
    -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일자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올해 말로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소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 4. Fitch, 미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11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다만, 신용등급은 트리플 A(AAA)를 유지
  - 동 조치로 미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Moody’s, S&P, Fitch 모두 ‘부정적’ 전망
  - Fitch의 이번 조치는 상당 부분 예상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5.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의 공동조치

- 11월 30일 미 연준(Fed), 유로존 ECB, 캐나다 BOC, 영국 BOE, 일본 BOJ, 스위스 SNB 등 6개 중앙은행은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발표
  - 달러 스왑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스왑 계약 연장
    - 미 연준은 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스위스 SNB, 캐나다 BOC 등 5개 중앙은행에 대한 달러 스왑금리를 12월 5일부터 현행 1%포인트(100bp)에서 0.5%포인트(50bp)로 인하
    - 통화스왑 계약을 2013년 2월 1일까지 6개월 연장
  - 이번 조치로 ECB는 미국 달러화 유동성을 한층 저렴하게 확보 가능

## Ⅲ

## 프랑스

〈표 2-Ⅲ-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일자	주요내용
8.12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8.16	•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회원국들의 단일 경제정부 역할을 할 공동경제위원회 설립안 공식 제안 - 2013년부터 적용할 공동법인세 추진 합의 - 금융거래세 신설을 추진
8.24	• 프랑스 정부 재정긴축 계획 발표
9.28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10.9	•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
10.13	• 유로존 모든 국가 EFSF 확대안 승인
11.7	•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12.16	• 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1. 12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8월 24일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에 걸쳐 재정적자를 120억유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배경) 최근의 재정상황 악화 및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현재 AAA) 하향 조정 가능성 우려 등으로 긴축재정 계획 발표
  - (규모) 총 120억유로(173억달러) 규모의 이번 긴축방안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해 각각 10억유로와 11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2011년 남은 기간 동안 추가세입으로 10억유로, 2012년 세입확대로 100억유로, 지출축소 방안으로 1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 (적자감축 방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 및 세제혜택 축소 등 세수확대에 초점
  - 연간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3%p 인상
    - \*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는 2013년
  -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 보충 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 법인세제를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하여 프랑스 기업의 미래 법인세에 대한 손실상각 능력을 제한
- (향후 조치) 동 재정적자 축소 방안은 2011년 추경예산 및 2012년 예산안, 사회보장 예산안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될 예정

## 2. 9월 8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 의회 통과

- 8월 24일 발표된 긴축재정 계획에 따라 2011년 1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반영한 2차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
  - 이번 의회 통과된 2차 추경예산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관련 내용과 함께 지난 8월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포함
    - 동 추경예산은 당초 8월 1일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하원 심의중 8월 긴축재정 계획을 반영하여 수정
      - \* 8월 1일 하원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은 『KIPF 재정동향』 7호 참조
  - 재정적자 감축 방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한도 규정 신설,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10%를 과세소득에 가산(기존 5%에서 상향 조정)
    - (소득세)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 (기타)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호텔 숙박세 도입(숙박료의 2% 징수)

## 3.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9월 28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12회계연도(2012.1월~2012.12월) 예산안 발표
- 프랑스는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감소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 (재정지출) 2011년 수정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 2012년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 1.7%
    - (재정수입) 2011년 수정전망 대비 7% 증가한 2,888억유로
    - (재정수지) 특별계정 등을 고려한 총재정수지는 전년(2011년 수정전망) 대비 14.3% 적자 감소

〈표 2-Ⅲ-2〉 중앙정부 2012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0년 확정치	2011년 2차 추경예산	2011 수정전망	2012년 예산안
재정지출	422.6	361.4	361.9	366.0
재정수입	271.8	268.8	270.0	288.8
재정수지	-150.8	-92.6	-91.9	-77.2
예산부록 수지	0.00	0.01	0.01	0.01
특별계정	2.0	-2.9	-3.7	-4.6
총재정수지	-148.8	-95.5	-95.5	-81.8

자료: PLF 2012

- (재정전망) 긴축정책으로 재정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재정적자) 올해 GDP의 5.7%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GDP의 3% 달성을 목표로 설정
  - (국가채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SGP 기준인 GDP 대비 60%를 상회

〈표 2-Ⅲ-3〉 2012~2015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정부	-5.7	-4.5	-3.0	-2.0	-1.0
중앙정부	-4.6	-3.7	-2.6	-2.0	-1.4
중앙정부 기관(ODAC)	-0.2	-0.2	-0.2	-0.2	-0.2
지방정부	-0.1	-0.2	-0.2	-0.1	0.0
사회보장	-0.8	-0.4	-0.1	0.2	0.5
국가채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효과 제외)	84.1	85.5	85.4	84.3	82.3
국가채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	85.5	87.4	87.3	86.2	84.1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지원 효과	1.4	1.9	1.9	1.9	1.8
조세부담률	43.7	44.5	45.0	45.2	45.4
인플레이션율(%)	2.1	1.7	1.75	1.75	1.75
GDP 성장률(%)	1.75	1.75	2.0	2.0	2.0

자료: PLF 2012

#### 4. 11월 7일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긴축예산을 통해 지난해 GDP 대비 7.1%였던 재정적자를 2013년 SGP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
  - 동 방안은 향후 5년간 총 647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으로 2012년에 70억유로의 재정적자가 감축될 계획
    - 2012년 예산은 세수를 증대하고 지출은 삭감 또는 동결하여 당초 계획한 예산안에서 5억유로를 추가 절감

## SECTION 2 >>

〈표 2-Ⅲ-4〉 11월 7일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십억유로)

	2012	2013	2016	2012~2016 재정적자 감축액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구간 동결	1.7	3.4	3.4	15.3
2012년~2013년까지 연매출 2.5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34.4%→39.4%)	1.1	1.1	0.0	2.2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에서 24%로 상향조정	0.6	0.6	0.6	3.0
지방교부금 동결 및 의료보험 지출 절감	1.2	2.7	7.2	21.1
근로자의 은퇴연령 상향조정(60세→62세)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시행	0.1	0.5	1.3	4.4
세액공제 축소 등 제도개편	0.0	1.0	2.6	7.2
2012년에 대해 가게 지원금 및 주거 보조금 상승률 1%로 조정	0.4	0.5	0.5	2.5
현행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호텔, 숙박시설 등에 대해 VAT 세율을 7%로 상향조정	1.8	1.8	1.8	9.0
<b>총합: 재정적자 감축 효과</b>	<b>7.0</b>	<b>11.6</b>	<b>17.4</b>	<b>64.7</b>

자료: <http://www.gouvernement.fr/presse/les-mesures-du-plan-d-equilibre-des-finances-publiques>

〈참고 3〉 8월 24일 및 11월 7일 재정적자 감축계획의 비교

(단위: 십억유로)

	재정적자 감축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6
8월 24일	1.2	10.4	9.9	9.4	8.7	8.7	48.4
11월 7일	0.0	7.0	11.6	13.3	15.3	17.4	64.7

자료: <http://www.gouvernement.fr/presse/les-mesures-du-plan-d-equilibre-des-finances-publiques>

## 5. 11월 16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하원 제출

- 11월 16일 제출한 추경예산은 11월 7일 발표한 52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포함
  - 동 추경예산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을 보완
  -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5%로 설정하고 다음의 방안을 포함
    - 연매출 2.5억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에 한시적으로 법인세 5%p 인상
    - 7%의 VAT 경감세율을 신설하여 현행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세율 상향조정
      - 식료품, 에너지, 장애인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은 제외
    -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구간 동결
    -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에서 24%로 상향조정

## 6. 12월 8~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

- EU 27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재정협약'에 합의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장치 강화 및 재정규율 강화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적 유대 강화
  - 동 협약은 내년 3월 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종 비준을 요함
  - 신재정협약 주요내용
    -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을 내년 7월로 앞당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병행 운용
    - EU 회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
    -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균형 또는 흑자를 이루어야 하며 연간 구조적 적자가 명목 GDP의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회원국은 동 규율을 자국 헌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며, 규율

- 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자동조정 장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발동
- 회원국들은 국가채무 발행 계획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사전 보고
- 유로존 국가(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 초과시 회원국 반대가 없다면 자동 제재조치 시행

- 신재정협약 합의 후 유럽 내 불협화음을 보일 가능성
  - 유일하게 동 재정협약에 반대한 영국은 연립정부 내에서 협약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의견 불일치
    - 다만, 연정이 해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국가 중에서도 이번 협약으로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이 상당부분 EU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국의 비준이 동 협정 추진에 관건으로 부상

## 7. 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12월 16일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신용등급은 현재의 AAA를 유지)
  - 프랑스의 재정상황 악화 및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이번 신용등급 전망 강등의 사유
    - Fitch는 프랑스가 2014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존 내 다른 AAA 등급 국가에 비해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판단
  - 이번 Fitch의 조치는 그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속에 나온 조치로, 향후 Moody's, S&P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평가
  - 동 조치는 상당부분 예상된 이슈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IV 그리스

〈표 2-IV-1〉 그리스 위기 일지

일자	주요내용
'09.10	• 그리스 정부, '09년 예상 재정적자 종전 6%에서 12.7%로 수정 발표
'10.3	• 그리스 정부, '안전성장 프로그램' 확정 - '14년까지 재정적자 GDP의 3% 미만으로 축소
'10.4.11	• EU 정상회의에서 IMF의 '공동 자금지원 참여안' 합의 도출
'10.4.23	• EU 재무장관, 300억유로 규모 긴급구제금융 승인
'10.5. 2	• 그리스 정부, EU와 IMF에 구제금융 요청
'10.5. 7	• EU·IMF 그리스 지원 규모 1,100억유로로 확대하는 구제금융안 발표 - 유로존 회원국 800억유로 및 IMF 300억유로(5%이자)
'10.5.13	• 독일의회 및 EU 의회 그리스 지원안 승인
'10.5.18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전제조건인 긴축안 승인
'10.5.18	• EU·IMF 1차분, 20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0.9.14	• EU·IMF 2차분, 9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0.11.15	• EU, 그리스 '09년 재정적자 상향조정(13.6%→15.4%)
'11.1.15	• EU·IMF, 3차분, 9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4.15	• EU·IMF, 4차분, 15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5.11	• 그리스 정부, EU·IMF에 추가 지원 요청
'11.6.17	•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개각 단행
'11.6.22	• 그리스 정부, 의회 신임투표 통과
'11.6.24	• 그리스 정부, EU·ECB·IMF와 '중기재정계획' 합의 - 2015년까지 28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 조치 및 500억유로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포함
'11.6.29	• 그리스 의회, '중기 재정 계획' 승인
'11.7.15	• EU·IMF, 5차분, 12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9. 2	• 6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IMF 실사 중단 - 긴축강도 미흡, 19일 실사 재개 예정
'11.9. 7	• 독일 현재, 독일의 EU 구제금융 지원 참여 합헌 판결
'11.9.12	• 그리스 정부, 추가 긴축안 발표
'11.9.14	• 독일 및 프랑스, 그리스 유로존 잔류 및 추가지원 재확인
'11.10.2	• 그리스 내각, 2012년도 예산안 초안 승인
'11.10.21	• EU 재무장관회담에서 그리스 6차분 구제금융 58억유로 지급에 합의
'11.10.23	•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국제손실률을 기존 21%에서 상향조정 추진
'11.11.18	• 그리스 정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
'11.12.5	• IMF, 그리스 6차분 구제금융 22억유로 집행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6차분 자금 80억유로 지원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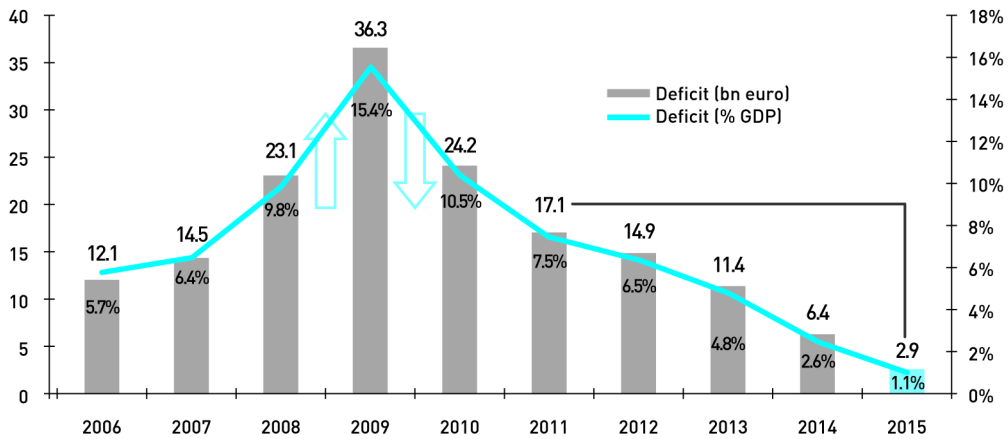
## SECTION 2 >>

□ 그리스 의회, 2012-15년 중기재정계획 승인(2011.6.29)

○ 2011년 6월 8일 그리스 의회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은 2011-15년 5년간 283억유로 규모(GDP의 12%)의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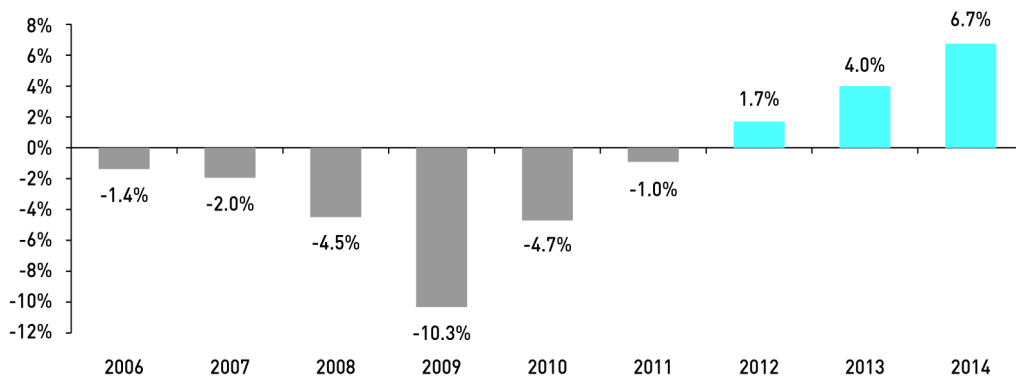
-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그리스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GDP 대비 7.5%에서 2014년 2.6%로 감소할 예정
-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1년 -1.0%에서 2014년 6.7%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림 2-IV-1] 2006-201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자료: 그리스 재무부, Greece: Medium-term fiscal strategy 2012-15, 2011.6

[그림 2-IV-2]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



자료: 그리스 재무부, Greece: Medium-term fiscal strategy 2012-15, 2011.6

- 중기재정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조기집행(front-loading)을 계획
  - 2011년 65억유로 규모(GDP의 2.9%)의 재정건전화(전체 규모의 23.1%)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68억유로(GDP의 3.0%)로 총규모의 24.0%에 해당
  - 2013년은 52억유로 규모(GDP의 2.2%)로 총규모의 18.5%를 차지하며, 2014년의 경우 54억유로 규모(GDP의 2.2%)로 총규모의 19.3%에 해당
  - 이는 2015년 43억유로 규모(GDP의 1.7%)로 감소
- 그리스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이 148억유로(GDP의 6.3%) 감소하고, 재정수입은 134억유로(GDP의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GDP의 51.4%를 차지하던 재정지출은 중기재정계획 하에 2015년 GDP의 44.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SECTION 2 >>

〈표 2-IV-2〉 일반정부적자(기준선 시나리오 및 중기재정계획)

	As % of GDP									
	2011		2012		2013		2014		2015	
	B.S.	MTFS	B.S.	MTFS	B.S.	MTFS	B.S.	MTFS	B.S.	MTFS
<b>Total Revenue</b>	<b>40,9</b>	<b>42,6</b>	<b>40,5</b>	<b>43,7</b>	<b>39,5</b>	<b>43,5</b>	<b>38,5</b>	<b>43,5</b>	<b>37,6</b>	<b>43,2</b>
Indirect taxes	12,2	12,7	12,3	13,3	12,2	13,3	12,0	13,3	11,9	13,2
Direct taxes	7,0	7,5	6,2	7,6	6,1	7,8	6,0	8,0	5,9	8,2
Social contributions	9,5	9,9	9,6	10,1	9,2	10,0	9,3	10,5	9,2	10,5
Transfers received	2,1	2,1	2,1	2,1	2,2	2,2	1,6	1,6	1,5	1,5
Sales of Goods & Services	1,0	1,0	1,1	1,1	0,9	1,0	0,9	1,0	0,8	0,9
Return on assets (incl. interest)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Other revenues	8,6	8,8	8,5	8,8	8,2	8,6	8,1	8,5	7,7	8,2
<b>Total Expenditure</b>	<b>51,4</b>	<b>50,0</b>	<b>52,6</b>	<b>49,7</b>	<b>52,6</b>	<b>48,2</b>	<b>52,3</b>	<b>46,4</b>	<b>52,0</b>	<b>44,8</b>
Compensation of Employees	9,5	9,1	9,0	8,2	8,5	7,7	8,1	7,0	7,8	6,6
Intermediate Consumption	5,2	4,9	4,9	4,4	4,7	3,9	4,8	3,6	4,2	3,0
Social Transfers (other than in kind)	24,0	23,6	24,1	23,1	23,4	21,9	22,6	20,8	21,9	20,0
Interest	6,5	6,5	7,8	7,6	9,2	8,4	10,6	9,1	11,8	9,3
Other Current Expenditure	1,4	1,3	1,5	1,4	1,4	1,3	1,4	1,3	1,3	1,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3,6	3,3	3,6	3,4	3,6	3,4	3,5	3,2	3,3	3,1
Other capital expenditure	1,1	1,1	1,1	1,1	1,3	1,2	0,8	0,7	0,9	0,9
Unallocated Reserve	0,3	0,3	0,7	0,6	0,6	0,6	0,7	0,6	0,7	0,7
Measures to be finalized		0,0		0,1		0,3		0,4		0,5
<b>General Government Accrual Balance</b>	<b>-10,5</b>	<b>-7,4</b>	<b>-12,0</b>	<b>-5,9</b>	<b>-13,1</b>	<b>-4,4</b>	<b>-13,8</b>	<b>-2,5</b>	<b>-14,4</b>	<b>-1,1</b>
	In bn euros									
	2011		2012		2013		2014		2015	
	B.S.	MTFS	B.S.	MTFS	B.S.	MTFS	B.S.	MTFS	B.S.	MTFS
<b>Total Revenue</b>	<b>92.291</b>	<b>95.972</b>	<b>92.606</b>	<b>99.754</b>	<b>93.013</b>	<b>102.463</b>	<b>93.430</b>	<b>105.616</b>	<b>94.707</b>	<b>108.672</b>
Indirect taxes	27.469	28.569	28.104	30.294	28.663	31.293	29.243	32.353	29.861	33.341
Direct taxes	15.703	17.003	14.247	17.440	14.406	18.425	14.632	19.441	14.917	20.600
Social contributions	21.505	22.272	21.992	23.096	21.759	23.560	22.583	25.488	23.130	26.371
Transfers received	4.783	4.783	4.885	4.871	5.115	5.102	3.774	3.766	3.710	3.704
Sales of Goods & Services	2.163	2.163	2.465	2.518	2.220	2.409	2.113	2.442	2.026	2.371
Return on assets (incl. interest)	1.365	1.365	1.419	1.419	1.424	1.424	1.519	1.519	1.559	1.559
Other revenues	19.304	19.818	19.495	20.117	19.427	20.250	19.565	20.606	19.504	20.726
<b>Total Expenditure</b>	<b>115.844</b>	<b>112.659</b>	<b>120.105</b>	<b>113.610</b>	<b>123.923</b>	<b>113.550</b>	<b>127.025</b>	<b>112.810</b>	<b>130.890</b>	<b>112.934</b>
Compensation of Employees	21.444	20.583	20.459	18.699	20.054	17.774	19.783	17.101	19.553	16.689
Intermediate Consumption	11.626	10.990	11.235	9.955	10.997	9.124	11.577	8.841	10.689	7.465
Social Transfers (other than in kind)	54.089	53.219	54.998	52.703	55.056	51.536	54.816	50.464	55.212	50.460
Interest	14.544	14.544	17.856	17.456	21.705	19.805	25.754	22.154	29.660	23.460
Other Current Expenditure	3.110	3.010	3.333	3.163	3.285	3.114	3.340	3.169	3.293	3.12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8.037	7.337	8.250	7.750	8.400	7.900	8.400	7.807	8.400	7.689
Other capital expenditure	2.414	2.395	2.513	2.424	2.967	2.836	1.851	1.769	2.313	2.279
Unallocated Reserve	580	580	1.460	1.460	1.460	1.460	1.505	1.505	1.770	1.770
Measures to be finalized		9		286		691		1.237		1.371
<b>General Government Accrual Balance</b>	<b>-23.552</b>	<b>-16.678</b>	<b>-27.499</b>	<b>-13.571</b>	<b>-30.910</b>	<b>-10.396</b>	<b>-33.595</b>	<b>-9.557</b>	<b>-36.183</b>	<b>-2.891</b>
GDP (in bn euros)	225.400	225.400	228.400	228.400	235.500	235.500	242.900	242.900	251.900	251.900

- 재정수입은 2011년 GDP의 40.9%에서 중기재정계획 하에 2015년 GDP의 4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확대는 직접세수 확대(2011년 GDP의 7.0% → 2015년 GDP의 8.2%), 간접세수 확대(2011년 GDP의 12.2% → 2015년 GDP의 13.2%) 및 사회보장기금 증가(2011년 GDP의 9.5% → 2015년 GDP의 10.5%)에 기인
  - 이외에도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2013” 시행으로 인한 조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에 기인
-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목표는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임금법 합리화, 공공부문 규모 축소, 의료 및 제약부문 지출규제, 사회보장비용 축소, 사회보장기금 수입 확대 및 기여금 탈루(contribution evasion) 감소, 과세기반 확대 및 조세감면 축소, 조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가 주요 내용임
  - (공공부문 임금법 합리화: GDP의 0.9%)
    - 2011-15년 사이 공공부문 인력을 15만명 축소(전체 노동인력의 20%), 주 근로 시간 연장, 계약직 축소, 새로운 수당기준 시행, 파트타임 고용 및 무급휴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부문 규모 축소: GDP의 2.4%)
    - 공공기관 통폐합, 보조금 및 운영경비 감축(GDP의 0.5%), 국유사업 구조조정(GDP의 0.6%), 국방비 삭감(GDP의 0.5%), 공공투자예산 감축(GDP의 0.2%), 지방정부 재정운영 개선(GDP의 0.6%)을 포함
  - (의료비용 및 약제비 규제: GDP의 0.7%)
    - 병원의 인터넷구매조달 체계 도입, 비보험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축소 및 의료비용 일반화를 통한 공공의료비용의 합리화(GDP의 0.3%)
    - 사회보장기금이 지원하는 약제비 표준가격, 약가결정 제도 개선, 전자처방전 체계의 전반적 시행을 통한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GDP의 0.4%)
  - (사회보장비용 축소: GDP의 1.9%)
    - 2015년까지 추가적인 연금규모 조정 및 동결, 연금급여(pension benefits)범위 기준과 수급자정보 대조 검토, 퇴직금 일괄지급 축소, 장애인연금체계 개혁, 실업수당 소득심사,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의 합리화를 포함

- (사회보장기금 수입 확대 및 기여 회피 감소: GDP의 1.3%)
  -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실업자의 기여금을 부담토록 하는 연대기금의 도입을 통해 미신고 고용 및 기여 회피를 감소
- (과세기반 확대 및 조세감면 축소: GDP의 2.4%)
  - 부가가치세율 및 재산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연대기금 도입
- (조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 GDP의 1.2%)
  -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2013”을 시행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및 소비세의 조세납부 성실성을 개선, 이를 통해 관련수입을 증가 시킴
- 이외에도 중기재정계획은 민영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의 공공부채를 감축하고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수렴하며, 그리스 경제의 핵심 부문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그리스 경기 회복을 도모함
  - 민영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산가치는 500억유로 이상이며, 민영화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를 GDP의 20%p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민영화를 통해 50억유로, 2012년까지 150억유로, 2015년까지 500억유로 재정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
  - 민영화 프로그램 해당 자산은 국유기업, 국유은행, 공항, 항구, 고속도로 등 공공 인프라의 주식, 독점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
  - 민영화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화기구(Privatization Agency)를 개설할 예정인데, 이 기관은 이전된 자산(transferred asset)의 유일한 주주 역할을 할 것
    - 동 기관은 우세한 시장조건일 때 자산을 민영화할 권한을 가지며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자산을 정부로 이전할 수 없음
    - 이를 통한 수익금은 분기별로 정부로 이전되어 공공부채 감축에 사용될 예정
    - 동 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6년 동안 그리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에서 지정한 이사회를 통해 관리될 예정

- 그리스 내각, 2012년도 예산안 초안 승인 (2011.10.2)
  - 그리스 정부는 예상보다 큰 경기침체를 이유로 재정상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목표한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5.5%와 -2.5%로 후퇴할 것이라 전망
    - 2013년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2011년 그리스 재정적자를 GDP 대비 8.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전망치는 GDP 대비 6.8%로 예상
  - 그리스는 예산안을 통해 2011-2015년 5년간 284억유로에 해당하는 재정건전화를 감행할 예정인데, 이 중 67억유로는 2011년에 조기 집행될 예정
    - 2011년 조기집행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침체가 심각한 데에 기인
  
- 그리스 정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2011.11.18)
  - (경제전망)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5%와 -2.8%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원안에 비해 하향 조정된 수치임
  - (재정전망) 2011년 그리스 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8.5%에서 -9.0%로 하향조정한 반면, 내년 재정수지 전망치는 민간채권단의 국채손실률(PSI) 확대를 반영하여 당초 GDP 대비 -6.8%보다 개선된 -5.4%로 조정
    -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PSI) 효과를 제외하면 내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국채손실률을 21%에서 50%로 확대한 PSI 효과가 수정안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줌

〈표 2-IV-3〉 그리스 수정예산안

In EUR billion (unless otherwise stated)	2010	2011		2012		2011/10	2012/11
	Realised	MTFS	expected	MTFS	expected	YoY %	YoY %
<b>Central Government Budget</b>							
<b>Ordinary Budget</b>							
A. Ordinary budget revenue (A1+A2+B+C)	56,178	57,842	56,309	59,926	58,235	0.2%	3.4%
a. Direct tax revenue (a1+a2)	20,223	20,554	20,619	21,711	24,213	2.0%	17.4%
a1. Income tax revenue	14,287	12,656	12,779	14,860	14,382	-10.6%	12.5%
a2. Property & other (direct) tax revenue	5,936	7,898	7,840	6,851	9,831	32.1%	25.4%
b. Indirect tax revenue (b.1+b.2+b.3)	31,042	30,219	29,083	31,243	29,088	-6.3%	0.0%
b.1 Transaction tax revenue (b1.1+b1.2)	18,495	18,372	17,855	19,160	17,608	-3.5%	-1.4%
b1.1 VAT (fuels, tobacco, other)	17,374	17,361	16,900	17,997	16,560	-2.7%	-2.0%
b1.2 Other transaction tax	1,121	1,011	955	1,163	1,048	-14.8%	9.7%
b.2 consumption tax	11,822	10,813	10,395	11,198	10,629	-12.1%	2.3%
b.3. Other indirect tax	725	1,034	833	885	851	14.9%	2.2%
A1. Total tax revenue (a+b)	51,265	50,773	49,702	52,954	53,301	-3.1%	7.1%
A2. Total non-tax revenue (EU transfers & other)	3,115	4,029	3,625	4,314	2,591	16.3%	-28.5%
B. Non-ordinary revenue	1,798	2,250	1,926	2,258	2,113	7.1%	9.7%
C. Other revenue		790	1,056	400	230		-78.2%
D. Tax returns	5,322	3,800	5,000	3,697	3,800	-6.0%	-24.0%
E. Ordinary budget net revenue (A-D)	50,856	54,042	51,309	56,229	54,435	0.9%	6.1%
F. Ordinary budget expenditure (Z+H+I+G+K)	66,787	71,471	70,742	71,071	64,857	5.9%	-8.3%
Z. primary expenditure (z1+z2+z3+z4+z5)	52,180	52,050	51,830	50,669	49,085	-0.7%	-5.3%
z1. Salaries & pensions	20,309	19,914	20,087	19,296	19,415	-1.1%	-3.3%
z2. Other benefits	1,602	1,399	1,420	1,242	882	-11.4%	-37.9%
z3. Operating & other expenditure	2,972	2,667	2,590	2,518	2,545	-12.9%	-1.7%
z4. Social transfers (other than transfers to hospitals for the settlement of old debts)	17,485	18,660	18,788	16,531	17,173	7.5%	-8.6%
z5. Other primary expenditure	9,812	9,410	8,945	11,082	9,070	-8.8%	1.4%
H. Transfers to hospitals for the settlement of old debts	367	450	450	350	400	22.6%	-11.1%
I. Military expenditure (on a cash basis)	1,017	1,500	600	1,500	1,000	-41.0%	66.7%
G. State guarantees called		1,469	1,481	1,652	1,623		9.6%
K. Interest payments	13,223	16,002	16,380	16,900	12,750	23.9%	-22.2%
1. Ordinary budget balance (E-F)	-15,930	-17,428	-19,432	-14,842	-10,424	22.0%	-46.4%
<b>Public Investment Budget (PIB)</b>							
L. PIB revenue	3,072	3,925	3,364	4,615	4,750	9.5%	41.2%
M. PIB expenditure	8,454	7,550	6,890	7,700	7,700	-18.5%	11.8%
2. PIB balance (L-M)	-5,382	-3,625	-3,526	-3,085	-2,950	-34.5%	-16.3%
Central Government Balance (1-2)	-21,312	-21,053	-22,958	-17,927	-13,374	7.7%	-41.8%
Central Government Balance (ppt-of-GDP)	-9.4%	-9.3%	-10.5%	-7.8%	-6.3%		
<b>General Government Budget - ESA 95</b>							
3. General Government Balance	-24,125	-16,360	-19,683	-12,872	-11,427	-18.4%	-41.9%
General Government Balance (ppt-of-GDP)	-10.6%	-7.3%	-9.0%	-5.6%	-5.4%		
3.1 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10,623	-801	-3,925	5,628	2,423		
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ppt-of-GDP)	-4.7%	-0.4%	-1.8%	2.5%	1.1%		
Nominal GDP (EUR bn)	227,318	225,400	217,771	228,400	212,544		

Source: MoF, Eurobank EFG Research

## V 이탈리아

〈표 2-V-1〉 이탈리아 위기 일지

일자	주요내용
'11.4.13	• 이탈리아 내각, 중기재정계획(DEF) 승인
'11.4.28	• 이탈리아 의회, 중기재정계획(DEF) 최종승인
'11.7.15	• 이탈리아 의회,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48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 승인
'11.8.05	• 베를루스코니, 주가급락 및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
'11.8.08	•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 국채매입 시작
'11.9.06	• 이탈리아 노동연맹 CGIL, 재정긴축안에 항의
'11.9.14	• 이탈리아 의회,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540억유로 규모(2014년까지 600억유로)의 재정긴축안 승인
'11.9.20	•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A'로 한단계 강등 •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 의회 제출
'11.10.05	• 무디스, 이탈리아 신용등급 'A2'로 한단계 강등
'11.10.15	• 예산법안 및 안정법안 작성 및 의회 제출
'11.10.18	• S&P, 이탈리아 24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
'11.10.26	• 베를루스코니, EU 정상회의에서 국유자산 매각, 노동시장 개혁, 정년연장 상향 조정 등 약속
'11.11.01	• 밀라노 증시 6.8% 폭락,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11.11.03	• 이탈리아 정부, 전면적 경제개혁안에서 후퇴한 수정안 채택
'11.11.05	• 로마에서 수만명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요구 시위
'11.11.08	• 베를루스코니 총리, 경제개혁안 의회 통과후 사임의사 표명
'11.11.09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7% 돌파,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
'11.11.13	• 이탈리아 대통령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마리오몬티 새 총리로 지명
'11.11.24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7% 재돌파
'11.12.04	• 마리오 몬티 총리, 300억유로 규모 경제개혁안 발표
'11.12.16	• 이탈리아 의회, 300억유로 규모 재정긴축안 가결

□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 채택으로 인해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총 28억유로, 2012년 283억유로, 2013년 543억유로, 2014년까지 598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 SECTION 2 >>>

### 전망

- 두 법안의 재정수입 확대 방안 중 주요 골자는 현 조세지출 및 복리후생(welfare benefits)을 축소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조세지출 및 조세감면은 2012년 5%, 20% 정도 감소할 예정
  - 이를 통한 조세수입은 2012년 40억유로, 2013년 160억유로, 2014년 200억 유로에 달할 전망
  - 2012년 9월 30일까지 복지지출 재조정, 조세감면 폐지 및 축소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중복 적용되지 않을 예정
- 재정지출 축소방안은 정부 각 부처 보조금 삭감, 지자체 계획 축소 및 복지 관련 계획 축소가 주된 내용임
  - 각 부처 예산관련 지출 감축은 2012년 70억유로, 2013년 60억유로, 2014년 50억유로에 달할 전망
  - 복지 관련 지출감축은 2012년 10억유로, 2013년 35억유로, 2014년 33억유로에 달할 전망

〈표 2-V-2〉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이 일반정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2011	2012	2013	2014
Revenues variation	2,603	20,676	35,406	38,816
Higher revenues	2,797	21,366	36,053	40,186
- of which: cut in tax expenditures and welfare benefits	0	4,000	16,000	20,000
Lower revenues	194	689	646	1,370
Expenditure variation	-237	-7,599	-18,859	-20,978
Higher expenditure	1,733	6,134	1,428	1,836
<i>current</i>	1,103	5,484	478	486
<i>Capital</i>	630	650	950	1,350
Lower expenditure	1,970	13,733	20,287	22,814
<i>current</i>	937	6,596	11,698	15,274
<i>Capital</i>	1,033	7,137	8,589	7,541
Net borrowing reduction	2,840	28,275	54,265	59,795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 이외에도 두 법안 모두 탈세 감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무조사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
  - 셸컴퍼니(shell company)를 통제하는 규정 점검
  - 통계기반 과세평가(tax assessment) 강화 및 탈세자와 담당변호사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법정문서에 기재하도록 요구
  - 부가가치세 유발 거래를 조세당국(Italian Revenue Agency)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조항 마련
  - 금융감독을 보험부문까지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
  - 탈세과징금 강화

□ 이탈리아 의회, 긴축예산안 n.111/2011 승인(2011.7.15)

- 긴축예산안 n.111/2011 채택으로 인해 이탈리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총 21억유로, 2012년 56억유로, 2013년 244억유로, 2014년까지 480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수입 확대)
  - Security deposit account에 부과하는 인지세 인상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IRAP<sup>1)</sup>율 인상
  - 소비세 인상
  - 조세행정 관련 절차 간소화
  - 담배상품 관련 소비세 인상 및 도박(gaming)관련 재정수입 증가
  - 조세지출 및 복리후생 축소
- (재정지출 축소)
  - 복지지출 능률화를 통한 재정보호는 2013년 25억유로, 2014년 50억유로에 달할 전망
    - 각 지출 분야별 재정절감 비율은 2012년 4월 30일 주·지방당국 협정에 의해 정해질 예정

1) 생산활동에 부과되는 지방세

## SECTION 2 >>>

〈표 2-V-3〉 긴축예산안 n.111/2011이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2011	2012	2013	2014
<b>FREEING FUNDS</b>	<b>4,028</b>	<b>10,162</b>	<b>26,268</b>	<b>50,857</b>
Higher revenues	2,065	7,083	13,807	29,540
Higher stamp duty on deposit accounts	725	1,323	3,800	2,525
Increase in excise duties	0	2,092	2,002	2,041
IRAP 0.75 p.p. increase on banks and 2 p.p. on insurance companies	0	912	493	493
Revision of depreciation coefficients	0	0	0	1,312
Abolition of the guarantee requirement for entities making tax claim	0	300	400	400
Change of art. 84 TUIR – Carry over of losses	0	471	269	269
Regulations on self-assessment	0	95	362	375
Streamlining of tax credit privileges	0	200	300	300
Streamlining of processes for imposing sanctions	0	137	137	137
Report of VAT transactions through credi cards, debit cards and pre-paid cards	0	175	188	150
Mediation and easier terms for unsettled tax disputes	113	78	103	103
Streamlining and strengthening of financial investigations	0	100	100	100
Regulation on social security number in court records	0	45	358	341
Depreciation of goods given away for free	0	282	93	71
Revenues from gaming	443	481	501	501
Realignment of tax basis and balance sheet figures relating to intangible assets	544	0	0	0
Fewer burdens for artisan firms	0	0	297	0
Cut in tax expenditures and welfare benefits	0	0	4,000	20,000
OTHER	241	392	405	422
<b>USE OF FUNDS</b>	<b>1,920</b>	<b>4,584</b>	<b>1,862</b>	<b>2,885</b>
Lower expenditure	1,963	3,079	12,461	21,317
Cut in ministries' budgets	0	1,000	3,500	5,000
Linear cuts in ministries (broadband auction)	1,700	400	300	0
Domestic stability pact	0	0	3,200	6,400
Streamlining health expenditure	0	0	2,500	5,000
Action on welfare	0	611	1,363	1,880
Reduction from three to two years of administrative lapse of expenditure arrears	0	500	500	500
Road infrastructure fund	0	250	500	800
Reallocation of various funds	150	252	392	492
Regulations on public sector employees	0	0	64	1,104
OTHER	114	66	142	142
<b>IMPACT ON PRIMARY BALANCE</b>	<b>2,108</b>	<b>5,578</b>	<b>24,406</b>	<b>47,972</b>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 이탈리아 의회, 긴축예산안 Decree Law no. 148/2011 승인 (2011.9.14)

○ 동 법안은 2011년 8월 13일 Decree Law no.138/2011로 채택되었고, 9월 14일 Decree

Law no. 148/2011로 의회에서 최종승인되었음

- 이탈리아는 동 법안을 통해 201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함
  - 이는 당초 중기재정계획(DEF) 목표인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1년 앞당긴 것
- 이탈리아의 경제전망은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중기재정계획 시점보다 악화
  - (경제전망) 동 긴축안은 2011년 이탈리아 GDP 성장률을 0.7%, 2012년 0.6%, 2013년 0.9%, 2014년 1.4%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재정계획보다 전체적으로 전망치가 약 2%p 감소한 수치
-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까지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혁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4년까지 총 200억유로 규모의 조세지출 및 복지혜택 감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safeguard clause<sup>2)</sup>)

<표 2-V-4> 긴축예산안 n.148/2011이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2011	2012	2013	2014
<b>FREEING OF FUNDS</b>	<b>739</b>	<b>24,937</b>	<b>30,072</b>	<b>12,143</b>
Higher revenues	732	14,283	22,246	10,646
Cut in tax expenditures and welfare benefits	0	4,000	12,000	0
Solidarity contribution for incomes above € 300,000	0	269	269	269
VAT increase (from 20% to 21%)	700	4,236	4,236	4,236
Delegation on gaming revenues and excise duties on tobacco	0	1,500	1,500	1,500
Financial income	0	1,421	1,534	1,915
Self assessment	32	330	231	231
Application of regulations governing front companies to firms consistently making a loss	0	170	226	226
Report to tax authorities by financial operators	0	186	611	715
Criminal regulations	0	210	458	408
IRES surcharge on energy companies	0	1,800	900	900
OTHER	0	161	282	246
Lower expenditure	7	10,654	7,826	1,497
Cut in ministries' budgets	0	6,000	2,500	0
Domestic stability pact	0	4,200	3,200	0
Action on welfare	0	430	2,096	1,497
OTHER	7	24	30	0
<b>USE OF FUNDS</b>	<b>7</b>	<b>2,239</b>	<b>213</b>	<b>321</b>
Lower revenues	0	215	125	125
Tax deductibility of solidarity contribution for incomes above € 300,000	0	-215	-125	-125
Higher expenditure	7	2,024	88	196
ISPE Fund	0	2,000	0	0
Regulations on utilities owned by local authorities	0	0	50	150
OTHER	7	24	38	46
<b>IMPACT ON PRIMARY BALANCE</b>	<b>732</b>	<b>22,698</b>	<b>29,859</b>	<b>11,822</b>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2) 이탈리아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긴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 제시

- (재정수입 확대)
  - 부가가치세율을 1%p 인상(현행 20%→21%로 상향조정)
  - 금융소득 과세 재조정
  - 에너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현행 6.5%→10.5%)
- (재정지출 축소)
  - 민간부문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2014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며, 2026년 까지 남성근로자의 수준으로 조정
  - 2013년부터 기대수명 변화를 반영한 정년이 자동적으로 적용

- 중기재정계획(DEF) 최종수정안을 의회제출 (2011.9.20)
  - 2011년 4월 의회에서 승인된 중기재정계획(DEF)의 최종수정안으로 경제 및 재정전망이 일부 조정되었음
  - (경제전망)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에서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 2011년 GDP 성장률은 1.1% → 0.7%, 2014년 1.6% → 1.2%로 4년 모두 하향조정
    - 이러한 경제 둔화는 세계경제 악화라는 외부요인과 이탈리아 내에서 시행된 긴축 법안이 공공재정에 미친 영향 등 내부요인에 기인

〈표 2-V-5〉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경제전망 비교

(단위: %)

연도	중기재정계획(2011년 4월)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2011년 9월)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1.1	1.3	1.5	1.6	0.7	0.6	0.9	1.2

자료: Nota di Aggiornamento de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1,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 (재정전망)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1년 4월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채무 수준이 감소

하지 않은 것은 아직 긴축예산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자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

〈표 2-V-6〉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재정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구조적 예산수지 (Saldo di bilancio strutturale)	-3.0	-2.8	-2.2	-0.6	-1.4	0.6	-0.5	0.5
순차입 (Indebitamento netto)	-3.9	-3.9	-2.7	-1.6	-1.5	-0.1	-0.2	0.2
기초재정흑자 (di cuiAvanzo primario)	0.9	0.9	2.4	3.7	3.9	5.4	5.5	5.7
이자지출 (Spesa per interessi)	4.8	4.8	5.1	5.3	5.4	5.5	5.6	5.5
산출갭	-1.9	-2.5	-1.1	-2.1	-0.3	-1.5	0.5	-0.8
공공채무 (Debito pubblico)	120.0	120.6	119.4	119.5	116.9	116.4	112.8	112.6

자료: Nota di Aggiornamento de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1,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VI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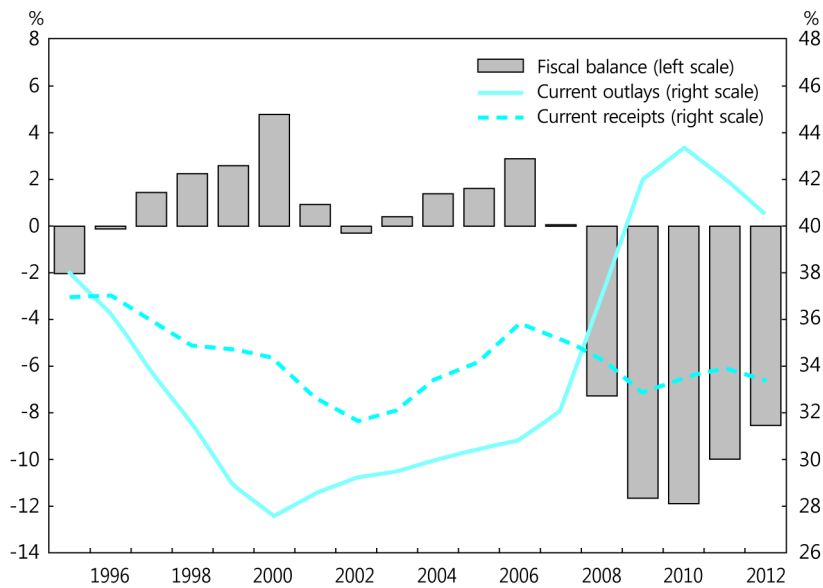
〈표 2-VI-1〉 아일랜드 재정위기 주요 일지

날짜	주요사건
'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계획 발표(국가채무 '07년 24.8% → '08년 41%)</li> <li>• 70억유로 규모의 은행구제 금융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9월 은행 대규모 보증제공정책이 불충분하여 추가 구제안 발표</li> </ul> </li> </ul>
'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33억유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math>\Delta</math>10.75%, 부채는 59%</li> </ul> </li> <li>•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국영 자산관리공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과 '11년에 추가로 정부지출을 각각 22.5억, 30억유로 삭감 계획</li> </ul> </li> </ul>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연금제도 개혁방안(National Pensions Framework)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고령화와 연금지출 증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전망: '08년 GDP 대비 5.5% → '50년 15%</li> </ul> </li> <li>-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현 65세 → 2021년 67세 → 2028년 68세)과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 기간 연장(현 5년 → 10년) 등을 주 내용으로 함</li> </ul> </li> </ul>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금융시스템 정상화 및 은행구제를 위한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관리공사는 주요 5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의 핵심 자기자 본비율의 목표치를 8%로 설정</li> <li>- 주요 은행별로 구제 금융을 제공함</li> </ul> </li> </ul>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li> <li>•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1 내지 2 단계 등급 강등(예: 무디스 Aa1 → Aa2)</li> </ul>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에 대한 EU/IMF 지원으로 위기가 안정되는 듯하나, 9월 이후 재부각됨</li> <li>•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li> </ul>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이자율은 8.9%로 유로존 가입 후 최고치를 기록함</li> <li>• 총 850억유로의 IMF/EU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을 위해 2011~14년 동안 National Recovery Plan (중기재정계획)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간 실질 GDP 2.75% 증가 계획</li> <li>· 총 150억유로 규모의 적자감축 추진</li> <li>· 공무원 25,000명 감원, 사회보장지출 28억유로 감축, 조세지출 삭감 및 VAT의 단계적 인상 (현 21% → 2013년 22% → 2014년 23%)</li> </ul> </li> </ul> </li> </ul>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수익률이 사상최대치를 기록</li> <li>• 중앙은행은 금융회사가 총 240억유로 규모의 추가자본 확충이 필요함을 발표</li> </ul>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디스는 추가 구제금융의 위험을 우려해 Baa3 → Ba1로 1단계 강등(투자 부적격)</li> </ul>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Mid-term Fiscal Statement 2011~15발표</li> <li>•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구제금융자금 지급을 위해 30억유로 채권 발행 계획</li> </ul>

## 1. 위기의 배경

- 아일랜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부실 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재정수지 악화
  - 재정수지는 위기 전까지는 흑자였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2010년 GDP 대비 △ 11.9% 적자에 이룸(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포함 시 GDP 대비 △32%)

[그림 2-Ⅵ-1] 아일랜드 재정 수지 추이



Note: Fiscal balance excludes bank support measures of 2.5% of GDP in 2009 and 20.1% of GDP in 2010.  
1. Projection for 2011 and 2012.

Source: Ireland Stability Programme Update April 2011, Ireland Budget 2011; OECD Outlook database.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11년 11월

〈표 2-VI-2〉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urrent prices Billion EUR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8 prices)					
GDP at market prices	189.9	-3.0	-7.0	-0.4	1.2	1.0	2.4
Private consumption	90.6	-1.3	-7.3	-0.9	-2.5	-0.5	0.7
Government consumption	31.7	1.2	-3.7	-3.1	-3.4	-2.0	-4.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48.5	-10.4	-28.7	-24.9	-6.3	-3.3	1.2
Final domestic demand	170.8	-3.4	-11.7	-5.8	-3.3	-1.3	-0.4
Stock building <sup>1</sup>	1.7	-1.1	-0.9	1.0	1.1	-0.2	0.0
Total domestic demand	172.5	-4.6	-12.8	-4.7	-1.9	-1.5	-0.3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152.5	-1.1	-4.2	6.3	4.2	3.3	5.8
Imports goods and services	135.3	-2.9	-9.3	2.7	0.7	1.1	4.2
Net exports <sup>1</sup>	17.2	1.2	3.4	3.7	3.7	2.5	2.7
<i>Memorandum items</i>							
GDP deflator		-2.3	-4.1	-2.4	-0.2	1.4	1.0
Ha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index		3.1	-1.7	-1.6	1.3	0.9	1.2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3.0	-4.2	-2.2	1.2	1.0	1.3
Unemployment rate		6.0	11.7	13.5	14.2	14.2	13.9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3</sup>		-7.3	-11.7	-11.9	-10.0	-8.6	-6.5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sup>2,4</sup>		49.7	71.2	94.9	108.4	114.4	117.2
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5.6	-2.9	0.5	0.5	1.7	2.1

Note: National accounts are based on official chain-linked data. This introduces a discrepancy in the identity between real demand components and GDP. For further details see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http://www.oecd.org/eo/sources-and-methods>).

-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percentage of real GDP in previous year),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 As a percentage of GDP.
- Excludes the one-off impact of recapitalisation in the banking sector of 2.5% of GDP in 2009 and 20.1% in 2010. In 2011, it is assumed that until Eurostat makes a ruling that none of the funds injected into the banks by the government are a capital transfer and therefore they have no impact on the headline deficit.
- Maastricht Treaty Definition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주: 1) 일반정부의 재정수지(GDP 대비)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을 제외함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11년 11월

- 실업률은 2011년 5월 기준으로 14.1%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장기실업률<sup>3)</sup> 비중이 2007년 대비 20%p 이상 증가
  - 전체 실업에서 장기실업 비중이 2010년 4분기에는 50%를 넘어섬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에는 최고치인 117.2%를 기

3) 12개월 이상

록할 전망

※ (참고) 최근 아일랜드 재무부 발표 자료

- Medium-Term Fiscal Statement 2011년 11월 4일 발표
- Infrastructure and Capital Investment 2012-16 2011년 11월 10일 발표
- Public Service Reform 공공서비스 개혁 2011년 11월 17일 발표
- 2012년 예산 2011년 12월 7일 발표

## 2.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atement)

□ 2011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2011년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실질 GDP 증가율은 약 1% 예상
- (재정 전망) 2011년 재정적자(general government balance)는 159억유로(GDP 대비 10.3%)로 예상
  -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포함 시 재정적자(Exchequer deficit)는 254억유로로 전망

□ 2012~2015년 경제 및 재정 전망 (Economic and Budgetary Outlook)

- (경제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질GDP 기준으로 약 1.6% 달성 전망
  - 한편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둘 간의 이러한 간극이 경제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2-VI-3〉 각종 경제지표 전망

**Table 3.1: Macroeconomic Projections 2011-2015**

<i>% change, unless otherwise stated</i>	<b>2011</b>	<b>2012</b>	<b>2013</b>	<b>2014</b>	<b>2015</b>
Real GNP	0.4	1.0	1.7	2.3	2.3
Nominal GNP (rounded to nearest €25m)	126,450	128,525	132,100	136,850	142,050
Real GDP	1.0	1.6	2.4	3.0	3.0
Nominal GDP (rounded to nearest €25m)	155,250	158,875	164,525	171,600	179,400
<i>Components of Real GDP</i>					
Private Consumption	-2.5	-1.0	0.0	1.0	1.2
Government Consumption	-3.0	-2.2	-2.2	-2.3	-2.1
Investment	-11.0	-0.8	3.2	4.6	4.8
Change in Inventories (% of GDP)	0.2	0.3	0.3	0.3	0.2
Exports	4.6	3.8	4.5	4.8	4.8
Imports	1.6	1.9	2.8	3.4	3.5
BOP Current Account (% of GDP)	0.5	1.5	2.4	3.2	3.5
<i>Contributions to Real GDP Growth</i>					
Domestic Demand (excl. inventories)	-3.1	-1.0	0.0	0.6	0.7
Changes in Inventories	0.7	0.1	0.0	0.0	0.0
Net Exports	3.4	2.5	2.5	2.4	2.3
<i>Price Developments</i>					
HICP	1.2	1.2	1.5	1.6	1.8
GDP Deflator	-1.5	0.8	1.1	1.3	1.5
<i>Labour Market</i>					
Employment	-1.8	-0.2	0.8	1.2	1.6
Unemployment (% of labour force)	14.2	14.0	13.4	12.8	11.6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Note that rounding can affect totals

## ○ (재정 전망)

- 2012년 재정적자는 136억유로(GDP 대비 8.6%)로 전년 대비 24억유로 개선될 전망이며 2013년 124억유로(GDP 대비 7.5%), 2014년 86억유로(GDP 대비 5%), 2015년 51억유로(GDP 대비 2.9%)로 감소할 전망
- 향후 4년간 조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433억유로를 기록할 전망이나, 이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 38억유로 적은 수준

<표 2-VI-4> 재정 전망

**Table 3.2: Budgetary Forecasts 2011-2015**

€ millions	2011	2012	2013	2014	2015
<b>CURRENT BUDGET</b>					
<b>Expenditure</b>					
Gross Voted Current Expenditure	53,240	51,745	50,400	48,690	47,280
Non-Voted (Central Fund) Expenditure	6,815	9,255	9,785	10,670	11,065
<b>Gross Current Expenditure</b>	<b>60,055</b>	<b>61,000</b>	<b>60,185</b>	<b>59,360</b>	<b>58,345</b>
less Expenditure Receipts and Balances	11,355	11,165	11,240	11,560	11,835
<b>Net Current Expenditure</b>	<b>48,700</b>	<b>49,835</b>	<b>48,945</b>	<b>47,800</b>	<b>46,510</b>
<b>Receipts</b>					
Tax Revenue	34,450	36,260	38,860	41,465	43,325
Non-Tax Revenue	2,565	2,410	1,630	1,640	1,525
<b>Net Current Revenue</b>	<b>37,015</b>	<b>38,670</b>	<b>40,490</b>	<b>43,105</b>	<b>44,850</b>
<b>CURRENT BUDGET BALANCE</b>	<b>-11,685</b>	<b>-11,165</b>	<b>-8,455</b>	<b>-4,695</b>	<b>-1,660</b>
<b>CAPITAL BUDGET</b>					
<b>Expenditure</b>					
Gross Voted Capital	4,640	3,940	3,375	3,255	3,255
Non-Voted Expenditure	11,970	4,350	4,165	4,160	4,175
<b>Gross Capital Expenditure</b>	<b>16,610</b>	<b>8,290</b>	<b>7,540</b>	<b>7,415</b>	<b>7,430</b>
less Capital Receipts	335	345	345	320	320
<b>Net Capital Expenditure</b>	<b>16,275</b>	<b>7,945</b>	<b>7,195</b>	<b>7,095</b>	<b>7,110</b>
<b>Capital Resources</b>	<b>2,530</b>	<b>1,795</b>	<b>1,850</b>	<b>1,935</b>	<b>1,795</b>
<b>CAPITAL BUDGET BALANCE</b>	<b>-13,745</b>	<b>-6,150</b>	<b>-5,345</b>	<b>-5,160</b>	<b>-5,315</b>
<b>EXCHEQUER BALANCE</b>	<b>-25,430</b>	<b>-17,315</b>	<b>-13,800</b>	<b>-9,855</b>	<b>-6,975</b>
<b>GENERAL GOVERNMENT BALANCE</b>	<b>-15,950</b>	<b>-13,595</b>	<b>-12,400</b>	<b>-8,610</b>	<b>-5,125</b>
<i>% of GDP</i>	-10.3	-8.6	-7.5	-5.0	-2.9
<b>Nominal GDP (rounded to nearest €25m)</b>	<b>155,250</b>	<b>158,875</b>	<b>164,525</b>	<b>171,600</b>	<b>179,400</b>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 Reform  
 Figures rounded to nearest €5 million  
 Note that rounding can affect totals

**Notes to Table 3.2:**

1. The technical budgetary forecasts set out in the table above have been prepared largely on the basis of the consolidation as set out in April's SPU for the years 2012-2015.
2. The precise nature of the budgetary measures to be introduced will be set out in the coming weeks in a series of announcements which will be made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nd capital spending reviews and Budget 2012.
3. Government decisions with regard to the precise nature of measures will impact both the economic and budgetary forecasts set out in this document and revised forecasts will be prepared for Budget 2012, in light of those decisions but also in light of more up-to-date economic and budgetary data that becomes available over the coming weeks, most notably tax revenue collection data for the key month of November.

□ 재정건전화 (Budgetary Consolidation)

- 아일랜드는 2008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함
- 수입과 지출 간 큰 격차가 차입비용 인상을 유발하는 만큼 경제성장 및 대외신뢰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함

## SECTION 2 >>

- SGP 규율인 재정적자 GDP 대비 3%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2~2015년에 124억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함
  - 2010년 11월 EU/IMF 지원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201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2.8%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2년 38억유로 규모의 적자감축을 위해 16억유로의 조세수입 증가 및 22억유로의 지출삭감을 시행할 계획

〈표 2-VI-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규모

**Table 2.1 – Technical General Government Deficit Projections and Amount of Consolidation Required to Achieve Targets**

	2012	2013	2014	2015
		<i>% of GDP</i>		
General Government Deficit Target – <i>as set by ECOFIN Council</i>	8.6	7.5	5.1	2.9
Projected General Government Deficit	8.6	7.5	5.0	2.9
		<i>€ billions</i>		
Total Consolidation Amount	3.8	3.5	3.1	2.0
Expenditure	2.2	2.25	2.0	1.3
➤ <i>Current</i>	1.45	1.70	1.9	1.3
➤ <i>Capital</i>	0.75	0.55	0.1	0.0
Tax	1.6	1.25	1.1	0.7
➤ <i>New Measures</i>	1.0	0.95	0.9	0.4
➤ <i>Carry Forward</i>	0.6 <sup>5</sup>	0.30	0.2	0.3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Rounding may affect totals

### □ 세입 및 지출 계획

- (수입) 고용 증가를 위해 직접세율 인상보다는 간접세율을 활용할 계획
  - 2011년 예산에서 이미 소득세 인상하고 보편사회기여세(Universal Social Charge)를 도입한 바 있음<sup>4)</sup>
  - 따라서 2012년에는 직접세(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구제금융에 따른 감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세, VAT 등 간접세를 인상할 계획
- (지출)
  - 2012년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3. 2012년」 예산 참고

4) 보편사회기여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조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함

- 2012~2014년간 각 부처별 지출상한 설정 예정
-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Public Service Reform Programme)을 통해 행정 및 간접비용을 축소할 예정
  - 2015년 말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37,500명 감축하여 총 282,500명을 달성하여 250억유로의 인건비 (2008년 대비 15%) 절감 효과

### 3. 2012년 예산

- 2012년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2년 실질GDP 증가율은 1.3%로 전망
  - (재정전망) 201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Delta$ 8.6%로 예상
    - 이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2012년 목표를 달성할 전망
- 예산 기초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고용, 정부정책 개혁 등을 주요 기초로 삼고 있음
- 예산안 내용
  - (세입)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세(소득세)보다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대
    - (소득세) 개인소득세율과 소득구간 및 법인세율(12.5%)은 동결
    - (사회보장기여세) 저소득, 파트타임, 계절 근로자들의 면세 범위를 현행 연소득 4,004유로에서 10,036유로로 인상
    - (부가세) 표준세율은 21%→23%로 인상하되 관광부문의 경감세율(9%)은 동결
    - (소비세) 담배세 25센트 증가
    - (탄소세) 톤당 현행 15유로에서 20유로로 증가
    - (자본세) 자본취득세율(Capital Acquisition Tax)과 자본이득세율(Capital Gains Tax)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 SECTION 2 >>

- (세출) 2012년 지출은 작년 대비 19억유로 감소한 558억유로 달성 전망
  - 2012년 말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6,000명 감축하여 4억유로 절감
    - 2008~2015년간 공무원 인건비를 총 35억유로 절감 계획
  - (고용촉진기금, Labor Market Activation Fund) 특히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약 2천만유로를 지원하여 6,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부처별 지출상한) 중기재정계획에서 예고된 다년간 부처별 지출상한이 발표됨
    - 2012-14년 동안 총지출을 약 31억유로 감축할 예정인데 특히 사회보장(△12억 유로)과 보건지출(△2억 8천유로) 항목에서 많은 감축이 이뤄질 예정임

〈표 2-VI-6〉 2012-14년 부처별 지출상한

Table II.b Departmental Ceilings 2012-14	2012	2013 € million	2014
Agriculture, Food & the Marine	1,144	1,057	1,029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32	218	205
Children & Youth Affairs	400	382	373
Communication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Group	333	330	325
Defence Group	893	892	890
Education & Skills Group*	8,604	8,525	8,453
Environment, Community & Local Government	467	416	383
Finance	422	411	405
Foreign Affairs & Trade	724	733	719
Health	13,644	13,565	13,359
Jobs, Enterprise & Innovation	366	350	337
Justice & Equality	2,261	2,198	2,083
Public Expenditure & Reform	865	796	802
Social Protection	20,533	19,906	19,296
Taoiseach	156	153	139
Transport, Tourism & Sport	786	747	691
Contingency Expenditure	50	89	56
<i>Further savings required</i>		<i>180</i>	<i>830</i>
<b>Gross Current Expenditure</b>	<b>51,880</b>	<b>50,589</b>	<b>48,716</b>

출처: Comprehensive Expenditure Report 2012-14, 201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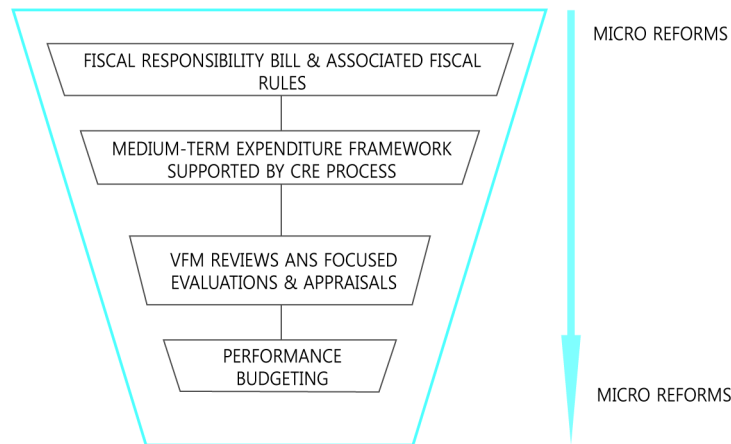
□ 주요 경제정책

- (경제성장 정책)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기업과 R&D을 지원하기 위해 총 51억 4천만유로 투자 계획
  - 건설과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의 인지세율(stamp duty)을 현행 6%에서 2%로 인하
  - 소액대출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계획을 위해 2천만유로 지원 예정

4. 예산 절차 개혁

-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예산 절차를 개혁할 계획임
  - 재정지출의 상한 설정 및 감시를 위해 예산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중임

[그림 2-Ⅵ-2] 예산개혁의 개요



-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Bill) 2011년 3월 재무부와 공공지출 및 개혁부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는 “Reforming Ireland’s Budgetary Framework” 문서에서 3개의 재정준칙(fiscal rule)을 제시함

- 재정시정규칙(Public Finances Correction Rule) : EU 협약에 따른 기준( 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 중 하나 혹은 두가지 모두 위반 시 매년 개선해야 할 기초재정수지(GDP 대비)의 규모를 제시함
  - 정부부채가 GDP 대비 90% 이상일 경우 매년 1.5%p를, 90% 이하일 경우 0.75%p를 개선해야 함
- 신중한 재정 준칙(Prudent Budget Rule) : 중기재정목표 달성 시까지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최소 GDP 대비 0.5%p씩 개선해야 함
- 지속가능한 지출증가율 규칙(Sustainable Expenditure Growth Rule): 경제 호황 시 지출을 제한하며 지출 증가 시 반드시 세수확대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중기지출계획,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향후 3년간 부처별 지출상한을 설정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지출효율성 평가, Value for Money Review) 기존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지출과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점수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여 평가제도의 표준화를 도모함
-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 VII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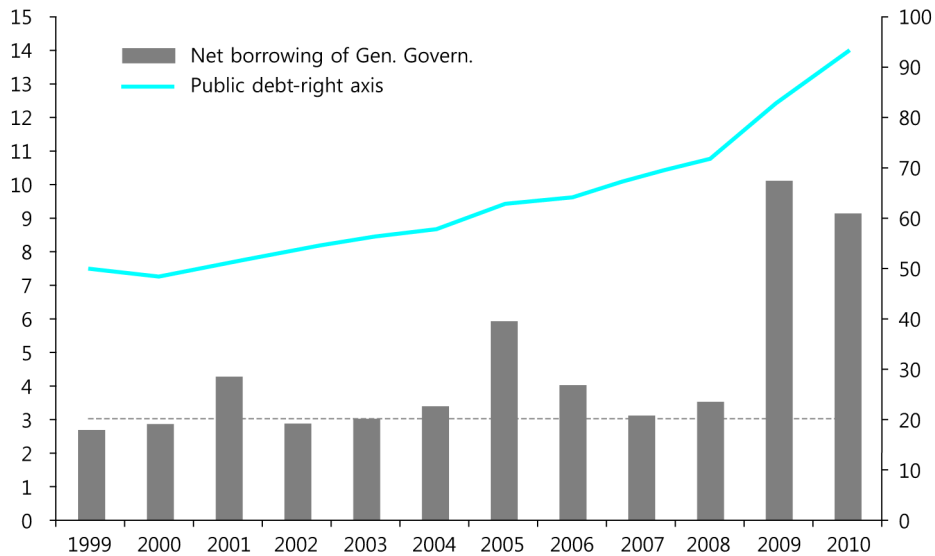
### □ 주요 일지

날짜	내용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임금 동결 및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의 과세 확대, 기업의 감세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li> </ul> </li> <li>의회는 감축안을 부결하고 일부 지자체의 부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li> </ul>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축재정안 의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42%→45%)</li> <li>주식시장의 자본이득이 연간 500유로 이상일 경우 20%의 자본이득세 부과</li> <li>소득공제 및 각종 보험 관련 공제혜택의 축소 및 폐지</li> <li>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 확대, 탈세의 예방방안 마련</li> </ul> </li> </ul>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의 긴축재정안 승인</li> </ul>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디스의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두 단계 강등 (Aa2→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건전화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등을 감안</li> </ul> </li> </ul>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li> </ul>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예산안 의회의 승인</li> </ul>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긴축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삭감 방안): 공공부문 5% 임금 삭감, 고속전철 건설 연기, 지방정부 재정지원 축소</li> <li>(세입 확대 방안): 부가가치세 2%p 인상(21%→23%), 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li> <li>(재정제도 개선): 다년도 지출상한 및 공약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독립 재정 자문위원회 설치, 공공투자 관련 사업 감독기구 설립 등</li> </ul> </li> <li>국채금리가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로 상승한 이후 ECB 매입으로 6.93%로 하락</li> </ul>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리스 위기로 국채이자율이 위험수준인 7%를 상회함</li> </ul>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추가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총리 사퇴</li> <li>주요 신용평가기관은 8개월 만에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예: 무디스 A1→Baa1 강등)</li> </ul>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IMF에 구제금융 신청</li> </ul>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르투갈 정부는 780억유로 규모의 IMF/EU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적자를 GDP 대비 2011년 5.9%, 2012년 4.5%, 2013년 3%로 감축</li> </ul> </li> </ul>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보너스에 대한 한시적 과세(2011년),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포함</li> </ul> </li> <li>무디스는 신용등급을 4단계(Baa1→Ba2)강등하여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함</li> </ul>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li> </ul>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는 2012년 예산안을 승인함</li> </ul>

## 1. 위기 배경

- 포르투갈의 위기는 취약한 경제구조와 저조한 성장률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부터 서서히 심화됨
  -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수지가 악화됨
  - 수입 의존적인 경제구조 또한 재정적자를 악화시킴
  
- 포르투갈의 재정 추이
  -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2009년부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함
    - 201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5.9\%$ , 국가채무는 100.8%를 기록할 전망

[그림 2-VII-1]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Sources: INE, Banco de Portugal and Ministry of Finance.

출처: Fiscal Strategy Document 2011-2015

## 2. 중기재정계획(Fiscal Strategy Document 2011–2015), 2011년 8월 발표

□ 주요 예측 및 전망

- (경제성장) 실질 GDP는 2011년  $\Delta 2.2\%$  2012년에는  $\Delta 1.8\%$ 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3년 이후 양(+)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2년 최고치 13.2%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표 2-VII-1>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 지표

	2010	2011 <sup>(p)</sup>	2012 <sup>(p)</sup>	2013 <sup>(p)</sup>	2014 <sup>(p)</sup>	2015 <sup>(p)</sup>
(rate of change, %)						
<b>GDP and expenditure components</b>						
GDP	1.3	-2.2	-1.8	1.2	2.5	2.2
Private Consumption	2.3	-4.4	-3.3	-0.7	0.8	0.8
Public Consumption	1.2	-3.2	-6.5	-4.0	-1.0	-2.1
Gross Fixed-Capital Formation	-4.9	-10.6	-5.6	3.9	4.1	3.0
Exports (Goods and Services)	8.8	6.2	6.4	6.5	6.4	6.3
Imports (Goods and Services)	5.1	-3.9	-1.3	1.6	2.8	2.7
<b>Price developments</b>						
GDP Deflator	1.1	1.4	1.4	1.3	1.3	1.4
CPI (a)	1.4	3.5	2.3	1.4	1.4	1.5
<b>Labour market variables</b>						
Employment growth	-1.5	-1.5	-1.0	0.3	1.0	1.1
Unemployment rate (%)	10.8	12.5	13.2	13.0	12.6	12.3
Labour productivity	2.9	-0.7	-0.8	0.9	1.4	1.1
<b>Balance of Current and Capital accounts</b>						
Net lending/borrowing vis-à-vis the rest of the world	-8.4	-6.8	-4.3	-2.7	-2.4	-1.2
- Current Account Balance	-9.8	-8.0	-5.7	-4.0	-3.5	-2.3
<i>of which Balance of Trade</i>	-10.0	-8.2	-6.6	-5.1	-4.0	-3.0
- Capital Account Balance	1.4	1.2	1.4	1.3	1.1	1.0

Key: (p) forecast;

Sources: INE and Ministry of Finance.

- (재정건전화)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기업(Stated Owned Enterprise) 개혁, 부문별 지출감소 및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자 함
  - (자원의 효율적 배분) 행정의 기능 및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축소 및 개선 계획(PREMAC)<sup>5)</sup>」을 실행하여 중복을 줄이고 운영비용을 크게 감소할 계획

5) Central Government Reduction and Improvement Plan

- 인력자원관리: 일반정부의 공무원 수 감소 및 임금 동결
  - 예산절차 개편 및 예산구조법(Budget Framework Law) 실행을 통해 지출삭감 노력
    - 예산구조법: 재정규칙, 다년도 예산 계획, 프로그램 예산,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및 독립재정자문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함
  - (공기업 개혁) 민영화 및 합병, 임금제도 개편, 부채 절감, 거버넌스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부문별 지출 감소) 교육, 과학, 국가보건서비스(NHS),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공공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지출 삭감 노력
  - (조세제도 개혁) 과세기반 확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세정(稅政)구조 개혁, 소득세 구조의 단순화 등을 실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 2012년에는 GDP 대비 4.6%, 2013년에는 GDP 대비 1.9%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함 (<표 2-VII-2> 참조)
- 지출삭감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동결,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 정부 운영비용 축소,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축소 등을 실시할 예정
  - 세수 확대를 위해 VAT세율 인상, 세액공제 감소,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등을 실시할 예정

<표 2-VII-2> 2012-13년간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및 규모

(단위: GDP 대비 %)

Direct effect in each year, compared to a no policy change scenario		
	2012	2013
	% of GDP	
<b>Reduction of expenditure</b>	3.0	1.4
<b>Compensation of employees</b>	0.4	0.2
Wage freezing in public administration.	0.2	0.2
Government and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sectoral measures of reductions in the number of hired.	0.2	0.0
<b>Social transfers</b>	0.6	0.1
Special contribution over pensions above €1500 with rules similar to the reduction of wage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2011.	0.2	0.0
Suspension of the rule of pensions' indexation, except for the update of lower pensions.	0.4	0.0
Savings in the social benefits through reinforcement of means testing condition and other eligibility rules.	0.1	0.1
<b>Social transfers in kind</b>	0.5	0.3
Reduction in public expenditure with health system, in the areas of medicine policy, user fees, public health systems and plans for hospitals restructuration	0.5	0.3
<b>Intermediate consumption</b>	0.7	0.4
Rationalisation of services and control of operating expenditure in General Government.	0.4	0.3
Deepening of the school network rationalization and increase in efficiency of supply.	0.2	0.1
Costs reduction in State Owned Enterprises	0.1	0.0
<b>Subsidies</b>	0.1	0.1
Costs reduction in State Owned Enterprises and in Autonomous Services and Funds: revision in the compensatory damages and operational costs.	0.1	0.1
<b>Other current expenditure</b>	0.1	0.1
Reduction in transfers to other subsectors of General Government	0.1	0.0
Reduction of social non-contributory benefits	0.0	0.1
<b>Investment</b>	0.6	0.2
Reduction in capital expenditure	0.2	0.2
Reduction in transfers to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0.1	0.0
Costs reduction in State Owned Enterprises	0.2	0.0
<b>Increasing of revenue</b>	1.6	0.4
<b>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b>	1.0	0.2
Rationalization of the VAT tax structure, including the change in VAT tax on electricity and gas.	0.7	0.0
Update of excise taxes.	0.1	0.1
Substantial reduction in tax allowances of Municipal Property Tax (IMI)	0.1	0.1
Reinforcement of the fight against tax fraude and evasion	0.1	0.0
<b>Taxes on income and wealth</b>	0.4	0.3
Revision and limitation of tax allowances and benefits both in PIT and CIT.	0.3	0.3
PIT Surcharge on 13th salary (measure implemented in 2011)	0.1	0.0
<b>Non-tax revenue</b>	0.1	0.0
Increasing in the European Union financing of projects in the education sector.	0.1	0.0
<b>Total</b>	<b>4.6</b>	<b>1.9</b>

Source: Ministry of Finance.

Note: The totals may not match the sum of the parts for reasons of rounding off.

## SECTION 2 >>

### □ 2011~2015년 중기 재정 전망

- 포르투갈은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2011년 5.8%, 2012년 4.5%, 2013년 3%를 달성해야 함
- 재정적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 중기목표(Medium-term Objective)를 달성하여 GDP 대비 0.5%를 기록할 전망

〈표 2-Ⅶ-3〉 2011~2015년 재정수지와 부채

(단위: GDP 대비 %)

	2011 (f)	2012 (f)	2013 (f)	2014 (f)	2015 (f)
Overall balance	-5.9	-4.5	-3.0	-1.8	-0.5
Primary balance	-1.7	0.4	2.1	3.3	4.5
Structural balance (a)	-6.2	-2.7	-1.6	-1.1	-0.5
Change in structural balance	4.5	3.5	1.1	0.4	0.7
Structural primary balance (a)	-2.0	2.1	3.5	3.9	4.6
Public debt	100.8	106.1	106.8	105.0	101.8

Source: Ministry of Finance.

Note: (a) Balance adjusted for cyclical effects and temporary measures.

### 3. 2012년 예산안(2011년 10월 발표)

-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이 10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승인됨
  -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반영하여 2012년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긴축기조 지속
    - 예산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5.9%(2011년 추정치)에서 4.5%로 축소 계획 (<표 2-VII-4> 참조)
  - 경제성장은 2011년  $\Delta 1.9\%$ , 2012년  $\Delta 2.8\%$ 를 기록할 전망

<표 2-VII-4>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지표

	2010	2011	2012
<b>GDP – Expenditure side</b>			
• PIB	1.4	-1.9	-2.8
- Private Consumption	2.3	-3.5	-4.8
- Public Consumption	1.3	-5.2	-6.2
- Investment (GFCF)	-4.9	-10.6	-9.5
- Exports	8.8	6.7	4.8
- Imports	5.1	-4.5	-4.3
<b>Evolution of Prices</b>			
• GDP deflator	1.1	1.0	1.7
• CPI	1.4	3.5	3.1
<b>Evolution of labour market</b>			
• Employment	-1.5	-1.5	-1.0
• Unemployment rate (%)	10.8	12.5	13.4
• Productivity	2.9	-0.3	-1.8
<b>Current and capital accounts balance (% GDP)</b>			
• Net external financing requirements	-8.4	-6.7	-2.5
- Current account balance	-9.7	-7.9	-3.9
- Of which Goods account balance	-10.0	-8.4	-5.5
- Capital account balance	1.4	1.2	1.4

출처: 2012 예산안, Price Waterhouse Cooper, 2011. 11. 재인용

- 예산안은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세법 개정, 조세지출 축소 등을 담고 있음
  - (법인세) 12,500유로 이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의 경감세율이 폐지되어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25% 일반세율을 적용

## SECTION 2 >>

- (개인소득세) 각종 소득세율이 인상됨
  - 연 과세소득이 153,3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2.5%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
  - 자본이득세율을 20% → 21.5%로 인상함
- (VAT) 일부 경감세율을 표준세율(23%)로 인상
  -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재화(탄산음료, 냉동음식, 스낵 등에 6%)와 용역(식당과 각종 문화활동 등에 13%)에 표준세율(23%)이 적용
- 소비세(excise tax) 신설
  - 전기 생산자, 거래자 및 구매자를 대상으로 메가와트당(전기소비량) 0~1유로의 소비세 부과 예정
- 소득세의 공제 축소
  - 개인이 건강비용 관련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에서 10%로 축소
  - 과세구간별로 세액공제 상한선을 도입하고 일부 고소득 구간에서 공제를 폐지

〈표 2-VII-5〉 2012년 변경되는 과세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단위: 유로, %)

과세 가능한 소득	세율	2011년(현행)	2012년(예산안)
~ 4,898	11.5	무제한	무제한
4,898 ~ 7,410	14	"	"
7,410 ~ 18,387	24.5	"	1,250
18,387 ~ 42,259	35.5	"	1,200
42,259 ~ 61,244	38	"	1,150
61,244 ~ 66,045	41.5	"	1,100
66,045 ~ 153,300	43.5	과세소득의 1.6666% (단, 1,100유로 미만)	0
153,000 ~	46.5	1,100 유로	0

출처: 2012 예산안, Price Waterhouse Cooper, 2011. 11, 재인용